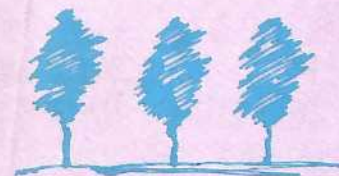


인권정보자료실
R1.1.4

인권하루소식

합본 IV 호
(제301~400호)



1995. 7

민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1996년 4월 10일

인권정보자료실
R1.1.4

민권운동사랑방



국제인권소식-사회개발정상회의의 NGO포럼 자료

인간 중심의 사회개발 실패

<편집자 주> '95 사회개발정상회의의 NGO 포럼에서 발표한 아래의 글은 인권의 시각에서 본 사회개발을 다룸으로서 이번 사회개발정상회의를 평가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이번 사회개발정상회의를 바라보는 인권 NGO(민간단체)들의 개발과 인권에 관한 입장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자료는 참여연대에서 제공 받았다.

사회개발정상회의를 넘어서서 사회개발정상회의의 NGO포럼에 참가하고 있는 NGO와 사회운동단체는 사회발전정상회의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만들었다.

사회개발정상회의의 선언문과 실천 프로그램에는 사회개발의 기본인 "인간존엄과 인권, 평등, 존경, 평화, 민주주의, 상호책임과 협력"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많은 국가 정상들은 "인권에 대한 모든 존경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시킬 것을 포함"하는 법적인 환경을 세우는데 서약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개발정상회의의 문서들이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개발과 참여로서의 인권에 대한 우선적 인식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고 믿고 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 여성, 어린이, 소수자, 선주민, 장애인 등이 그들의 권리를 찾기위한 새로운 단계를 만드는데 실패했다.

- 1. 인권의 최우선성
국가, 민간단체, 국제기구등 모든 개발의 행위자는 개발활동에 있어서 인권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시민적·문화적·경제적·정치적·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며 이루어지는 개발의 과정은 조화로운 개발전략으로 수정해야 한다.
- 2. 이번 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는 인권침해를 충분히 토론하지 않았다.
사회개발정상회의의 주제는 빈곤, 실업, 사회통합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유지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는 자원을 분배하는데는 실패했다.
- 3. 국가가 인권조약을 비준하고

그들의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필요를 상기시키는 것
사회발전정상회의의 문서들은 "기본적 요구", "빈곤박멸"과 같은 시민·문화·경제·정치 그리고 사회적 권리를 강등시켰다. 그대신 인권의 증진, 완성, 보호, 존경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무에 대해서는 상기시켰다.

- 4.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적 패러다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자원과 수입의 평등한 분배와 관련이 있다. 이 권리들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도 보호되어야 한다. 사회개발정상회의의 문서들에는 경제 개발을 강조하는 동안 인간개발과 사회개발이 모두 인권의 관점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되풀이 하고 있다. 더욱이 사회발전정상회의가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개발을 강조했다기 때문에 그것은 곧 시민·문화적·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권리를 통합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 5. 국가가 국제적인 의무를 승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시민적·정치적 권리 조약은 모든 국가들의 국제적인 책무이다. 국가는 인권의 완전한 존중과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국제적인 협력을 해야한다.
- 6. 국제적인 조직과 기관의 인권에 대한 책임성
사회개발정상회의의 주제는 세계은행과 같이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국내, 국제기구·조직의 정책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 국제정책과 프로그램 특히, 국제금융기관, 무역기구, 국제개발기구등은 인권과 정의를 증진시키고 존경해야 한다.
사회개발정상회의는 이러한 정책과 실천행동이 인권과 충돌하는 것을 평가하는 개발지표를 제시하는데 실패했다.
- 7. 사적영역에서 인권 책무
인권NGO는 국가와 국제기구에게 사적영역에서의 인권이 충돌할 경우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인권의 책무

를 이행하고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울것도 권고했다.

- 8. 인권의 보편성 (생략)
- 9. 국가와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제소절차
사회개발정상회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선택의정서를 채택하는 첫 단계를 밟는데 실패했다.
사회개발정상회의는 모든 개발의 행위자들-국가, 사기업, 국제금융기구등-을 정의롭게 책임지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국제적인 인권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
- 10. 국내에서 국제법을 통합시킬 책무
모든 국가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정치·시민적 권리를 그들의 국내법 상황에 맞게 통합시킬 국제적인 책무를 가진다.
- 11. 정의의 효과적인 접근
개발의 과정에서 고통받는 인권침해 희생자들은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구제책과 믿을 수 있는 정의에 접근해야 한다.
- 12. 협상과정
사회개발정상회의의 문서들은 개발을 이루는 협상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참여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사회개발을 위한 어떠한 의제도 조직화된 시민사회와 민간단체 없이는 힘을 가질 수 없다.
- 13. 인권교육은 사회개발전략이다.
인권교육은 개별적이고도 집합적인 인권이다. 사회개발정상회의는 이러한 불균형을 반영하는데 실패했다. 94년에 착수한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 선언은 사람들에게 투쟁을 위한 연대에 보다 강한 힘을 줄 수 있고 집산적인 양심이 모든 인간 개인의 존엄과 평등의 메시지를 줄 것이다.
- 14. 후속조치의 미약함
코펜하겐 문서들은 국가의 책무와 관련한 모니터에 대한 국가의 승락을 받아내는데 실패했다. 게다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선택의정서를 연구하고자했던 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요구도 승인되지 않은 점에 우리는 크나큰 실망을 느꼈다.

인권하루소식

95년 4월

(제374호 - 제393호)

<이달의 주제 -여성>
 당사국은 여성의 법적능력을 제한하는 법적효과를 가지는 모든 계약과 기타 모든 종류의 사적 문서를 무효로 간주하는데 동의한다.
 <여성차별철폐조약 제6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노조활동 위축 민주노총, 조직적인 대응 모색

민주노총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용목등, 민주노총)는 올 임투를 앞두고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주요요인으로 회사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꼽고 이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3월31일 민주노총이 발표한 법규자료에 의하면 지난 89년부터 94년까지 6년간 단체행동과 관련, 54개 사업장에서 63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사용자측에 의해 제기돼 노사합의에 의한 소취하(36건), 원고승소판결(8건), 원고패소(7건) 등으로 처리되고 있다. 현재 법원에 소송 계류중인 사건 12건 중 서울지하철 노조의 경우는 무려 51억1천2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손배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다양하여 한진중공업의 경우는 타회사인 대우조선과 하청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지하철의 경우는 '시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손배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손해배상 청구액을 보면, 한진중공업 노조는 3건에 약 4억4천만원, 삼미특수강노조는 1심과 2심에서 30억원 손해배상판결을 내려 대법원에 상고중이며, 대우조선노조 최은석 전노조위원장을 상대로 3억4천만원 등이다. 이외에도 삼양금속, 대림자동차, 태평양화학, 금호타이어, 대한알루미늄, 현대자동차서비스, 현대정공의 노조들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이 진행중이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해당사업장노조, 노동계, 법조계, 학계, 정당 등을 포괄하는 '손배소송 공동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이에 대해 대처"하기로 하였다.

8.15 50주년 기념 민족공동행사 제안

민족회의, 종교인협회등

여성단체연합,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

협의회, 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노총준비위, 자주평화동일 민족회의 등은 31일 오전 11시 한국일보사 송현클럽에서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위 단체들은 이번 행사 제안의의를 "8.15 민족공동경축의 장을 마련하고, 평화와 통일의 실질적 여건과 일제잔재의 청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제적 연대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전개할 사업으로 △8·15 50주년 민족공동경축행사 △민족통일대토론회 △남북해외교류한마당 △통일맞이 삼천리 대행진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협정 제기

전국연합, 정책토론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31일 종로성당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체결 어떻게 할 것인가'란 제목으로 정책토

론회를 가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온 최규엽(정책위원장)씨는 "정전협정은 더이상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말하며 평화협정을 이루기 위해 "△적대적 군사행위의 완전중단 △군비축소 △한반도 비핵지대화 선언 △국제연합사령부 해소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등을 주장했다.

한일인권포럼 열려

오늘, 동경에서

한승헌·이덕우 변호사와 김수경(<인권하루소식> 기자)씨는 「한국인권기금 국제센터」(공동대표 와다나베 가즈오) 초청으로 3월31일부터 4월4일까지 일본을 방문한다. 4월1일 동경에서 열리는 포럼에는 '한국의 인권상황'의 주제로 열리는데 이덕우변호사가 법률적 차원에서의 한국인권문제를, 김수경씨가 국제적 한국인권운동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4월3일 오사카에서 교포들과 함께 동경포럼 보고대회를 갖게 된다.

<알림> 지면부족으로 이상우씨 사건 정리기사는 4월4일자에 실고, '단체간 행물'도 쉽니다.

<인권하루소식>이 새모습으로 나갑니다.

<인권하루소식>이 창간된 이후 지령 400호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원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권하루소식>은 오는 4월4일부터 본문 글자를 키우고 불필요한 선을 과감하게 정리하여 독자께서 보기 쉽게 만들고자 합니다. 또, 심층취재를 통한 기획 기사를 제공, 원권에 대한 보다 깊은 관점을 제공코자 합니다.

새롭게 단장하는 <인권하루소식>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권운동가를 위한 제1기 공개강좌(12회)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권 체계

강사: 서경석(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하대학강사)
 일시: 4월1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1시까지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문의: 전화 715-9185

「인권하루소식」 3월분 총목차(352호-373호)

월일	호	면	기	사	목
3/2	352	1	일본군 중군 위안부 문제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올라 / 배상특별법 제정 촉구-아시아연대회의 폐막 / 아시아 5개국 여성이 함께 한 정대협 수요시위		
		2	<인권하루소식> 2월분 총목차(352-373호)		
		3	<인권하루소식> 2월분 총목차(352-373호)		
3/3	353	1	개정행법 지켜지지 않고 있다-민가협 목요집회 / 두밀분교 포기할 수 없다-학부모, 경기도 교육감에 입장 전달 / 고난모임, 올해 인권과 통일선교를 중시사업으로 / <인터뷰-페리스 하비 목사>		
		2	제네바 소식 ⑤-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3: 장기수, 국가보안법에 대한 지적 잇따라-4주간 회의 주요쟁점들- / 성폭력상담소 토요법률상담-변호사들 직접 상담 / 「국경선없는 기자들」 최진섭씨 석방 촉구		
3/4	354	1	탈출을 강요당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여권반환, 인권개선등의 약속 전혀안 지켜 / AI, 김대통령 유럽 순방에 인권문제 논의 촉구 / <긴급> 대전교도소 철야농성 경찰 강제연행 위협		
		2	특집기획-깃발하는 고등학생 인권(마지막회) 「2+1 제도」 1년 사실상 교육 포기 / 인권간행물(단체간행물)		
3/7	355	1	「국제앰네스티」 전세계 회원들 긴급행동 시작-부산대 「자주대오」 사건 김수옥씨들에게 국제적인 처우 요구 / WSSD에 민간단체 참가, 한국상황 홍보 / 민가협 대전교도소 밤샘농성 3일만에 풀어		
		2	3.8 세계여성의 날 행사 다채롭게 꾸며 / 여성후보들 지방선거 적극적으로 참여 / 주간인권호름(95년 2월28일부터 3월5일까지)		
3/8	356	1	해폐기장 반대운동 탄압 무법천지-굴업도 주민 명동성당 비닐천막 항의농성 6일째 / AI 한국지부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항의서명부 전달 / 94년도 아내구타 2천1백26건-여성의 전화 상담 통계 발표		
		2	제네바 소식 ⑥-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4: 동티모르 관련 의장 성명서 채택-5주간 회의 주요쟁점들-		
3/9	357	1	북한 장학생 발인 박홍총장 증인으로 채택-이상우씨 재판에서 핵심증인신문 비공개 진행, 가족들 거세게 항의 / 여성의 전화 성폭력 상담원 교육 실시 / 여성의 정치참여 보장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		
		2	여성을 주제로 세계적으로 캠페인 펼쳐-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성명 발표 / 선거법 개악음모 중단, 5.18책임자 처벌 요구-광주교도소 양심수 단식 / <현장스케치> 정부, 늙은 노인들 고서 이간질하려-굴업도 해폐기장 반대농성 7일째 / 인터뷰-해폐기장 결사반대 덕적면 투쟁위원회 조직부장 정창준(39)씨-정부 투명한 해정책 명확히 밝혀야		
3/10	358	1	광주지검, 비전향 장기수 장례식 수사 / 안기부 반국가단체 성원회합 인지하고도 1년간 방치-구국전위 사건 안재구씨 항소심 2차 공판		
		2	가족폭력방지법 제정에 힘쓸 터-여성의 전화,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발족 / 김홍신씨 사건은 표현의 자유 탄압-민족작회의 성명 / <인터뷰>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종걸 변호사 -최소비용으로 소송할 수 있도록 힘쓸 터		
3/11	359	1	신공안정국 조직사건 대부분 자의적 구속-1심재판결과 수사발표와 많은 차이 / 분단50주년 국보법 철폐 최대 과제-민가협 10차 총회 가져		
		2	대법원 형사사건 파기율 94년 5% / 박홍총장 법정에서 북한 장학생 관련 증언 용의 / 인권간행물(인권자료 및 단체간행물)		
3/14	360	1	비전향장기수 장례 파문 확산 조짐-한국전 관련단체 협박성 파상공세 전개 / 인권문제 이해증진 목적 사진전 열어-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2	<현장스케치>-생존권 보장 외치다 분신한 장애노점상 최정환씨-산소호흡기로 연명, 장애인 복지 대책 절실 / 주간인권호름(95년 3월6일부터 12일까지)		
3/15	361	1	경기대 학생회 간부들 또 대거연행-서울경찰청, 경기대 학생회간부들 대거연행 / <인권어록①>-이승만과 나라세우기전, 한국 언론의 두 얼굴		
		2	고 윤기남씨 장례 관련 12명에 출두요구서 / 고난모임 장기수들에게 시사지 보낼 후원자 모임 / 국제법률가위원회 중군위안부 보고서 심포지움		
		3	제네바 소식 ⑦-아동권리조약을 위한 민간단체 그룹 간사 로라씨 인터뷰		

「인권하루소식」 3월분 총목차(352호-373호)

월일	호	면	기	사	목
3/16	362	1	어린이와 청소년 권리의 주체선언-16개 단체 「어린이·청소년 권리 연대회의」 결성 / 노동부 해외선전용 ILO 조약비준 계획 발표 / 경기대생들 구속자 석방 요구 서울시경 항의시위		
		2	<해설>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약		
3/17	363	1	문민정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금호재개발지구 철거민 고공농성중 박근혜씨 16일 분신 / 노점상·장애인 생존권 보장 촉구-전국노점상연합회 집회 / 휴업급여지급 둘러싸고 마찰 예상-원전레이온 직업병 피해자 / 조각감칠피해자 구제 특별법 요구-천주교인권위		
		2	방위병 변사체 발견 의혹 증폭 / 대전보건전문대 전학생회장 국가보안법 구속 / 문국진씨 선고 4월6일 / 불교인권위, 장기수 장례식-재야인사 구속 비난 성명		
3/18	364	1	부산대에 이어 경기도대 「자주대오」 사건-경찰, 기무사 수사발표 / AI, 기세문, 이경률씨 무조건 석방 촉구 / 광주 구속수사·재판 여전-94년 집행유예 67.5%		
		2	제네바 소식 ⑧-제51차 유엔인권위 모니터/5-제51차 유엔인권위 막 내려 / 인권간행물		
3/21	365	1	네팔노동자 피난처에서 연행돼-「명동성당 농성」 약속 안 지켜져 부산서 탈출 / <현장스케치>-세계인권사진전		
		2	금호지구 철거민 침묵시위-「세계인권사진전」서 직접 인권탄압 현실 고발 / 장애인 복지 발전 촉구 공동대책협의회기구 구성 / 주간인권호름(95년 3월13일-3월19일)		
3/22	366	1	분신 장애노점상 최정환씨 운명-장례위원회 25일 빈민장으로 치르기로 / 피난처 유린 분노 지반서 석방 요구-외국인 연수생 공대위 / 동의대 구속자 석방 기도회 갖기로-30일, 고난모임 / <인권어록 ②>-중전 50년과 해방 50년의 차이		
		2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 구속자 석방 요구-국제앰네스티 긴급구명활동 한달째 계속 / 한국노총, 정신대 문제 ILO에 제소 / ILO 제29조 조약(강제노동금지조약) 제 11조		
3/23	367	1	「암살지령」 받은 자는 자수간첩 한병훈-박홍총장 이상우씨 재판에서 증인 / 자수간첩 박소형씨의 안기부 94년 9월12일 진술조서 내용		
		2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결사의 권리 보장 요구-전기협외장 서선원씨 석방 촉구 / 억울한 옥살이 김기용씨 손배청구 / 장시간 노동, 저임금, 임금체불 가장 큰 문제-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 / 서초구청장 구속 촉구-불교인권위원회 / 보상특별법 제정 촉구-정대협 158차 수요시위		
3/24	368	1	박홍총장 발인, 제2공안정국의 전주곡인가-법정증언에 이어 한병훈과 기자회견 / 학문의 자유 또 다시 구속-경찰청 보안국, 방송통신대 역사학강사 김무용씨 구속		
		2	서강대 박홍 총장 법정증언 증언록(요지)		
3/25	369	1	강제철거, 노점단속 강력규탄-분신 책임자 처벌등 요구, 오늘 최정환씨 장례식 / 빨치산 기행-고무찬양-김무용씨등 구속돼 / 공안연구소 증인 불출석-이창복씨 항소심		
		2	제네바 소식 ⑨-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총괄정리-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 마련토록		
3/28	370	1	공소시효 지난 고문범죄에 면죄부-헌법재판소, 황대권씨 헌법소원 「공소권 없다」고 각하 결정 / 경찰 시신탈취 영결식 못한 채 안장-분신 최정환씨 장례식		
		2	외국인 노동자 갈 곳이 없다-외국인노동자인권공대위, 항의방문, 집회등 계속 / '95 사회개혁투쟁 전개-민주노총 준비위 / 합동추모제 6월3일-추사연대회의 총회		
3/29	371	1	평화·인권·민주주의 아태지역 네트워크 결성키로-유엔스코 한국위원회 3월29일부터 31일까지 창립회의 /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해-ILO 94년 연감 / 의문사 진상규명 다짐-김용갑씨 5주기 추모제 / <인권어록 ③>-진정한 삶의 질은?, 간첩이 자유로운 나라		
		2	<자료> 대학강사 노조 김무용씨 구속 관련 성명서-학문·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처사 / 통일염원 미사 시작돼-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 / 로-스쿨 단호히 반대-대한변협 성명 발표 / 인권유린 설명회 개최-외국인노동자인권공대위		
3/30	372	1	국보법 이적성 판단에 「졸속」 드러나-이창복씨 사건 항소심 출석 증인 신문에서 / 「경찰관이 성폭행」-경찰청 진상조사 착수		
		2	막연한 희망표시는 청원대상 아니다?-법무부 재소자 청원권에 대한 입장 밝혀 / 김무용씨 석방, 국보법 철폐 요구-역사 3단체, 성명 발표 / 외국인노동자 인권유린 항의전화, 집회 전개-외국인노동자공대위		
3/31	373	1	의혹 깊어지는 자수간첩 한병훈의 「정체」-안기부 프락치일 가능성도 제기돼 / 경기대자주대오 조작돼-경기남부연합 100인 입장		
		2	국제인권소식-사회개발정상회의의 NGO 포럼-인간중심의 사회개발 실패		

<이달의 주제 -노동>

이 균등처우는 거처의 여하에 불구하고 외국인노동자 또는 그 피부양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ILO 19호, 노동자 재해보상에 대하여 내외국인 노동자의 균등처우에 관한 조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국보법 제7조로 구속연장 피해자 19명 국가 상대로 손해배청구소송 제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 민가협)에 의하면 3일,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에 의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법의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3일 서울 민사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의의에 대해 민가협 남규선(32) 총무는 "그동안 구속기간 연장으로 국보법 위반 피해자는 무리한 인신구속에 따라 고문등 가혹행위를 받았으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내란죄, 외환죄, 살인, 조직폭력, 마약사범도 30일을 넘기지 않고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국보법 위반자에게만 40일에서 50일간 수사를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소송제기자 김진경(시인) 씨등 19명은 85년부터 91년 사이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구속된 후, 제19조의 적용을 받아 1차 내지 2차에 걸쳐 40일에서 50여일까지 연장된 구속수사를 받았다.

보임·다산 사건의 강우근씨는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48일간 '보임·다산'이라는 가공의 조직에 대해 자백할 것을 강요당하며 고문수사를 받았고 '세계철학사'등을 학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 김진경씨는 안기부에서 47일, 박세길씨는 경기대공분실에서 46일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헌법재판소(주심 변정수 재판관)가 92년 4월 14일 "국가보안법 제19조가 이법 제7조(찬양고무등)와 제10조(불고지)의 죄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필요한 장기구속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48일간 '보임·다산'이라는 가공의 조직에 대해 자백할 것을 강요당하며 고문수사를 받았고 '세계철학사'등을 학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 김진경씨는 안기부에서 47일, 박세길씨는 경기대공분실에서 46일 동안 조사를 받았다.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되어 48일간 '보임·다산'이라는 가공의 조직에 대해 자백할 것을 강요당하며 고문수사를 받았고 '세계철학사'등을 학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 김진경씨는 안기부에서 47일, 박세길씨는 경기대공분실에서 46일 동안 조사를 받았다.

오늘부터 <인권하루소식>이 글자를 키우고 선을 정리한 새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오늘자 <인권하루소식>을 보시고 의견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점상연합회 간부에 최정환씨 장래로 소환장

3월 31일 0시 30분경 노수회(전국노점상연합회) 고문, 민주주의민족통일 서울연합 공동의장)씨가 송파경찰서로 연행되었다. 노씨는 94년 7월 7일 안산지역노점상연합회 출범식과 관련해 9월부터 수배되었다.

또한, 고 최정환씨 장래와 관련하여 부회장 김이현씨 등 5명의 전노련 간부들에게 경찰의 소환장이 발부된 상태이다.

한편, 3월 31일 전노련 운영위 이후 한 음식점에서 동대문 경찰서 형사들이 간부들을 연행하려 해 이를 저지하던 최규상씨(사무국장)씨가 전치4주의 부상을 입었다.

전노련은 3일 성명을 발표하여 "지난 3월 8일 분신한 최정환씨 사건과 관련된 치열한 투쟁을 벌여온 전노련에 대한 탄압의 신호"라고 주장했다.

○ 공판 안내 ○

- 4월 4일 (화) 이승우(선고), 국보법위반, 10시, 서울지법 311호 최혁, 국보법위반, 4시, 서울지법 311호 안윤정(선고), 국보법위반, 11시, 서울지법 319호 양윤모, 노동쟁의조정법위반, 3시, 서울지법 418호 정동익(선고), 국보법위반, 10시, 서울지법 422호
- 4월 6일 (목) 강미자, 국보법위반, 4시, 서울지법 317호 이창복(선고)항소심, 국보법위반, 10시, 서울지법 418호
- 4월 7일 (금) 이택규, 국보법위반, 3시, 서울지법 311호 오세중, 국보법위반, 3시, 서울지법 311호 김상열, 업무방해, 2시, 서울지법 318호 최종민, 국보법위반, 2시, 서울지법 319호 강두희(선고), 국보법위반, 10시, 서울지법 321호 김병목, 국보법위반, 2시, 서울지법 418호 최일봉(선고), 국보법위반, 10시, 서울지법 421호

4.3항쟁 위령제 갖고 진상규명 다짐

4.3항쟁 기리는 다채로운 행사 한달 동안 열려

제주 4.3항쟁 47주기 4위 제 공동준비위원회(공동대표 고상호등 7인)와 제주도 4.3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대표 김병인)는 공동으로 제주 4.3항쟁 제47주년 합동위령제를 가졌다. 이들 단체 회원 2천여명은 3일 오전 11시 제주시 탐동광장에서 작년에 이어 공동행사로 합동위령제를 열고, 국회와 정부차원의 4.3항쟁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등을 촉구하였다. 이날 고상호씨는 추모사에서 "오늘 양단체가 주최하고 제주도도와 제주도의회가 후원하는 민관합동의 선례를 세우는 일은 민관합동으로 4.3을 치유해나가는 해법"을 모색하는 일이라며 "이를 통하여 도민들은 4.3의 진상규명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내에서는 3일의 위령제를 비롯하여 제주 민예총이 주최하는 다채로운 4.3항쟁 기념행사가 4월 한달내에 열린다. 주요행사로 지난 3월 31일 제주도 문예회관 놀이마당에서 4.3 예술제 전야프로그램으로 산신놀이 등이 이어 진행되었고, 세종갤러리에서는 1일부터 14일까지 4.3미술제가, 22일에는 가톨릭회관 강당에서 문학의 밤등이, 22일과 23일에는 '섬의 하나됨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노래공원이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29일과 30일에는 마당극 '목마른 신들'이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또, 5일에는 4.3 당시에 토벌대에 의해 폐촌된 서귀포 영남포 등지를 돌아보는 4.3항쟁 역사순례를 4.3연구소의 주최로 갖게 된다.

<이상우씨 사건의 문제점>

작년 박홍(서강대 총장)씨가 '북한 장학생' 발언한 직후 정현백, 김진홍교수등과 함께 안기부에 의해 긴급구속되었다. 두 교수는 무혐의로 석방되었고, 이씨와 함께 구속된 안윤정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받고 4일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씨에 대한 범죄의 성립은 오로지 한병훈씨 부부의 증언에 의존하고 있다. 검찰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김용무씨가 과연 북한 사회문화원 소속 공작원이나 하는 것을 입증하는 어떤 물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병훈씨와 박홍씨가 나와서 법정증언을 하였지만, 이들의 증언도 서로 맞지 않는 곳이 많이 있어 언론에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한씨에 대해 안기부 프락치라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건일지>
85년부터 89년까지 이상우씨 서독 유학, 김용무씨를 만나고, 안윤정, 한병훈과 접촉
94년 9월 5일 한병훈 안기부에 자수
94년 10월 5일 정현백(성균관대), 김진홍(숭실대) 교수와 이상우, 안윤정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안기부에 긴급구속
94년 10월 7일, 정현백, 김진홍교수 무혐의로 석방
95년 3월 8일, 한병훈씨 이상우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95년 3월 22일, 박홍총장 법정증인으로 출석, 자신을 암살하려던 자가 한병훈이라고 증언
95년 3월 23일, 한병훈, 박홍총장 공동기자회견
95년 4월 3일, 이상우씨 1심 재판에서 2년6월 선고

주/간/인/권/하/루/소/식

(95년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 <3월 27일>
현재, 장기수 황대권씨등 '고문헌법소원' 각하결정 밝혀/국제엠네스티, 미국 인종차별 심각하다고 지적/미얀마 군사정부, 아웅산 수치 7월 석방 밝혀/중앙아프리카 부룬디에서 인종학살 5백명 사망
- <3월 28일>
미군측국 보고서, 군사력 순위 한국 10위, 북한 21위 /서울 영등포경찰서, 고문후유증 방화혐의자 풀어줘/서울방송, 정현백 교수에 유감 표시/유엔기후회의, 전세계 1백30여개국 1천여명의 대표 참석 개최/미 기후연구소, 환경난민이 최소 2천5백만명일고 발표/아프리카 단결기구(OAU), 선진공업국에 약 3천억달러 외채 경감 요구
- <3월 29일>
신구법 전제주지사 입건에 관련개입 드러나/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신청서 제출/김석수 중앙선관위장, 김대통령 지역공약 자체 요청등 내용의 기자회견/3.29 법난 1주년 기념 대법회 조계종에서 열려/민주노총, 올 10월에 창립대의원대회 갖기로/부산경찰청, 빈민정책 비난한 유인물 살포 대학생 87명 연행/경기도 광주군 주민들, 경기도청 점거 골프장 허가 반대 기습시위
- <3월 30일>
대한변협, '현행제도의 점진적 개선' 사법개혁안 발표 /인도노동자 44명, 회사부도로 귀국/미 연방수사국(FBI), 과테말라 미국인 살해, 고문사건에 CIA가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착수
- <3월 31일>
경기 군포경찰서, 여중생 성폭행 백경장 긴급구속/경기도 의정부시 영석고 학생 830명 수업 거부 교장퇴진 농성/중국, 종업원 학대 한국업주에 공개사과등 명령/여연등 5개 단체, 8.15행사, 남북정부와 민간단체 공동 개최 제의/검찰, 5.18관련 1차 조사 끝내/수원지검 강력부, 미군군속 마약 구입 혐의로 최초로 국내교도소에 구금/알제리군, 이슬람계릴라 2천8백명 사살, 2백명 체포
- <4월 1일>
서울지법 민사합의1부, 대전지검서 지용규씨 수사기록 서증조사/대법원, 지자체 선거사범 전담재판부 설치 신속재판키로
- <4월 2일>
한국통신노조, 보라매공원서 조합원 3만명 임투전진 대회
- <해설>
지난주에는 부룬디에서 인종학살, 알제리에서의 반군계릴라의 소탕작전등 세계 곳곳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집단학살이 자행되었다. 이런 일련의 학살사태는 최근 몇년간 지속되는 일로 앞으로도 좀체로 속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침묵도 또 목도될 것이다. 냉전 이후 이런 내전 상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이달의 주제 -노동>

이 균등처우는 거처의 여하에 불구하고 외국인노동자 또는 그 피부양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ILO 19호, 노동자 재해보상에 대하여 내외국인 노동자의 균등처우에 관한 조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최규하 전 대통령 증언 촉구

5.18광주민중항쟁연합 성명 발표

5·18광주민중항쟁연합(상임의장 정동년, 5민련)은 4일 성명을 내고 망월동 5.18 묘역의 국립묘지 승격과 5.18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최규하 전대통령의 증언을 촉구했다.

하겠다고 밝혔다.

학문사상과 표현의 자유 보장 촉구 3일 학단협 성명 발표

5민련은 성명에서 "5·18의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면서 "민주주의 수호 정신과 싸움의 치열성 등에서 4·19 혁명에 못지 않은 5·18항쟁에 대해 그 정신을 기리는 기념사업을 국가적으로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단협은 지난 3월 21일 구속된 김무용씨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3일 발표하며 구속수사 금지와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성명은 또 5·18 고소·고발사건 수사와 관련해 "최규하 전 대통령이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광주학살 책임자들의 범죄를 비호하는 반역사적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학살자들의 만행을 사실대로 밝히라"고 촉구했다. 5민련은 최규하 전 대통령과의 면담과 사실증명을 범국민 서명운동을 추진

학단협은 "문제가 되는 강의안과 자료집은 이미 2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개인 창작물이 아니라 이미 공개출판되었던 연구저서와 정기간행물들을 요약하고 정리한 것"이라고 밝히며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국가보안법위반의 근거로 삼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문과 연구활동에 대한 평가는 학문적 토론과 연구성과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국가보안법으로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진정

한 세계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태지역 기금조성 워크숍 7일 개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대표 허창수)는 7일부터 9일까지 '국제엠네스티 아태지역 기금조성워크숍'을 서울 YWCA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국제엠네스티 국제사무국과 국제기금조성그룹(International Fundraising Working Group)이 매년마다 아태지역의 엠네스티 지부와 그룹의 기금조성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해서 준비된 것이다.

이 행사에는 국제기금조성국장 John Baguley, 국제기금조성그룹 위원장 Bjorn Adreassen을 비롯하여 뉴질랜드, 대만, 필리핀, 홍콩, 호주 등의 대표들과 한국의 그룹 회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기금조성담당자 이주영씨는 "이번 행사는 민간단체들의 기금조성 및 재정문제에 대한 인식을 교류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

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락처 053-426-2533

공동육아 현장학교 진행 4일부터 공동육아연구회

공동육아연구회가 주최하는 제2기 공동육아 현장학교가 지난 4일부터 6월일까지 서울 신촌 '우리어린이집'과 '또하나의 문화' 사무실에서 열린다.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강좌는 총 11회에 걸쳐 진행되며 강좌의 주요내용으로는 '바람직한 공동육아의 이념과 방법', '책읽기 지도' 등이다. 이 강좌의 강사로 는 이기범(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정병호(우리어린이집 원장,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조준영(어린이도서관 연구회 그림책분과장)씨가 맡는다.

어린이집, 유치원의 교사나 공동육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들을 수 있고 수강료는 8만원이다. 문의전화: 324-3851

오늘 문국진씨 1심 선고

고문피해자 문국진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이 오늘 10시 서울지방법원 559호(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 주심판사 최혜리)에서 열린다.

4월4일자 <인권하루소식> 발송이 프린터의 고장으로 평소보다 현저하게 늦어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발송시간이 늦어져 기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권운동을 위한 제1기 공개강좌(13회)

판례로 통해서 본 헌법

강사: 서경석(인하대 강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일시: 4월 8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1시까지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문의전화: 715-9185

4일은 정신건강의 날 정신질환자의 문제 공유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월간 <청년의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지금 당신의 손길이' 행사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연세대 동문회관 등지에서 열렸다.

4일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정한 정신건강의 날로 우리 사회에서 천덕구러기로 치부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문제를 한번쯤 모두의 문제로 생각해보는 날이다. 지난 3일 오후2시 국회소회의실에서 열린 '정신질환자 서울 신촌 '우리어린이집'과 '또하나의 문화' 사무실에서 열린다.

한양대 신경정신과 김이영 교수는 '정신의학적 관점에서의 정신질환과 인권'이란 주제발표를 했고, 경희대 박근성 교수는 '법적 측면에서의 정신질환과 인권'이란 주제발표를 했다.

또, 1일부터 4일까지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서울시립정신병원, 서울대병원, 연세의료원 등에서 수집한 정신질환자들의 미술작품 72점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또, 4일 오후 6시부터는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자원봉사자와 정신질환자와 가족들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정신질환자의 문제를 함께 풀려는 모색을 시도했다.

한편, 국내의 정신질환자 수는 정확한 수를 알 수 있는 통계는 없는데, 대략 정신분열증 환자 12만명, 조울증 환자 2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알콜중독자는 무려 3백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상진 열사 20주기 9일부터 추모행사 진행

20년전 박정희 유신정권에 맞서 활거한 김상진 열사의 추모행사가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추모행사는 지난 75년 4월11일 오전 11시 수원 소재 서울농대 교내에서 열린 시국성토회중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양심선언문' 등을 읽은 뒤 할복자살한 김씨의 할복 20주기를 맞아 '김상진기념사업회'(회장 안종진,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이루어진다.

9일(일) 낮 12시 벽제공원 묘지 참배로 시작될 '김상진 20주기 추모행사'는 11일 오후 6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박형규 목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갖고 오후 7시부터는 김상진 열사의 평전 『긴 겨울 얼음을 뚫고』의 출판기념회가 열릴 예정이다.

김씨의 죽음은 서울퍼런 긴급조치 9호 아래서도 같은 해 5월22일 서울대 관악 교정에서 거행된 '김상진 장례식 사건'(이른바 '오돌 들사건')으로 이어져 김근태씨가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수배되고 영화감독 장선우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서울대생 40여명의 무더기 구속·수배사태로 확산되기도 했다.

김씨의 일대기를 담은 평전 『긴 겨울 얼음을 뚫고』는 기념사업회쪽이 지난 2년 동안 전국을 돌며 김씨의 학교 동료·가족·제야 인사 등 사건 관계자 1백90여명의 증언을 채록해 실고 있어 당시의 암울했던 상황을 증언한다.

한국여성의 전화 제24기 상담원교육

「한국여성의 전화」(대표 신혜수)는 제 24기 여성상담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이

번 교육은 매년 2회씩 이루어지는 것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여성평화의집 강당에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여성학, 상원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이 다. 연락처 269-2962 성폭력문제를 다룬다. 대상

자는 여성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 정당·사회단체·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해 지원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이 다. 연락처 269-2962

<독자투고>

영선이의 꿈을 빼앗아간 이 땅의 철거문화 고상만(전국연합 인권위원회 간사)

금호1-6지구 재개발 지역 철거민 박균백(33)씨가 자신의 몸에 붙을 붙이고 16m 아래로 몸을 내던진지 20여일이 지났다. 중환자실에 입원치료중인 박씨는 화상과 투신 당시 부상으로 척추가 골절되고 눈은 실명된 상태이다. 그는 이제 막 재통을 부릴 귀여운 두딸을 가진 가장으로 지금은 생명의 사선에서 힘겨운 삶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박씨의 투신 당시 철거장폐를 동원, 살인철거를 자행한 용역회사와 성동경찰서, 재개발 건설회사인 한진건설측은 박씨의 치료비를 거절하고 있다. 또한 한양대 병원에서는 밀린 치료비를 내지 않으면 치료를 중단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하늘같이 맑고 의지하던 한 가정을 잃어버린 두 딸과 부인은 강제철거 속에서 그들의 행복한 보금자리를 잃었고 지금은 중환자 보호대기실에서 살아가고 있다. 4살난 막내딸 영선이는 지금도 남아 어른만 보면 경기를 일으키며 운다고 한다. 그것은 바로 지난 6일 철거반원의 잔인하고 야만적인 행위를 겪고 난 후부터라고 한다. 7살난 진영이는 조금은 커서 사랑하는 아빠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는 듯하며 말도 없고 밥도 잘 먹지 않는다.

그 아이들의 눈빛을 읽으며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잔인한 어른들과 사랑하는 아빠가 무슨 이유인지 불을 붙이고 떨어졌던 그 날의 일들을 그 아이들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참으로 아이들의 눈빛을 보며 부끄러움과 죄스럼움으로 고개를 들 수 없다. 맛난 음식과 따뜻한 방안에서 인형을 가지고 다투는 평범한 아이들의 생활을 진영이와 영선이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

대신 어른만 보면 경기를 일으키는 진영이와 눈물을 지으며 한숨쉬는 엄마를 보며 말이 없어진 영선이가 있을 뿐이다.

병원 한 구석에 만들어진 콘테이너 박스의 보호자 대시실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두 아이를 보며 지금 우리가 무슨 희망을 줄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 두려워해야 하는 어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말과 함께 다시금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박균백씨의 가족에게 따뜻한 정성을 모아 줍시다.
은행구좌: 조흥은행 368-04-340513 예금주 박균백
연락처: 한양대 병원 1527호 (전화 291-3111)

<이달의 주제 -노동>

이 균등처우는 거처의 여하에 불구하고 외국인노동자 또는 그 피부양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ILO 19호, 노동자 재해보상에 대하여 내외국인 노동자의 균등처우에 관한 조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재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최초로 국보법 위반 '전부' 무죄 선고

국보법 제7조 엄격적용, 이창복씨 석방

91년 국가보안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피고에 대해 재판부가 '전부' 무죄판결을 내렸다.

6일 서울지법 형사합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씨 합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판결, 이씨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넓게 해석, 적용할 경우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전국연합의 대의원대회 자료집과 범민족대회 자료집 등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위협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90년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결정을 원용, "개정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때에도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협이 있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자유민주체제를 비판하거나 북한과 반국가 활동성이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가보안법이 개정되기 전인 90년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한정한 결정을 내려 "적용대상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이런 헌법재판소의 한정한 결정은 91년 국가보안법 개정 때에 반영되었다.

이씨의 항소심 공판에서는 리영희교수의 증거자료에 대한 감정서가 제출되었으며, 보안문제연구소의 이적성 판단이 매우 비전문적이고 졸속적임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인권하루소

식>3월30일자 참조)

유엔인권위 모니터 활동 이성훈씨 귀국

지난 1월14일 국제인권법사회(IS) 인턴십과정으로 출국했던 이성훈(34)씨가 4월6일 오후 귀국했다. 이씨는 51차 인권위원회 모니터 활동을 벌였는데 "인턴십과정은 인권을 배우고, 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는 소감을 밝혔다. 이밖에도 그는 사회개발정상회의(WSSD)를 참관했고, 영국의 국제엠네스티 본부, Article 19(사상·표현의 자유에 주력하는 단체), CIIR(가톨릭국제관계연구소)을 방문했다. 암스테르담의 그린피스 본부방문과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버마에 관한 국제회의' 참석, 파리의 FIDH(국제인권연맹) 방문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 문국진씨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재판은 무기연기되었습니다.

한국 제조업 노동시간 주 48.9시간 66개국중 7위로 길어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노동통계연감, 1994』에 따르면 전세계 66개국 제조업 노동시간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제조업 노동자가 주당 48.9(93년)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준비위는 "한국의 노동시간은 대만 46.5시간(92년), 멕시코 45시간(93년), 홍콩 44.9시간(93년)등 주요 경쟁상대국 노동시간보다 길며 66개국중 7번째이다"라고 밝혔으며 "심지어 남아프리카공화국도 44.7시간(92년)이고 케냐도 43시간(91년)으로 한국보다 짧다"고 말했다.

한편, 66개국의 제조업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1.8시간으로 대륙별로는 아프리카가 50시간으로 가장 길고 아시아는 45.6시간, 아메리카 42.6시간, 오세아니아 41.5시간, 유럽 38.2시간순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민주노총은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노동시간이 길고 유럽은 아프리카와 아시아보다 노동시간이 짧다"고 평가했다. 또한 "주 40시간미만으로 일하는 나라는 38%에 이르고 한국을 포함하여 주 48시간 이상으로 일하는 나라는 8개국으로 12%이다"라고 지적했다.

뒤이어 발제에 나선 이덕우변호사는 '한국의 정치상황과 인권'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국가보안법의 적용실태와 문제점, 국가보안법에 대한 법원의 태도에 대

일본에서도 국가보안법 철폐 결의

한일인권포럼, 도쿄와 오사카에서 개최

'한일인권포럼'이 '일한인권포럼실행위원회' 주최로 지난 31일부터 4월4일까지 4박5일간의 일정으로 일본 동경, 오사카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는 국내에서 한승헌변호사, 이덕우변호사, 김수경<인권하루소식> 기자가 참석했다.

4월 1일 오후 5시 열린 '한일인권포럼'에는 교포뿐만 아니라, 재일한국인 정치범 문제에 관심을 가진 일본인들을 포함해 1백50여 명이 참석했다. 한승헌변호사는 "장기수는 오랜 세월 구금되었지만 석방은 되지 않고 망각된 존재로 남아 있다. 망각된 장기수문제에 다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이 모임의 의의라고 본다"고 말했다. 나아가 인권개선을 위해 "제도적·법적 개선이 필요하며 군사정권에서 벌어진 과오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4월 2일 오후 5시 열린 '한일인권포럼'에는 교포뿐만 아니라, 재일한국인 정치범 문제에 관심을 가진 일본인들을 포함해 1백50여 명이 참석했다. 한승헌변호사는 "장기수는 오랜 세월 구금되었지만 석방은 되지 않고 망각된 존재로 남아 있다. 망각된 장기수문제에 다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이 모임의 의의라고 본다"고 말했다. 나아가 인권개선을 위해 "제도적·법적 개선이 필요하며 군사정권에서 벌어진 과오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 말한뒤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국내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 김수경기자는 '한국의 인권상황'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김영삼정부가 인권개선을 위해서 제도적 개선, 과거청산, 국제인권법 수준에 맞는 인권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씨는 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이후 변화된 국내인권 상황에 대해 1백50여 명이 참석했다. 한승헌변호사는 "장기수는 오랜 세월 구금되었지만 석방은 되지 않고 망각된 존재로 남아 있다. 망각된 장기수문제에 다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이 모임의 의의라고 본다"고 말했다. 나아가 인권개선을 위해 "제도적·법적 개선이 필요하며 군사정권에서 벌어진 과오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은 결의문에서 한국정부를 △국가보안법 철폐, 정치범 석방할 것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씨등 송환할 것을, 일본정부에 대해서는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사죄, 중군위안부 피해자에 게 충분한 보상을 할 것 △재일한국인에 대한 차별정책의 종식과 민족적 권리의 보장등을 촉구했다.

2일 오후에는 '양심수구원회' 회원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된 '한일인권포럼'의 전례적 상황, 일본내 양심수

후원회 활동과 한국 인권단체의 효과적 지원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덕우변호사는 "한국인권단체협의회에서 양심수구원회등 개별활동 담당자를 두는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보법 철폐 연대활동 모색

3일 오후7시경 오사카 L 오사카회의장에서 열린 대회에는 6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분단 5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국내외 활동을 활발히 벌일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이철(양심수동호회 대표), 장기수 손유희씨의 부인 부신화씨등이 참석했다.

<인터뷰> 15년째 감옥살이 재일동포 손유희씨 부인 부신화씨

일본 '양심수 동호회'는 오는 15일 손유희씨의 부인 부신화(65)씨의 한평생을 그린 '부신화타령'의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손유희씨는 81년 친척 3명과 함께 구속되어 간첩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후 84년 무기징역으로, 88년 20년 징역으로 감형되어 15년째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재일동포사회가 국가보안법과 불운한 관련을 맺게 되는 것은 남북한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손유희씨의 경우는 81년 4월경 골프하러 한국에 오던 중 안기부에 연행되었고, 법정에서 손씨를 비롯한 가족들은 고문에 의한 조작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손유희씨가 체포되기 전 설립한 회사는 구속과 함께 도산하여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한국의 친척들이 구속되었을 뿐 아니라 일본의 친척들도 구속될 지 모른다는 부담 때문에 가족들의 정신적 어려움은 더 컸다.

15년이란 긴 세월동안 남편의 면회한번 하지 못하고 살아온 부신화씨의 그간 생활을 간략하게 들어 보았다.

손씨의 구속 직후 일본의 국회의원에게 청원했으나, '내정간섭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91년에는 아들이 김영삼 씨를 찾아가기도 했다. 그 만남에서 "대통령이 되면 석방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결과는 달랐다. 김영삼씨가 대통령이 되면 날 가족과 석방운동을 돕던 '구원회' 회원들이 손씨를 마중하러 한국을 방문했다. 출감을 고대하며 찾아가던 그들을 기다린 것은 석방이 아니라 손씨를 괴롭히는 처참한 병마였다. 구속무렵 당뇨병을 앓고 있던 손씨는 치료도 받지 못한채 24시간 내내 혁수정을 찬 생활을 하는 등 고초를 겪었고, 현재는 후두암, 당뇨병, 담석증 등으로 고생하고 있다.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손씨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손유희씨를 구원하는 회'의 이마다 회장은 "약의 부작용 때문에 건강이 걱정된다. 살아서 석방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손씨가 15년전 연행된 뒤 지금까지 부신화씨와 장남 손명원씨는 면회허락을 받지 못했다. 이들이 간첩범죄죄로 불구속 입건되었기 때문이며, 다른 가족들도 임시여권으로 한국을 오가며 면회를 하다가 4년전에야 정식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손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는 물음에 "하루빨리 보고 싶다. 몸 건강히 지내셔야지" 하면서 말끝이 흐려진다. 그러나, 부신화씨의 주장은 당당하다.

"일본에서 우리의 권리는 하나도 인정되지 않는다. 국내에서도 물론이다. 해방과 함께 우리나라는 분단되었고, 재일교포들은 일본에서 자기권리를 주장하기 보다는 생계를 이어가기에 급급했다. 그런 일본생활 속에서 한국을 사랑하던 내 남편은 구속되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남편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독방에서 살아가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하루빨리 철폐하는 것이 우리 가족의 소원이요 바람이다."

인권운동가를 위한 제1기 공개강좌(13회)

판례를 통해서 본 헌법

강사: 서경석(인하대 강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일시: 4월 8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1시까지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문의전화: 715-9185

<이달의 주제 -노동>

이 균등처우는 거처의 여하에 불구하고 외국인노동자 또는 그 피양양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ILO 19호, 노동자 재해보상에 대하여 내외국인 노동자의 균등처우에 관한 조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대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민주세력 탄압 중지, 사회단체 선거 참여 보장 촉구 광주연합등 성명 발표, 지속적인 선거참여 주장

검찰이 5·18기념사업회장 조비오 신부와 5·18광주민중항쟁연합 전 의장 정동년 씨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수사하겠다는 발표 이후 재야단체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18광주민중항쟁연합과 광주전남연합등은 7일 성명서를 발표, 조사방식 철회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주의 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의장 정관훈 등 5명)은 "선거는 국민이든 누구나 누리는 권리이며 누구라도 자유롭게 의견 개진할 수 있어야 함에도 검찰의 이번 조치는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려는 의도"라며 "선거는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선거의 국민적 참여를 위해서 사회단체의 선거에 대한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5·18광주민중항쟁연합"은 "이번 사태는 지역간의 대립 주장과 민족민주운동 세력에 대한 탄압이고 국민의 참정권을 억압하는 비민주적인 정치절차가 재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에서 조신부와 정씨가 5·18관련 단체들의 대표적 인물임을 상기시키면서 "두 사람에게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벌인다는 것은 5·18관련 피해자들에게 대한 전면적인 탄압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임종인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전국연합은 통합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자유로운 선거운동, 무보수 선거운동, 포괄적 금지규정의 폐지)에서 좋은 후보 뽑기 등의 참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진정으로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재야단체에 대한 내사보다는,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 국민이 정확히 자신의 대표를 선출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박종근)은 검찰의 내사발표에 대해 "무시하겠다"고 일축했다.

부산 고문사건 TV 방영 오늘 SBS 「그것이...」

서울방송(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부산 국교

생 강주영 유괴살인사건의 전말을 추적한 '조작과 진실'을 8일 9시 50분에 방영한다. '조작과 진실'에서는 애초 공범으로 기소되었다가 법원의 무죄판결로 풀려난 원종성, 옥영민, 남해경 씨가 알리바이를 입증하면 서도 살해범으로 물린 과정을 보여준다.

장애로 인해 집중적인 차별에 시달려 여성장애인 공청회

'한국사회의 여성장애우 문제와 해결책'을 논하는 공청회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최로 4월 7일 오후 2시에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강당에서 열렸다.

신혜수(전주한일신학대학)

○ 행사안내 ○

- 김상진 열사 20주기 기념 초청강연 및 출판기념회
1부: 박형규목사 초청강연
2부: 출판기념회(김상진 평전 「긴 겨울 얼음을 뚫고」)
일시: 11일(화) 오후 6시부터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국제회의장
주관: 김상진 기념사업회/서울대 총학생회 (전화: 722-99067)
- 공청회-법조개혁방안
일시: 11일(화) 오후2시부터 5시 40분까지
장소: 변호사회서초별관 5층
주최: 대한변협(전화: 522-3761)
- 의보관련 공청회
일시: 13일(목) 오후6시-9시
장소: 농업기술진흥원(지하철 4호선 이촌역 하차)
주최: 병원노련, 현총련, 대노협, 사무노련, 기아자동차노조, 전노협, 의보노조등
문의전화: 765-2010(민주노총준비위)

인권운동가를 위한 제1기 공개강좌(13회) 판례를 통해서 본 헌법

강사: 서경석(인하대 강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일시: 4월 8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1시까지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문의전화: 715-9185

<고베 대지진 현장을 돌아보고>

복구정책에 공식적인 차별은 없어도 민족적 차별은 있다

<편집자주> 지난 3월 31일부터 4월4일까지 '한·일 인권포럼' 참가를위해 일본을 방문했던 <인권하루소식> 기자 김수경씨가 고베 대지진 현장을 둘러보았다.

4월1일 현재 고베대지진으로 숨진 사망자 수는 5천 5백명을 기록했다. 이중 재일교포 사망자는 1백50여명이다. 사건발생인 1월17일 부터 두 달이 지난 지난 4월3일 한일인권포럼 참석차 일본을 방문했다가 참사의 그 현장을 방문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나가타역 가까이 있는 고베대지진재일교포피해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고베에서 대어나 줄 곳 이곳에서 살아온 교포로부터 삶의 터전이었던 고베, 지진과 함께 사라져 버린 생활터전, 그리고 이후 대책 등에 관한 대략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재일동포 구두산업에 종사 이곳 고베(고효현)지역 중 나가타구는 교포들이 가장 밀집된 지역이다. 해방뒤 고무신공장에서 노동자로 살아온 이들은 50-60년대 구두산업(합성슈즈) 속에서 자립하게 된다. 구두산업은 60년대 후반 급성장했는데 당시 일본 구두산업의 90% 이상이 나가타구에 밀집돼 있었고 그중 70% 이상이 재일교포들이 운영했다고 한다. 지금도 재일교포 4명중 3명이 학교, 취직, 주택임차 등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통계가 있었던 만큼 그 당시 차별은 더욱 심했을 것 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교포들은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갔다. 그리고 70년 대 이후 구두산업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제3세계 국가로 이동하면서 하강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고베대지진으로 이곳 구두산업의 80-90%가 타격을 입었다. 2개월이 지난 지금 그중 40%가 재건되었고 앞

으로 50%가량 재건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잣대 속에서 일본정부의 피해보상대책은 진행되었다. 외면상 보상에 차별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일본정부가 피해대상으로 잡고 있는 대상은 피난소에 수용중인 피난민에 한 정되어 있다. 정부는 10만 명으로 피난민을 잡고 있었지만 재일교포만 하더라도 피난소보다는 인근 친척집이나 자동차등에서 친내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한다. 그리고 아예 베트남민들은 피난소에 머물지 못한 채 따로 텐트촌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유는 피난소에서 나도는 각종 유언비어 때문이라고 한다. 도둑질을 했다는 등 이들을 괴롭히는 소문과 질서로 피난소에서 반강제로 쫓겨나야 했는데 관동대 지진 당시 재일교포들의 처지가 꼭 이러했다고 한다.

또한 일본정부는 이미 사향길에 접어든 구두산업 대신 다른 산업을 이곳 고베 지역에 발전시킬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정부가 짓고 있는 가설주택 위치설정에 나타나고 있다. 직장과 집이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나가타구에서 30분가량 떨어진 니시구, 기타구에 가설주택을 지은 것이다. 순식간에 집과 직장이 불타버리는 천재지변을 맞은 사람들은 이젠 '나가타구 공동체' 생활마저 버릴 것을 강요받고 있는 셈이다. 일본정부측은 가설주택을 3만호를 지었고, 4월에 1만호를 더짓겠다고 하지만 이는 그다지 반가운 소식이 아닌 것이다. 사망자 1백50명중 50%가 나가타구에 살고 있었고, 지진으로 집을 잃은 교포들이

60%, 그리고 5천명의 교포들이 생활의 전망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한다.

복구순위 차별받는 동포들 앞서 말했듯이 일본정부의 피해보상에 차별은 없으나 복구순위에 차별은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복구작업에서 우선순위는 산 업복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진이 난 뒤 화재로 인한 불길의 주택가에서 치 쏘을 때 '살려달라'는 비명 소리가 메아리쳤지만 소방차는 한대로 오지 않았다고 한다. 같은 시간 대기업 공장에서 불길이 높이 치솟고 있었다는 것이다. 무너진 도로가 세워지고, 전철은

대부분 복구되었지만 주택가에는 아직도 잣대 속에서 1월17일 새벽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따라서 주민들의 직장문제나 교육문제등은 해결과제로 남아있는 셈이다.

재일교포들이 이번에 절실하게 느낀 점은 사회약자로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자신들이 주장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시련이라기 보다는 절망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이번 사건은 아직도 뚜렷한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다. "일본인들보다 몇 배나 공들여 쌓은 삶이 단 20초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한 교포의 말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었다.

이제 남은 일은 민단, 조총련, 여타 세력의 구분을 넘어 민족대단결의 구제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일치를 보고 있었다.

----- 인권간행물 -----

- 한울노동법강좌 8호(95년 3월)-한울노동문제연구소
주요내용:주요판례모음/ 노동법교실-부당해고와 구제/ 판례해설-해고무효판결후 복직거부의 정당성
- 평화의 일꾼 (95년 3월)- 천정연 장기수가족추진회
주요내용:인물탐구-고윤기남 선생님/ 마지막 인사-윤기남 동지 영전에/ 병중에 고개드는 생각(한상봉)
- 전국 민족민주열사 추모사업회 연대회의 제3차 정기총회- 전국민족민주열사 추모사업회 연대회의
주요내용: 94년평가와 95년 사업전망과 계획/ 자료-의문사 진상규명 어떻게 풀 것인가, 부산지역 합동추모사업회 경과보고
- '95고난운동 정책토론회-고난 모임
주요내용: 고난운동의 길, 회고와 전망/ 고난운동의 신학적 조망(심광섭 목사)/ 회고와 고난의 인권운동(양명수 교수)/ 민족통일 회년을 대망하는 고난(박순경)
- 베를(95년 3월 제84호)-한국여성의 전화
주요내용: 기획-가정폭력법 제정을 위한 제1/ 특집-폭력문화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1/ 여성인권활동
- 부산대학교 「자주대오」사건 자료집-부산대 옹공조작음모 분석을 위한 총학생회 산하 비상대책위
주요내용: 자주대오 사건은 조작이다/ 수사과정에서 인권유린 행위(국가보안법, 공안기구, 민족효원 인권선언 / 문민정부하의 공안사건 분석
- 제7차 공청회 자료집 한반도 평화협정체결 어떻게 할 것인가-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주요내용: 한반도 평화협정 어떻게 할 것인가(최규업)
- 한국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덕산종합연구소
주요내용: 80년대 노동운동의 전개와 현단계 상황/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한 과제

<이달의 주제 -노동>
이 균등처우는 거처의 여하에 불구하고 외국인노동자 또는 그 피부양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ILO 19호, 노동자 재해보상에 대하여 내외국인 노동자의 균등처우에 관한 조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산재율은 줄고 사망자는 21.1% 늘어

94년 산재율, 중대재해를 심각한 상태

노동부의 최근 통계 발표에 따르면, 94년 산업재해는 8만5천9백48건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는 2천6백78명이고 재해율은 1.18%인 것으로 나타났다. 94년 산업재해자 총수는 92년 10만7천4백35명, 93년 9만2백88명으로 점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사망자 수는 92년 2천4백29명, 93년 2천2백명으로 감소했던 반면 94년에는 전해에 비해 21.1% 증가하고 있어 사망중대재해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산재보상금으로 9천9백86억원을 지출했고 경제손실액은 4조9천9백억원이라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5조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감안할 때 유사시설부터 모든 국민에게 무의식적인 안전생활이 정착되도록 산업현장은 물론 범국민적인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작업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인에 대해 노동자들이 사소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 △안전보건교육 강화 △보호구 착용·확인점검·정리정돈 등 3대 안전수칙 실천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학기(29, 한국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사무국장)씨는 "노동부는 산재원인을 노동자의 부주의로 꼽고 있지만 오히려 안전시설의 미비와 장시간·저임금이 더 큰 원인이다. 또한 정부통계는 5인미만의 사업체를 제외하고 있어 5인미만의 사업체와 외국인 노동자들, 해외노동자들의 산재사고까지 포함하면 현재 통계의 2배는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정부는 세계 산재율 1위라는 불명예 때문에 무재해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운동은 산재사고를 은폐하고 있으며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리로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업종별로 산재사고는 광업 23천6백89명, 제조업 4천3백37명, 건설업 2만4백71명, 전기·가스 1백32명, 운수·광고·통신 9천3백57명, 기타 산업 9천4백62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사망자는 광업 3백17명, 제조업 7백33명, 건설업 7백43명, 전기·가스 1백32명, 운수·광고·통신 4백13명, 기타 산업 4백53명으로 나타났다.

민정권 울산지부 5명 국보법 위반구속 뱀뱀추기식 수사 의혹

지난 9일 민중정치연합(민정권) 울산지부 간부 고진법(34·지부장)씨등을 포함해 5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고진법씨등 6명은 7일 연행되었는

데 이중 신은영(27·고대사학과졸)씨만 풀려났다.

구속자들은 국가보안법 7조 1항, 3항, 5항 위반으로 경남도경 특수보안3대에 연행되어 현재 학성동 경찰청 대공2분실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7일 오전 7시경 최미아(27·상근자)씨가 연행될 당시 민정권 울산지부 사무실에서 컴퓨터모니터, 디스켓통, 회의록을 압수해갔다고 민정권측은 밝혔다. 민정권은 이번 구속에 대해 "지방자치제 선거와 임투를 앞두고 현장과 정치단체, 노동단체의 활동을 끊으려는 의도"라며 끼워맞추기식 수사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이번 민정권 사무실 침탈은 합법 정치활동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항의했다.

연행자명단: 고진법, 전정희(34·민정권 울산지부 회원), 최미아(29·울산지부 상근자), 유미희(29·울산남부지역노동자연대를 위한

모임 추진위원회 편집부장), 최민영(28·울산노동정책교육협회 간사).

경비교도대원 김성철씨 구타 호소, 자살

마산교도소 경비교도대원인 김성철씨가 휴가중이던 9일 새벽 한강, 양화대교에서 투신자살했다. 김씨는 서울대 경제학과 2년을 휴학하고 군에 입대하여 경비교도대원으로 차출되어 근무해왔다. 김씨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교도소내의 구타와 비리에 대해 호소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과 국방부는 책임을 전가, 사체 인양작업을 미뤄 유족들이 민간단체에 의뢰 10일 오후 김씨의 사체를 인양했다. 김씨의 시신은 세립간호병원에 안치되어 있다.

인혁당 20주기 추모제 열려

인혁당 사건 희생자 12인에 대한 20주기 추모식이 서울과 대구에서 8일과 9일 연이어 진행되었다. 추모제 참석자들은 진상규명, 명예회복, 복권등을 촉구했다.

공판 안내

- 4월 11일 (화) 서선원(선고), 폭력행위등, 10시, 서울지법 422호 최일봉(선고), 국보법위반등, 11시, 서울지법 421호
- 4월 12일 (수) 황인성, 국보법위반, 11시, 서울지법 319호 박치현, 집시법위반등, 2시, 서울지법 321호 이진영, 국보법위반, 2시, 서울지법 424호
- 4월 13일 (목) 함평기, 국보법위반, 4시, 서울지법 425호
- 4월 14일 (금) 김현준, 국보법위반, 10시, 서울지법 311호 선세규, 국보법위반, 3시, 서울지법 423호

주간/인/권/호/름

(95년 4월3일부터 4월9일까지)

<자료>-이창복씨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 (6일, 서울형사지법)중 제7조에 대한 법원 판단 부분

동법(국가보안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위 위헌심판(90년의 헌재 결정)의 판시와 개정 입법(91년 5월 개정된 국가보안법)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엄격하게 제한 해석할 것이 요구되며, 여기서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 마비시키는 등의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을 의미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 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끝 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 변형시키려는 것 이라고 위 위헌심판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원칙에 입각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동조행위의 경우를 살피건대, 동조항의 동조행위는 그 개념 자체가 광범하게 위하고 불명확한 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북한정권의 대남선전주장과 일치되는 언동을 하고, 북한정권에 이롭게 된다는 인식하에 북한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활동을 하지만 하면 그 내용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한 위해를 줄 정도의 것이든 아니든 막론하고 모두 금지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 고, 그러한 행위 가운데서

국가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적 질서의 수호에 관계없는 경우는 처벌에서 배제되고, 이에 실질적인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표현물의 제작, 반포행위의 경우를 살피건대, 동조항의 행위개체인 표현물의 불법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반국가활동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표현물의 내용이 단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비판하거나, 북한의 사회를 찬양하고, 북한집단의 주장과 일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반국가활동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의 건설을 주장하거나, 북한의 통일선전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전복시킬 것을 주장하거나, 자유민주주의의 기초 위에서 사회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개혁을 주장할지라도 그 방식으로 폭력과 혁명을 주장하는 등 폭력 기타 비합법 방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존립과 헌법의 기본질서를 폐지, 전복하는 것을 선동하는 취지가 명시, 묵시적으로 나타나야 그 표현물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동조항의 이적목적이란 반국가단체 등의 이익이 되게 할 이적행위를 함에 대한 의욕 내지 인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적목적은 고의와는 별도로 요구되는 초과 주관적인 구성요건이므로 행위자는 제작, 반포 등의 행위와 행위개체인 표현물이 이적성이 있다는 인식 이외에 이적행위를 함에 대한 인식 내지 의욕이 요구되는 것이다.

<4월3일>

경북 포항시 택시업체 유일교통노조 파업 42일째 / 송기원씨등 19명 국가보안법 구속연장은 위헌 헌재 판결 적용 국가에 손해소송 제기 / 제4·3회생자 제47주년 합동추모제 제주시 탐동광장에서 열려 / 서울경찰청, 현행법 철폐·긴급구속시 범죄사실·구속사유등 알리도록 일선경찰에 지시 / 학술단체협의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방송통신대 강사 김무용씨 석방촉구 성명서 발표 / 중국 동북부 선양공업 중심지에서 노동자 3백명 임금인상요구 가두시위

<4월4일>

대법원 사법시험 합격자수 점차 늘려나가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조개혁안 발표

<4월5일>

통상사업부 석탄사업종합대책 확정발표

<4월6일>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 이창복(전국연합 상임의장)씨 항소심서 국가보안법위반 부분 '전부' 무죄 선고

<4월8일>

세계화 추진위원회, 2천년까지 해마다 6백-1천명까지 법조인 단계적 증원키로 /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 한양대 노천극장에서 공공노조 대동합성제 열려 / 프랑스 전국서 무주택자와 실업자등 수만명, 정부에 실업·주택난등 민생정책요구 시위

<4월9일>

종로구 조계사에서 '외국인노동자마을' 창립식 가져 / 대법원 "증인, 참고인 수사기관에서한 거짓진술은 증거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 / 한총련 소속 5백여명 국가보안법 철폐요구 행동집회 / 김상진열사 20주기 추모행사 11일까지 진행 / 경비교도대원 김성철씨 투신 자살 / 인혁당 4.9열사 20주기 추모식 서울과 대구에서 열려

해설

지난주 가장 주목되는 사건은 전국연합 이창복 상임의장의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한 '전부' 무죄 판결이다. 90년대초부터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문제가 되었던 국가보안법이 사법부내에서조차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는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이신섭 부장판사)는 "국가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해 국가보안법 제7조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등)는 90년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과 91년 개정되어 구체적인 목적과 사실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왔으나 법지행기관에 자의적으로 남용되어 왔던 조항이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에도 부산지법 형사3부가 1항(찬양·고무·선전·동조), 3항(반국가단체 구성·가입)을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헌재에 제기했다. 이처럼 위헌 소지가 높고 인권유린의 요소가 다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이번에 사법부가 재확인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의 존립근거는 갈수록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이달의 주제 -노동>

이 균등처우는 거처의 여하에 불구하고 외국인노동자 또는 그 피부양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ILO 19호, 노동자 재해보상에 대하여 내외국인 노동자의 균등처우에 관한 조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장애인 10% 공천, 비례대표제 참여 촉구

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정책제안등 활동계획

장애인계 17개 단체가 참여하는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공동대표 조일묵등 7명, 공대협)는 11일 오전 10시 홍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자체에 대한 장애인계 입장을 발표했다. 공대협은 각 정당 후보공천시 '장애인 10% 공천'과 '비례대표제 장애인'을 공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 정책과제로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 활성화하고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를 구성할 것 △지방특수교육심사위원회를 강화하고 시·도 교육청에 장애인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 △장애인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건축위원회의 활동 강화와 시·도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할 것을 내세웠다. 또한 의료계활 종합적 서비스를 위해 보건소기능

강화, 장애인에 대한 지역별 기초조사 실시, 장애인 복지 관련 조례 제정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광역의회, 기초의회를 포함해 19명의 장애인이 정계 진출을 했는데, 공대협이 주장하는 요구대로라면 88명의 장애인이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 김성재 상임대표는 "비례대표제와 10% 공천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방자치선거에 장애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대협은 각 정당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26, 27일 있을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자체에 대비한 장애인복지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복지정책제안집을 마련해 전국 후보에 보내는 등 여론형성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군백씨 치료보장등 영역회사와 합의 금호1-6지구철거대책위

금호1-6지구 철거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인)는 10일 행당2동 동사무소에서 금호 1-6지구 재개발 조합장 정금영씨, 신한개발(입산경비용역) 대표 안태욱씨와 가진 회의에서 이주대책

보장과 박군백씨의 보상을 논의했다.

철거민 대표와 재개발조합장, 영역회사 대표는 합의문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수용건물을 합의가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철거하지 않을 것, 가건물을 보수·보강하여 이주할 수 있도록 할 것, 재개발조합과 신한개발은 박씨의 치료비를 책임질 것, 또한 박씨의 장애정도에 따른 보상을 책임지며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앞으로 협의할 것등"을 약속했다.

어린이성폭력피해 심각 지적 -한국성폭력상담소 94년 상담통계 발표-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는 94년 상담통계를 3월 발표했다. 성폭력상담소는 94년 한해동안 1천7백23건의 상담을 받았으며 이중 성폭력에 대한 상담은 1356건으로 전체 78.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20세이상 성인이 51.2%, 14-9세 청소년이 17.6%, 13세이하 어린이가 28.7%를 차지하여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일반강간과 성추행 사례에서 가해자는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62.9%이며 그중 친족, 직장동료·상사, 동네사람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피해후 신고나 고소를 한 사례는 전체의 22.1%로 나타났다. 신고율에 있어 모르는 가해자의 경우는 32.2%인데 비해 아는 가해자의 경우는 14.6%로 훨씬 그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

한편, 94년 9월 열림터를 개설한 이래 열림터를 이용한 내담자들은 지속적인 피해상황에 놓여있는 근친 성폭력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상담소는 열림터 내담자에 대해 "어머니는 물론 친인척 어느 누구에게도 보호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무력한 상황에 놓여있는 어린 학생들"이라고 밝혔다.

또한 93년 12월 위기센터를 개설한 이래 총상담건수 191건 가운데 강간이 50.3%, 강제추행이 23.6%, 강간미수가 12.6%, 특수강간이 5.2%등으로 나타났다.

♠ 인권어록 ♠

△ '법의 지배'를 생명으로 해야할 법원에서 '인의 지배'가 통한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 대법원 인사에 위헌 심판을 제기한 방희선 판사, 시사저널 3월 30일 285호

△ 구호만 난무하는 개혁은 공허할 뿐이다. 지금 문민 정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다.-문민정부 2년의 초상 장울병 교수, 시사저널 4월 13일 285호

김상진 열사 20주기 출판기념회 등 열려

75년 유신헌법과 독재정권의 허위성을 고발하는 양심선언문을 낭독하고 할복자결한 김상진열사의 20주기를 맞아 초청강연회와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11일 오후 6시40분 프레스센터에서 김상진열사 20주기 기념행사준비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이 행사에는 2백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상진(당시 26세, 서울 농대 측산과 4년)씨의 생애를 담은 추모글과 관련자료를 모은 평전 『긴 겨울 얼음 뚫고』(녹두출판사 간, 237쪽)가 현정되었다.

안종건(46, 방통대 교수) 기념사업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김상진 학형이 남긴 '사랑하는 조국의 민주화를 위하여'란 글은 오늘의 우리가 실현해내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20년전 민족을 진심으로 걱정했던 김상진님을 오늘을 살아가는 반성의 지표로 삼자"고 말했다.

초청강연회에서 박형규 목사는 "엄혹했던 시기에 김상진 열사는 정의의 기를 불태우고 힘을 돋웠다"며 "문민정부는 민주화를 위해 피흘리며 죽어간 사람들에게 대한 보상은 커녕 평가도 못하고 있다. 민족의 길이 평화의 물줄기로 타고 흐를 것인지, 현실타협의 물줄기를 타고 흘러갈 것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 세계화를 부르짖기 전에 민족의 자존과 자립, 자유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 농대 총학생회는 지난주부터 김상진 열사 20주기 추모주간을 설정하고 11일 오후 6시 서울농대 교정에서 추모식을 가졌다.

한편, 김상진기념사업회는 김씨의 묘소를 망월동등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치적 탄압 중지 민정련 성명 발표

민중정치연합(대표 김철수, 민정련)은 11일 경찰이 9일 민정련 회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한데 대해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에서 민정련은 "최근 진보 정당 결성과 다가오는 지자체 선거에 공동대응하려는 계획과 이러한 구체적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중정치연합, 남연추, 윤교협, 진정추등 4개 단체가 통합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한데 대해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노동자들과의 연계고리를 끊고 지자체 선거에 대한 공동대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행위"로 규정했다. 민정련은 이어 △ 조작수사 중단, 구속자 석방 △진보정치 활동 보장, △국가보안법 철폐등을 주장했다.

<현장스케치>-한강에서 자살한 경비교도대원 김성철씨

군인도 교도관도 아닌 젊은이의 죽음

한 젊은이가 9일 새벽 한강에 몸을 던졌다. 그와 함께 있던 친구가 말릴 겨를도 없이 그는 한강 밑으로 깊이 빠져 버렸다.

김성철씨(23)는 마산교도소 소속 경비교도대원이었다. 그는 지난해 4월 군에 입대했다. 그는 군에 입대한지 1년도 안되어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이었다.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국방부와 법무부, 경찰을 안타깝게 찾아다니며 사체인양을 호소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정부의 각 부처가 서로 자신들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떠넘기기였다.

국방부-경비교도대는 법무부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양할 수 없다. 경찰-단순자살 사건에 경찰이 나서서 인양작업을 할 수 없다. 우리에게엔 장비도 없다.

"내 자식을 나라를 지키라고 군대를 보냈지, 죄수 감시하라고 교도소에 보냈다"며 항의도 해보았지만, 별 도리가 없었다.

가족들은 난감했다. 2대독자인 아들을 잃은 김씨의 부모는 속을 태웠지만, 한강 물에 가라앉은 아들의 시신을 그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었다. 결국 10일 오후 마포경찰서의 주선으로 민간 인양업자를 만나 돈을 주고 인양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처음 민간업자가 제시한 금액은 7백만원, 겨우 합의 끝에 5백50만원에 인양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가족들은 김씨의 유해를 서대문구청 옆에 있는 세립간호병원에 안치하였다.

김성철씨는 서울대 경제학과 2년을 마치고 지난해 4월 군입대를 했다. 그러나, 입대 직전 그는 불행히도 발목 인대를 다쳤다. 인대 다친 다리는 냉찜질을 해도 약을 먹어도 가라앉지를 못했다. 결국 그는 전북 사병훈련소로 입대했고, 거기서 그는 경비교도대원으로 차출되었다. 법무부 연수원에서 하반기 훈련을 마치고 그가 배속 받은 곳은 마산교도소였다. 하지만, 그는 훈련소 생활이 훨씬 행복했고, 차라리 전방에서 근무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가족에게 보낸 편지로 호소했고, 친구들을 만나 자신의 고통을 호소했다.

"아직 이곳은 원시적인 군대다. 구타와 온갖 비리의 온상이다"라고 말했다고 김씨의 친구들은 말했다. 그는 인대가 아프다고 호소하였지만, 돌아온 것은 고참들의 구타와 '서울대생이 업살 피운다'는 정신적인 모멸감 뿐이었다.

그의 호소가 너무도 안타까워서 가족들이 국군통합병원에 의뢰를 했지만,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입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산교도소측은 김성철씨가 아무런 불편없이 생활했고, 치료도 해주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고통을 느껴야 했다.

그는 지난 1월, 15일간의 휴가 기간동안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했고, 병원에서는 쉬지 않으면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도소내에서 정상적인 치료를 받기는 불가능했다.

몸이 아프다는 호소를 끝으로 그는 자살했다. 그의 외삼촌인 김기정(42)씨는 "조카의 죽음을 두고 요즘 젊은이들이 의지가 약해서 죽었다고 할 지 모르지만, 자신의 처지에서 비리와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절망한 것 아니냐"며 "군인도 아니고 교도관도 아닌 신분으로 만드는 차출제도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김씨의 유해를 13일 오전 벽계화장터에서 화장하기로 하였다.

<이달의 주제 -노동>

상해의 결과 피해노동자가 상시 타인의 도움을 요하는 바와 같은 성질의 노동불능에 이른 경우에는 할증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ILO 17호 조약 제7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조선업 산재율 일본의 12배, 사망율은 5.7배

조선노협 상경투쟁, 산업재해 직업병예방 촉구

산업재해 사망자가 (93년 대비) 21.1% 증가한 이후 중대재해에 대한 심각성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조선노협 노동자들은 11일 서울로 상경하여 산업재해, 직업병 예방을 촉구했다.

94년 조선업 재해율은 전 산업재해율 1.18%의 2배가 넘는 2.49%를 기록하고 있고 95년 4월 4일까지 31명이 사망했다. 이것은 일본에 비해 재해율 12배, 사망율 5.7배에 이른다.

「전국조선업중노동조합협의회」(의장 윤재건, 조선노협)에 따르면 "최근에 조선노협이 한국노동보건직업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한 직업병 검진의 결과는 사업주 책임하에 이루어졌던 94년 정기검진에서 정상판정을 받은 186명의 노동자중 111명이 불치병인 진폐증과 소음성 난청에 시달리고 있

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선노협은 "사업주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검진이 일어나 허술하고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는 무재해 운동이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축소를 꾀하고 있음에 반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자의 회생을 바탕으로 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중단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노협은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검진 실시기관에 대한 노동자의 선택권과 감독권 보장 △유해위험작업 중지권 보장 △국제노동기구 수준의 안전보건관리기준 보장 △기업의 생산제일주의 신경영전략중지 △산업안전보건관련 규제완화 철회 등을 촉구했다.

한편, 조선노협 12일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하고자 했

으나 경찰과 성당측의 저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조선노협은 13일 대우, 삼성, 현대 한진 그룹 본사 등을 방문하여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하경하기로 했다.

노동부 ILO 허위보고 94년 산업재해 통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용목 등)는 국제노동기구에 보고한 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가 허위 보고되었다고 10일 발표했다.

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는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와 '재해자수 = 사망자수 + 부상자수 + 직업병'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노동부는 87년 이후 재해자수를 '사망자 + 신체장애자수'로 축소하여 ILO에 허위 보고해왔다. 그 결과 93년 재해자수 9만 288명이 ILO 『노동통계연감, 1994년』에서는 2만9천9백32명으로 축소되었다.

한국 중대재해율 세계 4위

국제노동기구 『노동통계통감, 1994년』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64개국 중대재해를 국제비교에서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중대재해율은 0.320(93년)으로 체코공화국 0.767(93년), 인도네시아 0.437(92년), 터어키 0.381(93년) 다음으로 높다.

한국의 중대재해율 0.320(93년)을 몇몇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싱가포르 0.140(93년)보다 2.3배, 브라질 0.120(93년)보다 2.7배, 홍콩 0.100(92년)보다 3.2배, 멕시코 0.09(93년)보다 3.6배 높다. 또한 캐나다 0.078(93년)보다 4.1배, 독일 0.070(92년)보다 4.6배, 스위스 0.039(92년)보다 8.2배, 영국 0.012(92년)보다 26.7배 높다.

중대재해율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비교대상국가는 아시아 12개국, 아메리카 12개국, 아프리카 4개국, 유럽 22개국, 오세아니아 1개국이었다.

[자료제공 민주노동준비위]

이에 대해 노동부 공보실은 "국제노동기구가 산업재해에 관한 기준을 일관되게 제시하지 않았고 수치는 각주를 달아서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 후보 공천 신청 재야단체 실무자 구축

지자체 선거를 위해 정당에 공천 후보 신청서를 제출한 재야단체의 실무자가 경찰에 구속되어 보복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1일 민주주의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광주전남연합) 전 정책실장 김영집(32)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긴급구속하고,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있었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광주전남지역위원회 결성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비공식 수배를 받아오다가 이번에 경찰에 의해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줄곧 광주전남연합에 근무해오던 동안 별 제지를 받지 않다가, 민주당 광주시지부에 광주광역시 북구 구의원 공천 후보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날 긴급구속되었다.

드디어 <인권하루소식> 합본 Ⅲ호 출간

신공안정국과 94년 하반기 인권상황을 한 눈에!

주요내용: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실천 / 한국의 인권, 1994 / 합본 I-Ⅲ호 통합 색인(총 360쪽)

책값: <인권하루소식> 독자 5천원, 일반 1만원

** 반값이 늦어져 매우 죄송합니다. 한정본 100부만 일반 판매합니다. 신청은 인권운동사랑방(전화 715-9185)로

재야,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 제한 선거법 87조 폐지 국회청원 입법활동 추진 전국연합등 32개 단체 공동기자회견

선거법 87조가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재야와 시민단체들이 이 조항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연합, 민주노동준비위, 한국 YMCA, 경실련등 32개 재야·시민단체들은 12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이달중으로 열릴 임시국회에 선거법 87조의 폐지를 위한 입법청원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 87조는 "단체는 선거기간 중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거나 이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어 재야,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를 막고 있다. 이를 근거로 최근 검찰은 독자후보를 추대해 선거운동을 벌이겠다는 방침을 정한 전국연합, 민주노동준비위, 전교조, 한총련 등을 선거법 위반으로 내사한다고 밝혔고, 광주에서는 특정후보를 지지한 재야인사에 대해 경찰이 출두요구서를 발부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단체들은 선거법 87조가 헌법 제10조(기본적 인권의 보장), 11조(국민의 평등), 24조(선거권)등에 어긋난다며 "정부가 이 조항에 따라 사회단체들의 선거 활동에 제재를 가할 경우 헌법소원등 법적인 공동대응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 11일부터 유흥식(32)씨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간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유씨는 앞으로 구로구 겨레사랑민주회에서 생활법률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 문국진씨 국가손배소송 1심 선고 재판이 4월 20일(목) 10시 서울지법 559호에서 열린다.

언론의 인권침해 14일내 정정보도 청구 언론연구원 8기 수용자연수 교육

한국언론연구원에서는 12, 13일 양일간 모니터요원과 언론 모니터 단체 관련자를 대상으로 8기 수용자 미디어 연수교육을 가졌다. 12일에는 '광고와 수용자', '보도와 인권', 'CATV 시대의 이해와 전망'의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보도와 인권' 부문에서 함

준표변호사는 "언론, 출판에 의한 개인의 권리 침해"란 주제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가 상충되었을 때 가치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발표했다.

한변호사는 언론기관이 주장해온 특권으로 △국가기관에 정보를 청구할 수 있고 △허위보도를 한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형사상의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고 △명예훼손의 보상을 한 경우에도 보도내용이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일 때 형법상 처벌을 면제받으며 △언론종사원들(편집인, 기자, 기고가등)의 증언거부할 수 있다는 4가지를 들었다. 그러나 언론과 출판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은 △타인의 명예훼손 △타인의 사생활비밀과 자유의 침해 △공중도덕, 사회윤리에 반하는 경우 △선동(범죄나 공공질서의 교란등) 등이다.

이날 참가자들의 관심은 언론보도의 선정성과 명예훼손 부분에 관한 법적 조치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언론에 의해 침해된 때에는 피해자는 14일 이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고, 중재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14일 이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북한의 비전향장기수 가족들이 보내온 편지>

<편집자 주> 지난주에 「인권운동사랑방」 앞으로 일본의 한 동포단체를 통해 비전향 출옥 장기수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씨의 북한의 가족들이 보내는 편지를 보내왔다. 이에 <인권하루소식>은 통일원에 이를 신고하고, 전문을 게재한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인권운동사랑방> 알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귀 단체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고향을 공화국(편집자주-북한)에 둔 비전향장기수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의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기 귀 단체가 우리의 혈육인 비전향 장기수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의 송환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모로 활동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남조선(편집자주-남한)의 비전향장기수들과 같이 참혹하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비전향장기수들이 포로교환에서 제외되고 사상전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5년간이나 감옥살이를 강요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옥 후에도 심한 감시와 천대를 받으며 가족들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혹심한 인권 유린행위가 어데 있겠습니까?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들은 이러한 인권유린행위를 그저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비전향장기수들의 가족들인 우리들은 그들에 대한 지난날의 인권유린행위에 대해서는 제쳐놓고 지금이라도 인권이 보장되어 가족들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절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다 부양대상이고 위급한 환자들이기 때문에 인도주의 정신으로 보아도 하루 빨리 고향으로 돌려보내줘야 합니다.

우리는 인권운동사랑방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그들이 고향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1995년 3월 15일

남조선의 비전향장기수 김인서의 맏딸 김화선, 둘째딸 김정심
함세환의 누이 함숙녀, 김영태의 아들 김룡재

<이달의 주제 -노동>
 상해의 결과 피해노동자가 상시 타인의 도움을 요하는 바와 같은 성질의 노동불능에 이른 경우에는 할증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ILO 17호 조약 제7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음성, 비음성 정보통신 심의규정 마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사상의 자유 침해할 가능성

컴퓨터통신, 700서비스 등의 내용을 심의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회)」(위원장 손봉호 경실련 공동대표)가 13일 오전 법정기구로 발족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데이콤 빌딩 현장에서 헌관식을 가졌다. 그러나 건전한 정보통신문화를 세우기 위해 발족했다는 정보통신부의 입장과는 달리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원회는 그동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속한 민간 자율기구였으나, 설립 근거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일 발효·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정기구로 조직되었다고 정보통신부는 전했다.

제,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 관련인사와 정부주체를 합하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정기회의는 월 1회 열린다. 위원회는 '음성정보심의위원회'와 '비음성정보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음성정보심의위원회는 △700서비스 등 음성정보의 사전심의 △모니터링에 의한 700서비스, 음성사서함 등 공개된 음성정보의 사후심의 등을 맡는다. 한편 비음성정보심의위원회는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전기통신 회선을 통해 유통시키는 데이터베이스의 심의 △모니터링에 의한 사설 BBS, 게시판, 공개자료실, 대화방 등 공개된 비음성정보의 사후심의 등을 한다.

이밖에도 위원회의 행정 지원을 위해서 심의과와 업무과로 구성된 사무국과 '불건전정보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상근임원중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위원회 재정은 보조금, 지원금, 심의료,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

음성, 비음성정보 모두 심의
 위원회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인사로 구성된다. 현재의 위원회는 이어령(전 문화부장관)교수, 강지원(사법연수원 교수)부장검사, 나형수(KBS 해설위원)씨, 이성혜(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장)씨 등 학

제,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 관련인사와 정부주체를 합하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정기회의는 월 1회 열린다. 위원회는 '음성정보심의위원회'와 '비음성정보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음성정보심의위원회는 △700서비스 등 음성정보의 사전심의 △모니터링에 의한 700서비스, 음성사서함 등 공개된 음성정보의 사후심의 등을 맡는다. 한편 비음성정보심의위원회는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전기통신 회선을 통해 유통시키는 데이터베이스의 심의 △모니터링에 의한 사설 BBS, 게시판, 공개자료실, 대화방 등 공개된 비음성정보의 사후심의 등을 한다.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17조 (국가의 질서유지)
 누구든지 국가이념과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반국가적인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2조 (타인의 권리보호)
 누구든지 타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정보의 이용시 정당한 권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을 무단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2조 '타인의 권리보호'를 기준으로 심의를 한다. 이 밖에도 '인권과 명예의 존중' '법과 질서의 존엄성 유지' '사생활의 보호' '청소년 보호' 등 제15조부터 제32조에 이르는 원칙을 두고 있다.

이의신청은 1개월 이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에 따르면 심의를 받으려는 사람은 심의신청서와 정보요약서, 정보내용 등의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심의 접수된 심의물의 처리기간은 심의위원회 개최후 3일이내로 한다. 단, 기준적용이 명확하고 단순 반복적인 사항, 그리고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국에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데 이 약식심의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한다. 그리고 사후심의는 유통정보의 불건전성과 확산정도를 고려해 최단기간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심의기준의 기본원칙은 '최소 규제, 공정성 및 객관성, 비밀보호'이다. 위원회는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17조 '국가의 질서유지'와

32조 '타인의 권리보호'를 기준으로 심의를 한다. 이 밖에도 '인권과 명예의 존중' '법과 질서의 존엄성 유지' '사생활의 보호' '청소년 보호' 등 제15조부터 제32조에 이르는 원칙을 두고 있다.

전후보상·명예회복 촉구 재일한국인단체

「재일한국인의 전후보상을 요구하는 회」등 7개 재일한국인단체는 최근 재일한국인의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며 일본에 대한 한국정부의 압력을 촉구했다. 이들 재일한국인단체들은 군위안부 보상을 민간위로금으로 대신하려는 최근 일본정부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으로 이들은 재일동포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의견고를 한겨레신문에 낼 예정으로 이뜻에 동참하는 한국민간단체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드디어 <인권하루소식> 합본 Ⅲ호 출간

신공안정국과 94년 하반기 인권상황을 한 눈에
 주요내용: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실천 / 한국의 인권, 1994 / 합본 I-Ⅲ호 통합 색인(총 360쪽)
 책값: <인권하루소식> 독자 5천원, 일반 1만원
 ** 발간이 늦어져 매우 죄송합니다. 한정본 100부만 일반 판매합니다. 신청은 인권운동사랑방(전화 715-9185)로, 입금 확인된 다음 우송해드립니다.

김성철씨 자살사건을 계기로 본 경교대 "아직도 경교대는 원시적 군대"

교도소의 경비교도대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로 인해 실제 경비교도대원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이들이 정신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교도대(경교대)는 지난 81년 4월13일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설치법(경교대법)'이 발효되면서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등지에 설치되었다. 대략 전체 인원은 6천명으로 추산된다.

경교대가 설치된 계기는 광주민중항쟁시 시위군중들이 광주교도소를 습격하였던 것에서 비롯된다. 경교대법 제1조에서는 교정시설에 대한 "경비임무와 무장공비등의 침투거부등 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하에"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교도관 대신하는 경교대

하지만, 교도소나 구치소등지에 배치된 경교대원들이 하는 일은 매우 많다. 면회 접수, 수형자 계호에서부터 타격대 역할까지 담당 인원을 경교대의 인력을 활용하여 메꾸는 식이다. 이는 마치 전경이 시위진압에 동원되는 것과 같이 법률에서 규정된 임무 외에 경교대의 소대장이상의 간부들은 교도관 중에서 임명되나, 이들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거의 고참들이 맡게 된다. 이로써 고참과 하급자 사이에 수직적인 인간관계가 가능하여, 일반군대에서는 이미 사라진 구타와 고참들의 횡포가 아직도 횡행하고 있다. 수교(군대로는 병장)가 내무반장을 맡는데, 이들의 권한은 거의 절대적이고, 상교(상병)고참이 공기기수를 담당하여 수교의 수임사항을 착실히 이행한다.

고참이 지배하는 나무생활

작년말에 교도소에서 제대한 한아무개씨(30, 스투자 근무)는 "어떤 날은 수교가 새벽 4시에 술먹고 들어와서 집합을 시켜놓고 치약 뚜껑 위에 원산폭격 등을 시켰다. 고참들의 폭력은 아직도 다반사로 일어난다. 하지만 이런 폭력도 문제지만 거의 하급자를 자신의 종처럼 대하는 인격모독은 더 참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교도소장을 하안집(감독)의 왕이라고 하면 수교는 하안집의 작은 왕"이라고 말했다.

이런 말은 지난해 10월에 안동교도소에서 사망한 최태호씨나 이번에 자살한 김성철씨가 평소 구타를 호소했다는 점을 반증해 준다. 아직도 기수집합이나 조(군대로는 분대) 집합, 중대집합등이 횡행하고 있고, 이런 집합을 통해 소위 '군기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들이 외부진료를 받는

것도 무척 힘들다. 7교도소에서 울초에 제대한 한아무개(25, 서울대 학생)씨는 "경교대가 아프면 일반적으로 수행자들과 동일한 과정의 치료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교도소에서 죽을 정도가 아니면 외부진료를 보내주는 걸 봤는가?"고 되묻는다.

교도소 비리에 노출

이런 경교대들은 교도소내의 비리에도 노출되어 있다. 한 교도소에서 30개월의 복무를 하게 되어 고참정도되면 교도소의 구조와 인간관계도 확실하게 꿰뚫는다. 경교대 중에서 영치물 차입 담당, 매점병을 특

수보적이라고 한다. 이는 그만큼 생기는 게 많다는 얘기다. 몇년전만 하더라도 담배장사 정도는 공공연하게 했다고 한다.

양심선언 군·경 대책위원회 간사인 김영환(30)씨는 "전경과 경교대는 군인으로 복무하기 위해 입대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차출하는데 문제가 있다"며 근본적인 개선책을 촉구했다.

13일 오전에 벽제화장터에서 한중의 재로 사라졌을 김성철씨는 죽기전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래도 훈련소 생활이 행복했습니다. 이곳 교도대 생활은 원시적 군대이며 온갖 구타와 비리의 온상"이라고 고발하고 있다.

◆ 행사안내 ◆

- 서울민주시민연합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공연
 4월 15일 오후 5시 30분-9시/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
 순서: 기념식/10년사 다큐멘터리 상영 및 축하공연/연회
 주최: 서울민주시민연합(329-5321)
- 4월 혁명 35주년 전시 '껍데기는 가라'
 4월 15일-24일/이십일세기 화랑
 주최: 사월혁명연구소(888-3682), 역사문제연구소등
- 천정연 장기수가족후원회 '봄 야유회'
 일시: 4월 16일 오전 8시30분 명동 평화방송 앞에서 출발
 장소: 광릉 수목원/문의전화: 719-2172
- 민가협 '정기산행'
 일시: 4월 16일 오전 10시 우이동 그린파크에서 출발
 장소: 북한산/주최: 민가협 양심수가족후원회(763-2606)
- 김종수·박영진 열사 합동추모제
 일시: 4월 20일 7시/장소: 구로노동연구소
 문의: 유가협 (763-4700)
- 제7차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총회
 4월 22일 오후 3시/장소: 종로성당
 주최: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763-2606)
- 노래극 '자! 우리 손을 잡자'
 4월 22, 23일 오후 6시/연세대 노천극장
 주최: 좋은세상(336-5706)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 '월레기도회'
 주제: 고문 피해자 문국진씨를 위하여
 일시: 4월 27일 (시간미정)/장소: 고난 사무실(393-4662)
- 가족과 성상담소 제2기 상담원 교육
 일시: 4월 27일-6월 8일 화, 목 10시30분-12시30분
 장소: 경동교회 교육관
 주최: 여성민우회 부설 가족과 성 상담소(269-5763)
- 순회무료법률상담
 4월 29일 9시30분-12시30분/강동구청
 주최: 서울지방변호사회(597-1919)

인권운동활동가를 위한 공개강좌(14회)

형법-우리나라 형법의 역사

강사: 김순태(민주주의법학연구회 연구원)
 일시: 4월 15일(토) 오전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장소: 인권운동사랑방(전화: 715-9185)

<이달의 주제 -노동>

상해의 결과 피해노동자가 상시 타인의 도움을 요하는 바와 같은 성질의 노동불능에 이른 경우에는 할증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ILO 17호 조약 제7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으로 철거하는 나라

빈민대회, 용역단속반 해체, 강제철거 중단등 촉구

「민중생존권 쟁취와 민중운동단합 분쇄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14일 오후 1시 종로공원에서 "95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전국빈민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에는 철거민, 노점상, 장애인 등 약 1천여명이 참석하여 △불법용역단속반 해체 △강제철거·개발악법 철폐 △영구임대주택 확보 △장애인과 생존권 확보등의 구호를 외쳤다.

공동대책위는 재벌에게 토지가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전체 민유지의 65%를 전체인구 중 1.3%에 불과한 소수가 독점하고 있고, 이 중에서 30대 재벌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가 43.3%에 이르러 23개 재벌이 소유한 토지는 3,123만평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벌토지를 환수하여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가 인용한 유엔산하기구 HABITAT의 보고서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철거가 이루어지는 나라"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한국을 꼽고 있다.

대회에서 「전국노점상연합회」는 최근 벌어지고 있

는 노점상 단속에 대하여 "용역단속반의 폭행과 구청측의 과태료 부과"를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4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집중단속 과정에서 사당동 남성시장 노점상들은 용역단속반의 폭행으로 전치 2주에서 6주까지의 부상을 입었고, 얼마전 분신한 고 최정환씨도 구청용역반의 폭력에 다리가 부러지기까지 했다. 또한 3월초 강동지역 노점상은 2백5십6만원 이라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강동구청은 부당이익취득, 도로교통법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대회장에는 얼마전 있었던 금호 1-6지구 철거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철거민들의 고공농성 사진이 전시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여성 상담사례집 펴내 여성의 전화, 두번째로

「한국여성의 전화」(회장 신혜수, 여성의 전화)는 「여성상담사례집」(126쪽)을 88년에 이어 두번째로 펴냈다. 여성의 전화에서는 전화·면접상담, 집단상담등

을 통해 매년 7천여건의 상담을 해왔다. 사례집에는 남편의 구타, 성폭행과 외도를 비롯해 시집갈등, 부부갈등 등 가정문제를 예기하고 극복과정이 실렸다. 여성들의 전화는 "이 사례집은 많은 피해여성들에게 공감과 용기를 줄 것이며, 상담기관 상담원들에게 자료로써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가격 4천원, 문의 269-2962(출판홍보국 남중지간사)

재판부에 편지보내기 우조교 사건 재판부에

「여성민우회」는 최근 결심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서울대 우조교 사건 담당 항소심재판부에 올바른 판결을 요구하는 편지와 의견서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대 우조교 사건은 94년 4월, 1심에서 3천만원의 부분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사용주와 국가책임에 대한 청구부분이 기각되

어 우조교측은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항소하였다. 지난 3월 21일 항소심 7차 재판까지 진행되었고 4월 18일에 결심이 있을 예정이다.

편지보낼 곳 :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701-1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 9부 박용상 부장판사 귀하(137-735)

장애아동과 어깨동무 오늘 오후 2시, 재동국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성재)와 참여연대(공동대표 홍성우등)는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재동국민학교 교정에서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통합놀이 한마당-어깨동무 놀이를 펼친다.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통합교육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한 이 행사에는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각 1백30명씩이 참가하여 대동놀이와 부분놀이 등을 가지며 이를 통해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하나로 어우러져 서로에 편견을 해소하고 서로 동등한 주체임을 인식하는 자리로 만들게 된다. 문의전화는 521-5364 또는 796-8364.

드디어 <인권하루소식> 합본 Ⅲ호 출간

신공안정국과 94년 하반기 인권상황을 한 눈에 주요내용: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실천 / 한국의 인권, 1994 / 합본 I-Ⅲ호 통합 색인(총 360쪽)

책값: <인권하루소식> 독자 5천원, 일반 1만원
** 발간이 늦어져 매우 죄송합니다. 한정본 100부만 일반 판매합니다. 신청은 인권운동사랑방(전화 715-9185)로, 입금 확인된 다음 우송해드립니다.

인권운동활동가를 위한 공개강좌(14회)

형법(I)-우리나라 형법의 역사

강사: 김순태(민주주의법학연구회 연구원)
일시: 4월 15일(토) 오전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장소: 인권운동사랑방(전화: 715-9185)

해방 50주년 맞아 양심수 석방 노력 약속

방일중인 김대중씨와 한일의원연맹 일본측 회장

제일교포양심수 가족들은 14일 방일중인 김대중씨를 도쿄 오후라 호텔에서 만나 양심수들의 석방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씨는 "올해는 해방 50주년이라 좋은 기회를 맞게 된다"며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손유형씨의 부인, 서순택씨 부인, 이현치씨 친형, 김방주씨 아들등이 참석했다. 현재 제일교포 양심수는 7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하고 있으며, 이중 손유형씨는 건강상태가 심각하여 가족들은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석방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들은 같은 날 한일의원연맹 일본측 회장인 다게시타 의원과 면담하고 양심수의 석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일한국인 정치범을 지원하는(일본) 국회의원 간담회」등 지원단체들은 해방 50주년을 맞이하는 8월에 모든 양심수의 석방을 실행하기 위해 국회의원 서명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야 회원 실행 선고 규탄 광주전남연합등 성명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광주전남연합)은 14일 광주전남연합 선전부장 최영신씨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징역 1년6월을, 자격정지 1년의 실행을 선고한 것에 대해 지역차별이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전남연합은 성명에서 "광주에서의 연이은 구속과 실행선고는 바로 현정권의 차별정책과 5.18 15주년을 맞이해서 일어나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라는 국민주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규탄했다.

김영집(32, 전 광주전남연합 정책실장, 내일연 부회장)이 10일 전남도경에 구속된 데 대해 광주의 내일을 여는 일하는 사람들의 연합회(회장 민동곤, 내일연)도 12일 성명을 발표했다. 내일연은 성명에서 "경찰당국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재야출마자를 긴급구속한 것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 재야민주세력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또, 경찰이 김씨를 긴급구속한 시점은 "법민권 광주지역위원회 결성 10여개월이 지났고, 광주전남연합 정책실장을 그만 둔 것도 이미 3년전의 일"이라며 "경찰은 무리한 법적용으로 능력있고 참신한 민주인사의 제도정치 진출을 가로막지 말 것"을 주장했다.

정부추진 사법개혁 반대 대한변협, 재고 요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선, 대한변협)은 14일 대의원동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시한을 두고 졸속추진되고 있는 사법개혁은 재고되어야"하며 "먼저 사법부의 대원칙과 단계적 일정에 관한 합의의 한 후,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는 "인력과 설비의 여건이 전혀 보조되지 않고, 배출 인력의 자질에 대한 보장이 없다"며 더 이상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이 세계화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개혁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회의를 표명, "대법원 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이 적정 법조인선발인원수 한 것은 적정 법조인정산에 관하여 정견이 없음을 드러내며 250명 정도라고 표명하다가 이번에 급작히 매년 600명 내지 1천명 정도

◇인권간행물◇

- 「평화의 일꾼」 4월호-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장기수가족후원회(☎719-2172)
· 주요내용:인물탐구<배동준선생님>등. 12쪽
- 「고난함께」 95년 봄호-고난받는이들과 함께하는 모임(☎393-4662)
· 주요내용:인권의 의미와 변천(양명수)/오늘의 인권-장애인의 실질고용 필요하다(강희석)/커가는 썩 짓밟기-우리나라 청소년의 인권(최소영) 등. 120쪽, 2천원
- 나눔터-한국성폭력상담소(☎576-7172)
· 주요내용:특별좌담-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화의 진단과 올바른 방향 모색/연계기획-직장내 성폭력, 알고 예방합시다(1) 등. 20쪽
- 대한법조인사목-현암사(☎365-5051)
· 주요내용:법조계 인사들의 출생연도·출신학교·학위·시험합격·전현직 근무처·직위·저서등을 담았다. 5천원
- 김상진의 삶과 죽음 '긴 겨울 얼음 뚫고'- 김상진기념사업회 지음, 녹두퍼냄(☎312-9826)
· 주요내용:시 '죽음을 위한 5중주'(김정환)/고 김상진 생애/추모시, 성명서등. 237쪽
- 함께 가는 여성 4월호-한국여성민우회(☎269-5763)
· 주요내용:가족과 성 상담소 출발(유경희)/진단-시간제 고용의 실태와 정책방향. 24쪽
- 노동과 진보 20호-진보정당추진위원회(☎323-4963)
· 주요내용:토론회-복지-인간다운 삶을 위한 '국민생활개선'을 확보하자(김연명)/기고-제2의 사북사태, 극적으로 타결되다(김창완), 하청작업장은 '인간도살장'인가-한진중공업 화재(이상순). 72쪽, 3천원
- 후원회 소식-민가협 양심수후원회(☎763-2606)
주요내용:양심수 가족을 찾아서-동의대사건 윤창호씨의 어머니를 찾아서등. 20쪽
- 민고협 월보 94.3-민주화를 위한 전국고수협회의(☎882-3683)
· 주요내용:특집-경과보고 : 경상대학교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은 계속되고 있다/성균관대학교 정현백교수 안기부 불법연행 사건(경정보도청구소송 원고승소판결문)등. 71쪽
- 우리네 아이들 95.3-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275-8505)
· 주요내용:지상강연-아동의 권리조약, 그 성립에 이르는 역사(인권운동사랑방)/긴급분석-95년 보육사업지침(박금희)등. 62쪽, 3천원
- 월간 「함께걸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521-5364)
· 주요내용:교육-한 조기교실 교사의 통합교육 체험기(주혜영),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독일 통합교육의 주요 이론들(김성애)/지상강연-장애인과고용촉진법 개정안에 관한 공개토론회 등 84쪽, 2천원

<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지난 6일 서울지법 형사 함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은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법 공안2부(정진규부장) 강익중 검사는 매우 이례적으로 12일 검찰기자실에서 다음의 자료를 배포했다.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이를 입수, 전문을 실는다. 공안 검찰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이 자료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 차이가 사법부에서조차 존재함을 극명히 보여준다. -편집자주

<이창복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무죄판결에 대한 상고이유>

○무죄판결에 대한 평가

-이창복사건에 대한 함소심무죄판결은 대법원의 판례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됨

-국가보안법 7조의 표현행위등의 불법성판단기준으로 반국가활동성, 즉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등 해석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2.3.31. 선고 90도 2033호)의 소수의견이 나타난 해석원칙을 그대로 인용한 것임

-그러나 당시 다수의견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제7조 5항과 관련하여 고의 이외에 별도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이적목적의 요구되거나, 적극적인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며, 표현물의 내용이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에 동조하는 이적성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구성요건은 충족하다고 판시

소수의견에 의하더라도 그 취지는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 및 '위험의 현재성' 유무에 따라 이적성을 가려야 한다는 것으로 '폭력 기타 비합법적 방법'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폐지할 것을 유도 또는 선동하는 경우는 위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대표적인 예시로 열거한 것에 불과함

○무죄판결의 부당성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의 일환인 연방제통일방안등을 주장한 사실만으로는 반국가활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우리의 안보실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기초한 것임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 발효등 시대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남적화통일의 기본전략을 고수하는 등 이중성을 견지하고 있고, 남북합의서 발효직후인 92.3. "교류협력의 목적은 경제교류보다 통일선전 전략에 따른 남측 좌경친북세력의 자유왕래에 역점을 준

다"는 등 내용의 당원비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음,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북한 노동당 규약과 사회주의헌법등에서 '하나의 조선'이라는 혁명논리에 입각한 대남적화통일 아래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철폐, 자유민주주의 체제전복등을 투쟁전술, 목표로 사회혼란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 현재 남북관계의 실상임

(조선로동당 당규약 전문)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구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 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민주주의 사회주의 헌법 제9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북반구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따라서 북한의 위와 같은 대남혁명전략, 전술의 일환인 주한미군철폐등이 이루어질 경우 국가의 존립 안전은 위협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국론이 분열되고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현혹되는 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의 자유민주체제는 더욱 구체적이고도 가능한 위협에 빠져들게 됨

-자유민주체제 부정을 유도·선동하면서 "폭력이나 비합법적 방법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 주의

주장내용이 주한미군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방위조약 폐지,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수용등 우리의 자유민주체제를 구체적이고도 개인성있게 위협하는 것인 이상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전복·폐지의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게 되며 결과적으로 "북한의 폭력이나 비합법적 방법"을 유발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임

-더욱이 이번 판결의 결과로 위와같이 '폭력이나 비합법적 방법'을 언급하지 않고 우리의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하는 언동이 무제한 허용될 경우

-이는 곧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조장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북한은 이를 대남공작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결국 우리의 국가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에는 치명적 위협요인으로 등장할 것임

<끝>

제3자 개입금지 철폐 오늘, 해고노동자대회

민주노총준비위 구속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특별위원회는 15일 오후2시 중대공원에서 전국 해고노동자 대회를 민주노총준비위,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제3자 개입금지, 노조 정치활동 금지 등 제반 노동악법 철폐와 전국 구속, 수배, 해고 노동자 원상회복을 요구하게 된다. 특히 노동자, 해고자, 학생, 시민 등 참석한 사람들이 '제3자 개입' 서명을 통한 제3자 개입금지 철폐를 결의하게 된다. 전해투는 다음주에 해고노동자 원상회복을 위한 국회에 입법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달의 주제 -노동> 이 균등처우는 거처의 여하에 불구하고 외국인노동자 또는 그 피부양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ILO 19호, 노동자 재해보상에 대하여 내외국인 노동자의 균등처우에 관한 조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제3자 개입금지 어기기' 집단적 결의 해고자등 1천5백명 집회, 경기동부지역 노조위원장들도

노동자들이 노동악법을 철폐를 위해 '제3자 개입금지 어기기'를 집단적으로 결의하고 있어 그 파장이 주목된다. 해고자들과 민주노총준비위, 한총련 등 재야단체들은 15일 오후2시부터 중대공원에서 전국해고노동자대회를 열고, 노동악법 철폐와 구속·수배·해고 노동자의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1천5백여명은 투쟁 결의문에서 "해고자의 복직을 넘어서서 구속, 수배, 해고문제의 원인이 되는 노동악법 철폐투쟁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문 앞에서는 15일 약 800명의 성남, 광주, 인천, 하남 지역의 노동자와 청년학생들이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는 경기동부지역 노조대표자 30여명이 한화전자정보통신노조(위원장 정부중, 한화노조)에 대한 탄압에 맞서 '제3자 개입선언'을 발표하였다.

경기동부지역 노조위원장들 한화노조에 개입선언

한화전자정보통신(주)는 7일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5명을 해고하고 14일에는 사무국장등 노조간부 7명을 추가징계하였고, 노조위원장등 4명을 회사측이 고소, 고발하였다. 한화노조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자 이 지역의 노조위원장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연대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또,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대표 장영길) 소속 회원 60여명은 17일 노동부를 방문하여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을 위한 노동부장관 면담을 요청하였다. 특히 정부투자기관의 해고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정부가 책임이 있다며 이들 해고자들의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이날 노동부 측은 이들의 노동부장관 면담을 거절했다. 전해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항의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적극적 제3자 개입 서명

참석자들은 △노동운동단 압 중단 △노동악법 개정 △구속, 수배, 해고자의 원상회복 △임금가이드 라인 철폐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원상회복을 정부에 촉구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결의의식으로 화형식을 갖고 '노동악법의 조항중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어겨서 철폐하자'는 선언을 하였다. 이 데모에 적극 지지, 동참하겠다는 서명을 받아 대회자에서 1천명의 서명을 받았다.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울지로를 거쳐 울지로입구, 가두행진을 하였다.

한편,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화전자정보통신 회사 정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 부풀리기 구속 드러나

부산대 '자주대오'사건의 1심 재판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지만, 처음의 경찰과 군사정보통신노조(위원장 정부중, 한화노조)에 대한 탄압에 맞서 '제3자 개입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중순 15명의 구속자를 내면서 부산대 총학생회와 한총련을 장악하려 기도한 '주사파 조직'이라고 경찰과 군사정보통신노조에 의해 발표되었다. 특히 사건 발표때와 달리 강령, 규약 부분은 전혀 거론되지 못하였다. 대부분 애초 혐의를 적용하였던 국가보안법 7조의 표현물 소지 담독 정도의 수준에서 재판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이광영】

공판 안내

- 4월18일(화) 양윤모, 노동쟁의조정법 위반등, 오후3시, 서울형사 418호 이승우, 국보법 위반등, 오전10시, 서울형사 311호 최희, 국보법 위반등, 오전10시, 서울형사 311호 김준우, 국보법 위반등, 오전10시, 서울형사 319호 □ 4월19일(수) 김연환, 노동쟁의조정법 위반등, 오전10시, 서울형사 422호(선고) 호용철의, 강도살인, 오후2시, 서울형사 425호 김수연의, 살인등, 오후3시, 서울고등법원 302호 □ 4월20일(목) 문국진, 고문후유증국가손배소송, 오전10시, 서울민사 559호(선고) 김미라, 국보법 위반등, 오전10시, 서울형사 424호(선고) 김영옥, 국보법 위반등, 오전10시, 서울형사 318호(선고) □ 4월21일(금) 김병목, 국보법 위반등 오후2시, 서울형사 418호 박치관, 국보법 위반등 오전10시, 서울형사 319호(선고)

<현장 스케치-4월혁명 전시회 "껌대기는 가라"> "이승만과 나라 죽이기" 확인

지난 2월5일부터 3월6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이승만과 나라세우기'전과는 정반대의 '이승만과 나라죽이기'전이 4월15일부터 시작되어 24일까지 계속된다. 「사월혁명연구소」·「역사문제연구소」·「민예총 민족사적작가협회」가 공동주최하는 4월혁명 35주년 전시회 "껌대기는 가라"는 '반복되는 부끄러운 역사'를 바로잡고, 독재자 이승만의 반민족·반민주·반통일성을 부각시키는데 역점을 둔 사진, 시화, 회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회 첫날인 15일 오후 4시경 인사동에 위치한 21세기화관은 입구에서부터 진한 향내가 났다. 전시장 한편 가득 지난 독재시절 숨겨진 1백30여 열사들의 초상화가 그려진 걸개그림이 걸려있고, 4·19혁명과 이승만의 행동을 보고하는 사진과 글이 전시되어 있다. 그리고 전시장 한가운데 축하객들인지 문상객들인지 한무대가 앉아 막걸리잔과 고사떡을 놓고 얘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 장면은 흡사 누군가의 장례식 마당에 들어선 느낌이었다.

전시장 곳곳에는 당시 숨진 이들의 글들이 전시되어 그때의 긴박감을 떠올리게 하기도 했다.

"...지금 저의 모든 친구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립니다...모든 학우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 것입니다. 어머니...저는 생명을 바쳐 싸우려고 합니다...무척 비통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온 겨레의 앞날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기뻐해 주세요..."-4·19혁명 희생자 진영숙(당시 14

세, 한성여중 2년)양의 유서중- 이승만의 업적을 평가하면서 "모든 흠과 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것은 성공작이요 천행"이라고 평한 어느 일간지의 사실은 이 젊은 죽음을 단지 '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장기수 강철순씨 운명

출옥 장기수 강철순씨가 17일 새벽 5시 위출혈에 의한 심장마비로 운명하였다. 향년 61세. 그는 일본 관련 간첩사건으로 72년 검거돼 18년간 복역중 89년 출옥하였다. 출옥하여 서화표구업을 하였고, 평소 지병으로 간염을 앓아 왔다. 강씨의 시신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다.

이부영의원 재판 연기돼

민주당 부총재 이부영(국회의원)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한 심리가 17일 서울형사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렸으나, 통일원 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관계로 재판이 연기되었다. 다음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일본군위안부 영화 시사회

일본군 위안부 출신 여성들에 대한 기록영화 '낮은 목소리-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2' 시사회가 오늘 오후8시 서울 명동성당 문화관에서 열린다.

주/간/인/권/흐/름

(895년 4월10일-16일)

<4월10일>

검찰 '4대 제도개선책' 발표, '변호인 집건·교통컨보장' 등/세계보건기구 '전세계에서 해마다 1억2천만건 재해 발생, 20만명 사망' 발표/프랑스 체신노동자들 고용증대 요구하며 격렬시위

<4월11일>

마산상고 60주년 마산의거로 숨진 김주열열사에게 명예졸업장 수여/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에 상정, '긴급구속제 폐지, 체포장제 도입' 뼈대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보고서에서 여성임금 남성들보다 40% 낮다고 발표/독일 10개 민간단체 바스프등 3개 화학회사 상대로 2차 대전 당시 강제노역 당했던 생존자들에 대한 보상 촉구 운동 시작

<4월12일>

경기여성 전교생 2천4백여명 동료학생과 교사들의 형사처벌에 항의, 수업거부·연좌농성/미연방 지방법원, '과태말라피역장군은 고문피해자 오르티스등에게 배상금으로 4천7백50만달러 지불하라'고 선고/전국조선업노동조합협의회 소속 50여명 산재, 직업병 해결책 요구 시위/한국소비자보호원 51개 병원대상으로 수집·분석한 수술약관, 입원약관 분석결과 발표-'수술후유증에 대해 환자의 이의제기금지' '분쟁발생시 병원이용자의 병원계소권 제한'

<4월13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컴퓨터 통신과 음성정보서비스 내용심의 시작/형사단독판사 40여명 대법원에 '사회봉사명령제' 도입 건의

<4월14일>

광주기독교연합회 피터슨목사의 5·18 증언록의 번역본 48쪽과 사진15장 공개/전국빈민대회 1천여명 참석/전국연합등 소속 70여명 '일본의 부전결의 반대 움직임에 대한 규탄집회'/정강용(절단장에 3급)씨 '7급 행정직 공개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 및 임용절차의 무불이행에 관한 행정소송' 선고공판

<4월15일>

광주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3천4백16명에게 보상금 1천8백17억원 지급결정, 보상금지급업무 사실상 마무리/성남지역 노조·노동단체 대표 30명, 제3차 개입연대투쟁 공식선언/전해투 소속 5백여명 전국해고노동자대회 개최

해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지난 13일 발족되었다. 컴퓨터 통신과 음성정보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윤리위원회가 정한 심의규정에 따른 심의를 받게 된다. 의견상으로는 건전한 사회문화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과연 그 뿐인가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상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의 침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 공연되지 않은 작품 대본을 문제삼은 희망새 사건과 사노맹 문건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현대철학동우회 사건은 '심의규정'이란 것이 없던 시절에 행해진 일이다.

오늘은 4월혁명 35주년 기념일! 민주주의와 통일을 향한 4월 열사들의 높은 정신을 되새깁시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태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유아 9백71명중 68명 학대, 방임 당해

아동학대예방협회 13회 세미나, 아동학대 예방 대책 절실

13회를 맞는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회장 박명윤) 정기 세미나가 '아동학대 및 방임대책'을 주제로 18일 오후2시 프레스센터에서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동준(충신대 유아교육학과)교수는 "유아학대 및 방임실태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란 주제로 저소득층 밀집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3월6일-18일까지 서울시내 있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10개

어린이집교사 43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설문결과에 의하면 학대, 방임되는 유아는 전체 유아 9백71명 중 68명(7%)로, 교사 1인당 1.58명의 유아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가정유형은 편모가정의 유아가 4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이 정상가정(32.4%), 편부가정(10.8%)순이다. 또한 방임의 원인은 경제적 빈곤, 가정불화, 무관심 무책임, 부정적인 양육태도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아동학대신고 제도의 필요성은 교사의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었으나 현행신고제도에 대한 인식도는 27.9%에 불과했다. 특히 현행 신고제도를 이용하는 교사는 단 한명도 없었다. 김동준교수는 아동학대와 방임의 예방을 위해 "국가 는 아동학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아동과 그 가족을 국가정책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경제·사회적 정책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탁아서비스, 부모교육프로그램의 실시등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 △예방과 치료를 위해 아동보호서비스의 도입과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법적 뒷받침 제공 △피해아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자녀를 학대, 방임하는 부모를 위한 태 노인은 인민군으로 전쟁에 참가했다가 빨치산 활동 중 54년 체포되어 71년 만기출소했으나 75년 사회안전법으로 재수감되어 15년간 복역하고 89년에 출소했다. 현재 세 노인들은 간염, 심장장애, 위질환, 정신신경계질환, 신경통등을 앓고 있다.

한편, 「김인서,함세환,김영태 노인등 송환추진연락회의」의 소속 단체 불교인권위원회, 천정연 장기수가족후회회, 민가협등은 앞으로 서명운동과 장기수-양심수 석방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북한 출신 비전향 출옥 장기수 송환 호소

18일 김인서씨등 기자회견

53년 한국전쟁 종전 이후 북한으로 송환되지 못한 인민군 출신 장기수 김인서(70), 함세환(64), 김영태(65)씨는 18일 오전 10시30분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으로 보내줄 것을 호소했다.

비전향 장기수로 출소한 세 노인들은 정부, 사회단체에 보내는 호소문에서 "전쟁포로를 송환하는 것은 남과 북이 화해의 장을 여는 것은 물론 인도적 견지에서라도 지극히 합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서 노인은 51년 지리산에서 체포되어 3번에 걸쳐 33년 7개월을 복역했고 사회안전법 폐지이후 89년 10월 청구 보안감호소에서 출소했다. 함세환 노인은 53년 숙리산에서 총상을 입

조성 등을 내놓았다. 이밖에도 홍강의교수가 '정서적 방임으로 유발된 유아기 발달의 문제제'를 직접 사례를 통해 발표했고, 이숙희(춘의사회복지관) 상담실장이 '방임된 아동을 위한 사회사업적 개입사례와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 3명 집행유예 석방돼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최진갑)은 18일 오전10시 부산지법 103호 법정에서 지난 2월 구속된 부산대 '자주대오' 사건의 장석복(22, 자주대오 94년 총책), 락재우(26, 자주대오 공과대 대표), 변하정(23, 자주대오 인문대 대표)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장씨는 징역2년,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과씨와 변씨는 각각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17일 열릴 예정이던 김수옥(92년 총학생회 부회장)씨에 대한 결심공판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 인권어록 ☆

지금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썩은 기득권을 위해 이승만을 재평가하려는 것이며,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한 결과는 유사한 권력의 나라죽이기는 반복할 것임에 부합하는 4월의 정신은 4월의 영령과 5·18 광주의 울부짖음을 기억하고, 두 눈 똑바로 그들의 평가를 지켜보아야 한다.

이승만은 이 나라를 죽였다.
그러나 이승만이 이 나라를 죽였다고 몇몇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이 나라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4월혁명 35주년 전시회 팸플릿 '껌대기는 가라'에서

일본군 중군위안부 증언등 조사활동

5월, 유엔인권소위 특별보고관 최초 방한

유엔인권위원회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인 라디카 코마라스와미(Ms. Radhika Coomaraswamy) 씨가 군 위안부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라디카씨는 생존해 있는 군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을 듣고 정대협등 민간단체와 정부대표를 만나 조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전쟁중 여성에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특별보고관'인 린다 차베스(Ms. Linda Chavez)씨도 23일부터 27일까지 군 위안부 조사활동을 위해 방한한다. 차베스씨의 방한은 94년 제46차 유엔인권소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다.

특별보고관들은 조사활동 이후 보사보고서를 작성, 유엔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대협 윤미향씨는 "유엔 특별보고관이 공식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최초의 일로서 군 위안부 문제가 유엔 문서에 기록으로 남겨지게 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조사활동을 통해 일본의 전쟁범죄가 밝혀지고 진상이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코마라스와미씨는 한국에서 조사활동을 마친 후 20일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고 차베스씨는 27일 일본으로 갈 예정이다.

해고자 전경에게 폭행당해 7명 병원후송

18일 오후 4시 30분경 과천 노동부 앞에서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전경투 소속 해고 노동자들에게 전경 150여명

이 집단폭행을 가했다. 전경들의 폭행으로 7명의 해고노동자가 실신하여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 중 김동연(삼미종합특수강 해고노동자)씨는 30여분간 곤봉과 방패로 폭행당해 구토를 일으키고 뇌진탕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삼성의료원과 제일형외과에 입원 치료중이다.

한편, 함께 갔던 해고노동자 30여명도 모두 경찰에 강제연행되었다.

<병원 후송자> 김동연, 김영균, 조정모, 장영길(전 해투 대표), 나한균, 연기흠

국제연대 필요성 공감 참여연대, 1차 국제포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오재식, 홍성우)는 17일 여연, 환경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연대포럼(가칭)'을 개최하였다. 정기적으로 개최할 국제연대포럼은 최근 국제동향 정보를 나누고 지혜를 교류하는 자리로 월 1회 월요일 저녁에 열린다.

17일 발표자로 나온 장호순(크리스찬 아카데미 사회교육원)씨는 유럽 주요 민간단체 방문경과 및 소감에서 "서방 강대국이 세워놓은 국제정치와 경제발전의 틀에서 희생당하고 있는 제3세계 민중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간단체들이 국제연대를 통해 적극적인 비판과 대안모색을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씨는 최근 문민정부 등장 이후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사회문제가 국제사회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한국 민간운동의 역사와 현실을 소개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제6회 4월혁명상 윤상원, 신창균씨 수상

4월혁명연구소(소장 황건)는 18일 오후 2시 대학로 홍사단 강당에서 회원과 시민, 학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혁명 35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광주민중항쟁 때 도청상황실장을 역할을 하다 계엄군의 총탄에 산화한 윤상원열사와 한평생을 통일운동에 몸바쳐온 신창균(87)씨에게 제6회 4월혁명상이 수상되었다.

윤상원(당시 30세)열사를 대신하여 수상한 윤씨의 부친 윤석동씨는 수상인사에서 "상원이군사독재에 아합하지 않고 장렬히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죽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이 상을 받고 보니 상원이는 영원히 죽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상을

남은 우리가 정의를 위해 살아가라는 채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신창균씨는 "수많은 이들이 조국의 통일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해방 50주년이 되도록 통일을 이루지 못해 열사들에게 죄스럽고 두렵다. 더욱 용기를 내어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4월혁명연구소는 이날 '4월혁명 35주년 선언문'을 발표, △남북기본합의서 실현, △국민주인사들의 통일운동의 수용 △팀스피리트 체결 △국보법을 비롯한 악법 철폐, 모든 양심수의 석방과 수배해제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 수구세력에게는 "이승만, 박정희 되살리기 망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행사안내

- 4.19묘소 참배
오늘(수) 낮12시/ 수유리 4.19국립묘지
주최: 4월혁명연구소(전화:888-3682)
- 4월혁명 35주년 기념식
오늘 오전 11시30분/수유리 4.19 국립묘지
주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화: 747-9364)
- 이창복 의장 무죄석방 환영회
4월19일(수) 오후6시/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관 3층 단체그릴
주최: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문의전화: 747-4364
- 두레방 창립 9주년 기념 예배
4월20일(목) 오전 11시/의정부 두레방
문의전화: 0351-841-2609
- 8.15 50주년 민족공동행사를 여는 대공연-자! 우리 손을 잡자
4월22일(토), 23일(일) 각 오후6시/연세대 노천극장
주관: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총연합
주최: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한국여성단체연합·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족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
기획: 좋은 세상(전화: 336-5706)
- 불교인권상담 건립기금 마련전
4월19일부터 25일까지/인사동 조형갤러리
주최: 불교인권위(전화: 745-1852)
* 스님들의 서예, 그림, 도자기와 일반인들의 찬조출품작품들이 전시됩니다.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제7차 총회
4월22일(토) 오후3시/종로성당 3층강당
주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전화: 763-2606)

<오늘은 장애인의 날>
장애인과 정상인의 벽을 넘어 서로 같은 인간임을 확인하는 날!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경찰, 부상 해고노동자 병원에서 강제연행 사당의원에서는 노동자, 학생과 경찰 대치중

경찰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병원에까지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연행하려 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전국 해고 노동자들이 노동법 개정과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부 장관 면담을 신청한 뒤 그 결과를 듣기 위해 노동부 사무관을 만나러 가던 중에 발생하였다.

당시 해고노동자들은 1백 50여명의 전투경찰에게 둘러싸여 곤봉과 방패로 머리, 얼굴 등을 집중구타 당해 2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실신하는 사태까지 이르러 인근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

18일 오후 4시 30분경 해고 노동자 장영길(전해투 대표)씨등 40여명이 과천 노동부를 방문하던중 정부청사 경비대 2706부대 소속 전투경찰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나한균(전해투 선전국장)씨등 3명이 크게 다쳐 현재 사당의원에서 치료중이고 연기흠씨등 32명은 과천경찰서등으로 연행되었다.

병원에서 부상자 3명 연행
삼미종합특수강 해고자 김동연씨는 30여분간 집중적으로 폭행당해 심한 구토증과 뇌진탕 증세로 위급한 상태이고, 인천 보루네오 해고자 조광호씨는 연행과정에서 팔이 부러져 경찰서에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

료를 받고 있다. 또한 사당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김현준씨등 3명의 해고자들은 병원에서 연행되어 안양, 군포, 과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오후 8시 현재 나한균, 김동연, 김영균씨가 입원해 있는 사당의원에는 3개중대 2백여명의 경찰병력이 투입되어 민주노총 해고자특위 노동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경찰측은 해고자 8명에게 구속영장이 떨어지는 대로 연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밤 10시경 해고자와 학생 3백여명이 병원주변에 집결하자 전경 3개중대를 추가로 투입하여 대치하고 있다.

나한균씨 강제연행 시도

「민주노총(준) 전국 구속수배 해고자 원상회복 특별위원회」(민주노총 해고자특위)는 19일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경찰서, 노동부에 항의방문을 했다. 민주노총 해고자특위는 "정부의 무자비한 폭력행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현정권의 도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폭력행위책임자 구속·처벌 △연행된 해고자 즉각 석방 △입원, 치료중인 해고자에 대한 치료·보상 △노동부 장관 면담 실시 △해고자 복지 약속 이행 △노동법 개정등을 93년 문민정부의 출범직

후 그해 3월 10일 노동부는 "사면복권된 해고노동자 1천3백명과 해고노동자 3천9백명등 총 5천2백여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겠다"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해고자특위는 "정부가 해고자 복직을 발표한 지 3년이 지났으나 사실상 공염불뿐이다.대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는 자본가들의 횡포속에서 3천여명의 해고 노동자들은 고통스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오씨등 필리핀 방문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위해

「외국인노동자피난처」 김재오(30)소장과 조문숙(24)간사는 한국에서 산업재해를 당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보상금을 찾아주기 위하여 현지 조사를 떠난다. 20일 필리핀으로 출국한 이들 중 김재오씨는 5월10일경 귀국할 예정이다.

<인권하루소식> 합본 Ⅲ호 판매중

신공안정국과 94년 하반기 인권상황을 한 눈에!
주요내용: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실천 / 한국의 인권, 1994 / 합본 I-Ⅲ호 통합 색인(총 360쪽)

책값: <인권하루소식> 독자 5천원, 일반 1만원
** 합본3호를 찾는 분들이 많으나, 판매할 수 있는 분량이 50부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신청은 인권운동사랑방(전화 715-9185)으로, 입금 확인된 다음 우송해드립니다. 서두르십시오.

다시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 다.

김재오소장은 최근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7만명 더 들여오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외국인노동자 인권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을 걱정했다. 그 동안 계속 벌여온 '외국인노동자산재보상금 찾아주기' 활동의 결과물을 보고서로 작성해 국내에서 발간하는 것은 물론 영문판을 발행해 전세계에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인권 침해상황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승려인권문제연구소 발기 불교인권위원회

18일 불교인권위원회는 '승려인권문제연구소' 창립 발기 모임을 갖고 오는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해 연구소를 정식 발족키로 했다.

승려인권문제연구소는 80년 신군부에 의한 10.27법난과 지난해의 4.10법난의 진상규명과 종권 닦음 과정을 찾아주기 위하여 현지 조사를 떠난다. 20일 필리핀으로 출국한 이들 중 김재오씨는 5월10일경 귀국할 예정이다.

북경여성대회 참가신청 · 이번주 마감 93개 단체 참가 예상

<독자투고> 일본군 중군위안부 기록영화 시사회 참관기

낮은 목소리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2

최옥순(상지 피정의 집 수녀)

북경여성대회 참가신청 마감이 며칠 남지 않았다. 북경여성대회 참가를 위한 「한국NGO(민간단체)위원회」는 이번주 21일(금)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한국NGO위원회에 소속된 단체는 93개이며, 개별신청을 포함해 5백50여명이 신청한 상태이다. 이밖에 통일교등 종교단체 참가를 합친다면 9백여 명이 9월 북경여성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참가신청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NGO위원회」에서 받고 있다.

“못 배웠으니까 이렇게 숨어서 살아왔지. 못 배웠으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잖아. 배운 사람들이 가만 있으면 안돼, 배운 사람들이 해야지...”라는 한 할머니의 말씀은 가슴을 뭉클하게 하면서 깊은 성찰을 하게 한다.

정부와 우리 각자는 무엇을 했는가? 가난해서 배울 기회가 없었던 이들 할머니들은 조국의 희생 제물이었다.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끌려가서 성노리개로 짓밟혔던 그들의 치욕적인 과거

와 찢겨지고 상처난 그들의 가슴을 누가 어루만져 주었던가? 할머니들은 부끄러워했고, 첩피하게 여겨서 고향에도 못 갔고...숨어서 소리지르지 않았을지 모르겠다.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닌가?

어느 할머니는 “돈도 없고, 옷도 없고, 다 귀찮고, 죽고만 싶다”고 한다. 얼마나 한탄한 삶을 살아왔기에, 지칠 대로 지쳐서 삶을 마감하고 싶을 뿐일까.

누가 할머니를 이렇게 만났던 말인가? 이것은 바

로 우리 모두의 무관심이라고 생각한다. 다행스럽게도 “낮은 목소리” 기록 영화로 할머니들의 삶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역사에 기록으로 남게 되었으니 할머니들에 대한 관심이 달라지게 되리라 생각한다. 한가지 아쉽게 느끼는 것은 좀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할머니들이 살아온 증언이라든가 사진(증언집에 실려진) 재촬영해서 삽입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여성과 장애우를 향한 사회의 빔장을 걷어낸다 ---

‘빔장을 여는 사람들’ 「여성장애인분과」구성, 북경여성대회 준비 박차

여성문제를 얘기할 때도, 장애인문제를 얘기할 때도 빠지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여성장애인의 문제다. 그만큼 여성장애인의 문제의 심각성은 무관심 속에서 더 해가고 있다.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한해의 행사를 끌어 모은 것만큼이나, 많은 행사가 열리지만 그것도 5월이면 자취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4백만 장애인문제의 해결을 위해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애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장애인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NGO위원회 ‘여성장애인분과’에서 뛰고 있는 여성 14명의 움직임은 주목할 만하다.

9월 북경여성대회 참가준비를 위해 바쁜 권호예(29·지체장애)씨는 “세계여성들을 만나 한국 여성장애인 상황을 알리고, 이후 북경에서 채택되는 행동강령등에 대한 감시를 통해 압력단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참가는 “하나의 계기며 시작”이라고 말하면서 장애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는 기회가 되길 바랐다. 또한 내년 10월 서울에서 열릴 「제3차 동아시아여성포럼」등 이후 지속될 국제연대부분의 단초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권씨를 포함해 장애여성 9명, 비장애여성 4명으로 이뤄진 ‘빔장을 여는 사람들’(빔장은 작년 12월15일 첫모임을 갖고 출발했다. 이들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장애인분과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한국NGO위원회 여성장애인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자료의 부족이다. 여성장애인에 관한 자료가 어느 여성분야보다도 취약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빔장’ 회원인 이은하(청각장애인복지회, 비장애인)씨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성장애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는 수집조차 인색했다. 매주 한차례 열리는 세미나를 통해 여성과 장애우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함께걸음」 4월호).

그런 만큼 ‘빔장’은 여성장애인의 실태를 파악해서 문제점들을 분석, 보고할 보고서 준비에 어느 단체보다도 애쓰고 있다. 그 노력의 하나가 지난 7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연 ‘여성장애인 문제의 현황과 해결책에 대한 공청회’이다.

빔장은 ‘여성과 장애우를 향해 사회로부터 드리워진 걸림돌을 하나씩 거두어 낸다’는 의미를 갖고 불려진 이름이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이 빔장을 걷어치우려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NGO위원회는 △여성과 개발(농어민, 노동등) △경제세력화 △문화와 예술 △종교 △정치 △환경 △여성장애인 △성폭력 △평화 △미디어 △법률 △건강 △교육 등 13개 분과를 구성하고 있다. 지난 15일 분과 책임자와 실행위원들은 모임을 갖고 ‘보고서’ 작성과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6월말까지 각 분과별 보고서작성을 마치고, 그 뒤 워크숍을 통해 보고서를 수정·보완할 계획을 잡고 있다. 문의 ☎423-5355(최지영간사)

장기수 고강철순씨 장례

일본 관련 간첩사건으로 18년간 옥살이를 했던 장기수 고강철순(61)씨의 장례가 19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러졌다. 강씨는 17일 위축혈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날 장례식에는 가족과 친지, 출소장기수, 인권·사회단체 관계자들 80여명이 참석했다.

묘지는 경기도 용미리 시립묘지에 마련되었다.

<이달의 주제-노동>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일할 권리와 직업의 자유선택과 적정·유리한 노동조건과 실적에 대하여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 제23조 1항)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경찰, 새벽 병원 난입, 노동자 강제연행

민주노총 오늘 규탄집회, 병원에선 경찰책임자 고소·고발

20일 새벽 03시30분 과천, 방배경찰서 소속 경찰 4백여명은 사당의원으로 최루탄을 뿌리며 난입하여 입원, 치료중인 민주노총 해고자 특위 선전국장 나현규씨를 긴급구속장으로 연행했다. 연행과정에서 경찰은 김동연, 김영규씨 등 다른 해고자들도 연행하고자 했으나 병원측의 거센 항의로 실패했다.

과천경찰서(경찰서장 황인웅)와 방배경찰서(경찰서장 하만정) 소속 전경 50여명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사

당의원에 배치되어 병원 안에 있는 나현규씨 등 해고자들을 연행하려고 시도하자 이를 막는 노동자, 학생들과 대치해왔다.

병원에 있던 나현규씨 등 해고자들은 병원 5층까지 올라가 철제문을 걸어 잠그고 피신해야 했다. 당시 경찰은 병원 주변에 메트리스를 깔고 건물계단 입구까지 40여명의 백골단을 배치하며 기자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19일 오후 7시경 사당의원 김종구 원장과 노동정책

연구소 박석운 소장은 과천 경찰서 간부들과 합의해 건물내의 경찰 병력을 철수하면 학생, 노동자들도 철수하겠다고 합의했으나 경찰서측은 철수를 거부했다고 한다. 경찰측은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이행진(민주노총해고자특위 상황실장)씨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히며 “임투와 노동절을 맞아 노동자의 해고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작태”라고 말했다. 사당의원과 해고자특위는 황인웅 과천경찰서장을 불법난입과 폭력행위로 고소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모든 가입노동자에 총동원해 21일 2시 과천 노동부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사당의원, 경찰 고소키로

사당의원(원장 김종구)은 사당없이 병원을 점거하여 환자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진료행위를 방해한 과천경찰서장 황인웅씨를 상대로 고소·고발, 손해배상청구소송등 강경한 대응을 갖기로 했다.

경찰은 19일 오전10부터 20일 새벽3시까지 병력을 병원내에 상주시켜 병원 업무를 마비시켰다.

사당의원은 “10여명의 입원환자들과 보호자, 외래환자, 주민들, 병원직원이 입은 피해에 대해 간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과천경찰서장 황인웅씨를 특수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 진료방해죄로 고소하고 불안감 조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연합 경찰폭력 비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20일 논평을 내고, 경찰이 해고노동자를 연행하기 위해 사당의원에 경찰병력을 투입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이 논평에서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행위는 현정권의 반노동자적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돌출했다”며 “폭력행위자에 대한 즉각 구속, 처벌과 연행된 해고노동자의 석방”을 촉구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다음 달부터는 지로가 개설됩니다.

예금주 : 서준식 제일은행 128-10-131017 상업은행 431-07-056582 농협 011-01-404581 조흥은행 438-06-016840 외환은행 057-18-33811-7 우체국 013292-0011731 한일은행 112-182999-12-001 하나은행 105-106617-00107 신한은행 355-02-035530 국민은행 015-21-0723-021

재판부 고문후유증 판결 미뤄

고문피해자 문국진씨 손해소송 선고 두번째 연기

고문후유증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문국진(35)씨가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이 두 차례에 걸쳐 연기되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주심판사 최혜리)는 20일 오전 10시 문국진씨 손해소송 재판 선고심을 지난 6월에 이어 또 다시 연기, 오는 5월4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559호에서 갖기로 했다.

문씨의 부인 윤연옥(34)씨는 “사법부가 고문근절의지

만 투철하다면 선고에 망설일 이유가 없다. 하루하루 피말리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고문피해자와 그 가족을 생각한다면 헌법과 고문방지조약의 정신에 입각해 빨리 결론을 내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렸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김종경(42)씨가 제기한 손해소송도 1년8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고문후유증으로 생활무능력자가 되었다.

인권운동활동가를 위한 공개강좌(15회)

형법 II-형법 각칙

강사: 김순태(법학박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연구원) 일시: 4월22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1시까지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문의전화: 715-9185

장애인의무고용률 0.54%

정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제 도입 예정

장애인고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의무고용률은 2%에 훨씬 못미치는 0.43-0.6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노동부 직업안정국은 20일 '장애인 고용현황과 대책' 발표를 통해 3백인 이상 사업체는 2%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94년 12월 현재 0.43%에 그친 9천97명이 고용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91년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시행당시 7천7백58명에 비하면 17% 증가한 숫자다.

또한 정부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도 0.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공무원현황을 살펴보면 94년 8월 장애인 공무원은 2천1백81명으로 93년 1천9백87명에 비해 1백94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인고용 의무인원은 5천5백80명인데 비해 고용인원은 2천1백81명으로 고용인원보다 많은 3천3백99명이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사법·행정부 모두 함량미달로 입법부는 23명의무고용에 실제 고용인원은 5명(0.43%), 행정부용 의무고용인원인 5천3백51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천1백25명만을 고용했음을 뿐이다.

94년 3백명 이상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 (단위:개소, 명)

사업체 수	적용대상 근로자수	장애인고용 의무인원	장애인근로자수 <고용률>	고용의무 미달인원
2,141	2,092,005	40,585	9,097<0.43>	31,488

--장애유형별 : 지체장애 7,408 청각언어 1,185 시각장애 379 정신지체 125

94년 정부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 (단위:명)

기관 수	적용대상 근로자수	장애인고용 의무인원	장애인근로자수 <고용률>	고용의무 미달인원
44	162,451	3,230	1,049<0.65>	2,181

장애인고용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노동부는 민간부문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편의시설부족 등 사회여건 미비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부족 △ 장애인고용기피 등을 들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채용의지가 부족하고 공개채용 시험제도상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한편 "공개채용인원의 2%이상 장애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시험 합격자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장애인공무원의 실제 채용비율은 91년 1.1%, 92년 1.6%, 93년 1.2%에 머물렀다.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증진 대책으로 민간부문에서 '장애인고용촉진사업계획(94-98)'에 바탕을 두고 앞으로 5년간 약 3천억원의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투자할 것을 밝혔다. 또한 공무원 공개채용 시 시험제도에서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5월 임시국회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제' 도입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 행사 안내 ○

- 개소4주년 기념- "함께하는 위기센터를 위하여"
 - 일시: 4월21일 오후2시-4시30분
 - 장소: 홍사단 3층강당(☎ 743-2511)
 - 주최: 한국성폭력상담소(☎ 576-7127/8)
 - 내용: 1부 기념식/2부 위기센터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 학술대회- 외국인 노동자와 노동운동
 - 일시: 4월22일 오후1시-5시50분
 - 장소: 연세대 장기원기념관
 - 주최: 한국산업사회연구회(☎ 720-4725)
 - 내용: 1부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과 문제'-한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실태 조사연구(설동훈)/일본의 외국인노동자 문제(이종구)/ 2부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세계'(개리,번자베)/ 3부 '노동정책과 노동운동'(박석운)
-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제7차 정기총회
 - 일시: 4월22일 오후3시
 - 장소: 종로성당 3층 강당(☎ 765-6101)
 - 주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763-2606/765-5282)
- 재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축제
 - 일시: 4월23일 정오-오후6시
 - 장소: 명동대성당과 대성당문화관
 - 주최: 서울대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779-2049)
 - 내용: 그림그리기대회,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미사, 문화제 등
- 세계화와 우리 어린이
 - 일시: 4월25일 오후1시
 -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 주최: 제4회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존·보호·발달을 위한 전국대회(☎ 766-2269, 765-6177)
 - 내용: 기조강연- '21세기와 우리 어린이'(정범모) 주제발표- '한국아동의 위상과 세계화 교육'(차경수)/ '미래사회와 가정의 바람직한 기능'(이광자)/ '세계화를 향한 민간단체의 역할'(이윤구)

○ 동 정 ○

- 5·18 광주민중항쟁 마지막 수배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윤한봉씨가 신경회씨와 오는 23일 백년가약을 맺는다. 장소와 시간은 23일 오후4시 광주광역시 영주동 실내체육관 뒷마당 잔디밭.
- 전해투가 민주노총 준비위원회 산하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특별위원회(위원장 장영길)로 지난 4월부터 명칭을 바꿔 사용하고 있다. 약칭은 민주노총(준) 해고자특위이고, 연락처는 전화: 784-6037이다.
- 조혜은씨가 불교인권위원회 간사로 4월1일부터 근무하고 있다.
- 김거성 목사가 HURIDOC 교육을 위해 지난 16일 출국했다. 김목사는 인권운동사랑방 자문위원 자격으로 오는 27일까지 네팔의 카투만에서 열리는 인권자료 데이터베이스교육을 받게 된다.
- 전국연합 실무자 유한범씨와 부친 한누리노동청년회 김현정씨가 23일 오후 2시 홍익대 입구 영빈예식장에서 화족을 밝힌다.

<이달의 주제-노동>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일할 권리와 직업의 자유선택과 적정·유리한 노동조건과 실직에 대하여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 제23조 1항)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노동부, 해고자 문제 무대책이 상책 해고노동자 구속연행 항의집회, 총 11명 구속

해고노동자에게 가해진 경찰폭력과 강제연행에 대한 사회단체와 노동계의 반응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준비위 해고자특위」(대표 장영길, 해고자특위)와 「전국연합」, 「서총련」 5백여명의 노동자와 학생들은 21일 오후 2시 과천정부종합청사에 모여 '노동부·경찰폭행만행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굵은 빗발이 내리는 가운데 경찰폭행에 대한 항의와 구속 노동자 석방을 강하게 요구했다.

해고자특위는 "문민정부가 자행한 해고자연행과 병원침탈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고 말하며 "이것으로서 문민의 도덕성과 이 나라의 정의는 사라져버렸다"고 평가했다.

또한 △해고노동자 석방 △폭행당한 해고노동자에 대한 피해보상 △노동부장관과 내무부 장관 직위해제 △해고자 복직이행 △노동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집회에는 사당병원 김우자 수간호사가 참석하여 19일에서 20일 사이 경찰의 병원점거와 해고노동자에 대한 강제연행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히 설명했다. 집회를 마치고 과천경찰서로 찾아간 참석자들은 구속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합성을 질렀다.

집회후 허영구 민주노총 준비위원장과 허장 사무노련 공동위원장 등 4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노동부 조순문 근로기준국장을 만나 노동부 장관 면담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조국장은 "이 문제는 노동부가 해결할 것이 아니며 단 위사업장 노사간에 합의할 문제"라고 밝혔다. 대표단은 노동부장관과 면담을 시도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허영구씨는 "결국 임투를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가열찬 투쟁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과천, 군포, 안양 경찰서에 분산 수용되어 있던 해고노동자들을 21일 오전 2시부터 차례로 석방했다. 21일까지 이번 과천정부청사 앞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총 11명이다.

장영길(해고자특위 대표, 서울지하철 해고자)씨는 수배중이다.

확인된 구속해고자 명단: 천선복(현대중공업), 나현균

(코리아타코마), 김현준(삼미특수강), 연기홍(고려화학), 서진혁(현대정공), 이기호(삼미특수강), 채규전(동양이화), 이영호(부산지하철)

북한소설 출판 국보법 무죄 서울지법, 제7조 엄격 적용

서울지법 형사 항소3부(재판장 이우근)는 21일 북한소설 『용해공』을 출판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배포·소지)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박치관(37, 월간 <사람과 일터> 편집위원장)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설 『용해공』이 북한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 무장한 김일성의 전형을 제시하면서 김일성 개인을 찬양, 미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런 내용은 소설의 전개과정에 자연스럽게 삽입된 단편들일 뿐"이라며 "그러나 이 내용이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만한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6일에 있었던 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씨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상의 제7조에 대해 엄격히 적용

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소설을 출판한 일로 구속된 출판업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북한소설을 자유롭게 출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김삼석씨 석방 촉구 국제앰네스티 뉴스

95년 4월 발행된 국제앰네스티 뉴스(Amnesty International News)에는 김삼석씨의 석방을 전세계적으로 호소하는 기사가 실렸다.

뉴스에는 "김삼석씨가 국가보안법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이후 햇볕도 들지 않는 감옥에 수감되어 전향을 강요받는다"고 밝히며 "그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구타는 물론 성고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김삼석씨를 양심수로 인정하고 있으며 전세계 회원에게 그의 석방을 위해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보낼것을 촉구했다.

세계인권소식 등 소개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4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4호가 최근 발행되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부정기간행물인 이 책은 법관련 논문, 세계인권소식, 세계인권단체, 판례평석등을 실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노동판례의 경향과 대책(김선수) △북한문제가 남한 자유민주주의의 실천에 미친 영향(강정인) 등이 있다.

인권운동활동가를 위한 공개강좌(15회) 형법 II-형법 각칙

강사: 김순태(법학박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연구원)
 일시: 4월22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1시까지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문의전화: 715-9185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

김기중(덕수합동법률, 변호사)

작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불온정보 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한다는 명분하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설치규정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1995. 1. 5. 공포시행)이 통과되었고, 이에 따라 그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난 4. 6.부터 시행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아래에서는 법이라 함)과 그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동안 정보통신진흥협회의 민간기구로 존재하였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아래에서는 위원회라 함)는 지난 4. 13. 법적 설치근거를 갖는 정식기구로 출범하였다. 같은 날 위원회는 시행령 제16조의 2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을 제정하였고, 앞으로 위원회는 이 심의규정에 따라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이하 전기통신정보라 함)'를 심의하여 건전정보의 유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의대상, 범위 파행 운영 우려

그러나, 심의규정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심의의 대상과 범위에 관한 규정이 법과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여, 파행적인 운영이 우려된다. 심의규정은 제3조, 제8조에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성정보와 비음성정보를 모두 그 심의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음성정보」와 「비음성정보중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사전 및 사후심의를, 「비음성정보중 공개된 사실BBS·공개자료실·대화방 등」에 대하여는 사후심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언론·출판의 검열을 금지하고 있고, 통신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제공과 유통이 언론활동의 하나이며, 통신의 한 방식임과 동시에 사상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임에 이르지 않다면, 위 규정들은 헌법의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래서 법 제53조의 2에는 '사전'심의가 아니라 '정보의 심의와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 제16조의 2 제3항에도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라고만 규정되어 있는 것이

다. 따라서 위 심의규정은 근거법령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심의'란 문자 그대로 '주어진 정보를 대상으로 심사하고 의논한다'는 뜻이다. 이에 비하여 공개 또는 공표되기 전에 심사하는 것을 '검열'이라고 한다.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하지 검열하지는 않는다. 교도관은 수형자의 편지를 검열하지 심의하지는 않는다.

심의와 검열의 차이

양자는 명백히 다르다. '심의'라는 법률용어의 해석에 혼란이 초래하게 된 이유는 영화법상의 영화심의규정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화법에는 '상영전' 심의라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상영전 심의'라는 문구는 마치 검열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1984. 12. 31. 개정되기전의 영화법중 '검열'이라는 용어와 대체된 것일 뿐 그 실질적 의미는 공개전 심사의 의미를 갖는 검열이다. 이러한 영화의 사전심의규정은 법원에 의하여 위헌여부심사가 제정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공헌법상의 각본과 실연의 '사전'심사규정도 위헌의 문제가 있어 여러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폐지된 상태).

만약 법과 시행령에 정보의 '사전'심의의 인정하는 규정을 두려고 하였다면 '정보의 심의 및 정보의 공개거부 조치 또는 시정조000치'라는 규정과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을 것이다(이렇게 규정되었다면 직접적인 헌법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에 비추어 위원회가 전기통신정보를 '사전'에 통제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잘못된 심의규정들 때문에, 최근 언론에서도 전기통신정보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행정명령을 받거나 고발되어 형벌을 받는다고 보도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정보통신의 역기능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던만큼 앞으로 위원회의 활동이 기대되기는 하나, 한편 위원회는 내부 심의규정에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하루빨리 해당 심의규정을 폐지하거나, 헌법과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를 기대한다.

무과실의 검열관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당연한 결론을 끌어내기 위하여 복잡한 논리적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무척 슬픈 일이다. 무과실의 검열관이 있을 수 없다고 운운하였던 밀턴(Milton)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모든 언론, 통신, 사상의 표현 등은 누구도 사전에 그 공표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공리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퇴폐적이고 위험한 전기통신정보의 유통을 걱정하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 법이 준비하고 있는 대비책을 부기하며 글을 맺는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에 위반되며, 전기통신정보가 음란한 글 또는 영상일 경우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여,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경우는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나 정보통신을 하는 사람은 이러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통제되지 않는다면 해당기관에 고발하여 시정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일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 셈이다.

◇인권간행물◇

- 「노동과 건강」 4월호-노동과 건강연구회(☎866-9175)
 - 주요내용-고용지체의 작업중지권, 노동자 하기나름-하종강 등. 78쪽
- 「사월혁명회보」 4월호-사월혁명연구소(☎888-3682)
 - 주요내용-4월혁명35주년과 당면과제 등. 32쪽
- 4월혁명 35주년 논집-1995년, 변혁과 통일-사월혁명연구소 475쪽
- 한국아동방임의 현황과 개선방안/아동학대 및 방임대책 세미나자료집-한국아동학대에방협회(☎776-5660)
 - 주요내용-정서적 방임으로 유발된 유아기 발달의 제문제-홍강의/유아의 학대 및 방임 실태에 관한 교사의 인식-김동준 등. 98쪽
- 한국 아동학대 사례연구집-한국 아동학대에방협회
 - 주요내용-부부간의 불화로 인한 아버지의 자녀학대 등. 128쪽

<이달의 주제-노동>

이 균등쳐우는 거처의 여하에 불구하고 외국인노동자 또는 그 피부양자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ILO 19호, 노동자 재해보상에 대하여 내외국인 노동자의 균등쳐우에 관한 조약>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파출소 폭행 사과 요구 분신 시민 중태

안산 원선파출소장등 직위해제

경기도 경찰청은 24일자로 안산경찰서 원선파출소장 권순현 경사의 2인을 직위해제했다. 이들 3인에 대한 직위해제는 지난 20일 자신이 원선파출소에서 수갑을 채인 채 폭행을 당했다며 분신한 이형기(38)씨의 사건을 경기도경 감사관실이 조사하던 중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씨와 이씨의 친척들의 말에 의하면 이씨가 지난 19일 술에 취해 택시운전사와 시비가 붙어 원선파출소

에 갔고, 거기서 의경등에 의해 반말을 듣고, 폭행을 당하는등 인간적인 모욕을 당했다. 이에 이씨는 정중히 사과할 것을 몇 차례 요구했으나, 오히려 비웃음만 사게 되어 파출소 출입문 옆의 유리창을 깨고 위협을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아침에 출근한 원선파출소 부소장은 파출소 직원의 말만 듣고 이씨의 머리를 잡고 의자에 앉히고는 뒤로 수갑을 채우고 폭행을 했다. 그런 후 부소장이 직

접 타자로 진술서를 작성, 수원지법에 공무집행방해로 즉결심판에 넘겼다.

이씨는 즉결 심판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이씨의 부인 나아무개(33)씨는 "20일 오전 7시에 파출소에 전화가 와서 한 20분 정도 있다가 파출소에 갔는데, 이미 수원으로 떠났다"고 하더라도 집에 돌아온 이씨가 분을 못 샅이고 20일 오후 8시경 파출소에 찾아가 분신했다고 전했다.

2월23일 이형기씨의 진술내용

편집자주-이씨와 부인 나씨가 대화한 내용임. 이씨는 고통으로 말을 잘 잊지 못했다.

이: 그때 성질이 나가지고 파출소에 신나 두통을 사 갖고 갔어요. 그런데, 한사람이 거기 있더라고요. 나는 당신이 나에게 때린 사람이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안 때렸다고, 어제 자기는 근무가 아니었다고, 내일(아침) 9시에 나오라고, 그러면 만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비상연락망이 있으니까 빨리 연락을 취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도.....그래서 성질 나서 불을 붙여버린 것이라구.

나: 신나를 몸에 부어서 신나냄새가 나는데도 무조건 내일 아침에 오라고 했어요?

이: 그 사람이 나를 밖으로 밀어내더라고요.

나: 그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신나 뿌릴 때

이: 응

나: 라이타 켤 때도 그 사람이 안 말렸어?

이: 라이타 켜니까 그대로 평하는데 뭘. 그런데 소화기를 다른 사람이 가져오더라고요. 소화기도.

나: 소화기도 없었대. 파출소에는?

이: 동네 사람이(파출소를) 욕하더라.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다른 사람이 소화기 가져온 상황을 애써 설명하려 함)

나: 소화기로 그래서 췌어?

이: 응. 그런데 일어나려고 하니까 몸이 쪼그러 붙어서 허리도 못 펴졌더라고요. 아이구, 힘들어..

마다 "가망이 없다"고 해서 23일 안산 이씨의 집으로 와서 죽음을 기다리는 형편이다.

한편, 원선파출소측은 "우리는 억울하게 당한다. 이씨가 제정신이나. 경찰이 수퍼맨이 아닌한 2분안에 출동한 우리만 매도당할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안산지역의 사회, 시민단체들은 25일 오전 대책회의를 갖고 이씨를 폭행한 경찰들을 고발할 예정이다.

안산우신공업 파업에 노조파괴전담반 동원

안산 반월공단 18블럭에 소재하고 있는 우신공업 파업에 노조파괴전담반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달부터 준법투쟁을 벌이다 노조위원장등의 구속으로 전면파업에 돌입한 우신공업 노조(위원장 홍춘표)에 의하면 100여명의 일용직원이 전문적인 폭력을 휘두르며 노조파업을 파괴,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 공판 안내 ○

- 4월25일(화) 오세중 국보법위반 형사9단독 오후 3시 속행 317호
- 4월26일(수) 김정식의, 국보법위반 형사합의22부 오전10시 선고 425호 강미자 국보법위반 형사3단독 오전10시 선고 317호
- 4월27일(목) 김상열 업무방해등, 형사합의10부 오전10시 선고 318호 서선원 폭력행위등, 형사합의2부 오전11시 422호 광명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형사3단독 오후2시 속행 317호
- 조두현 국보법위반 형사합의10부 오후2시 신건 318호
- 4월28일(금) 최종민 국보법위반 형사합의3부 오전10시 선고 319호 신광수의, 국보법위반 형사합의1부 오전11시 속행 418호 선세규 국보법위반 형사합의5부 오후3시 속행 422호

민주노총 해고자특위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

민주노총(준) 해고자특위 소속 이철의(철도), 송두익(울산현대자동차)씨등 10명은 24일 오전 7시부터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해고자특위는 과천종합청사앞에서 있었던 폭행에 대한 규탄과 책임자 처벌,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며 "차가운 감옥에서 병원치료도 받지 못한 채 외롭고 고통스럽게 있을 동지들을 생각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부상자 나현균씨등 3명은 경찰에서 보건소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24일 수원교도소로 송치되었다.

한편 '인의협'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법과 질서가 강조되는 문명시대에 법질서를 존중하고 수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점거하여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환자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초래한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행위를 지시한 경찰 지휘관 처벌 △내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공개 사과 △진료업무 방해로 인한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당시 사당의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임기춘씨는 "19,20일 있었던 초법적인 일은 입원 환자에게 심한 불안감과 충격을 주었고 소위 문명정부를 표방하는 정부에 대한 불신감까지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총(준) 해고자 특위는 동아일보가 23일자로 발행한 "화염병 데려 없애라"란 사실에 대해 동아일보의 여론조작을 규탄했다. 동아일보는 23일 사실에서 22일 새벽 서울지방노동청에 화염병을 투척한 이들이 마치 해고자 특위

소속 노동자인것 처럼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대학신문 구독신청서와 전해투의 형견미를 몰증으로 이들이 지난 19일 노동부 장관 면담 시위와 관련, 입원중이던 전해투 간부의 강제연행과 연관이 있는 청년들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고 밝히고 있다.

동아일보 사실에 대해 해고자 특위는 "경찰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했을 뿐 피해당사자인 해고자 특위에게는 한마디 확인전화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편향적인 보도는 언론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공정성과 양식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난하며 "동아일보의 폭력적인 언론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성폭력 위기센터 개소 4주년 전담경찰 육성 촉구

'성폭력 위기센터 개소 4주년 기념토론회'가 21일 오후 홍사단 대강당에서 열렸다. 1부는 노래, 역할극을 결집한 기념식이 있었고, 2부엔 각계 전문가들이 위기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서 문국진(법의학회장)교수는 우선 피해자의 완전한 사회복귀가 목적인 만큼 피해자들의 재할조치가 국가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금자(산부인과)의사는 "피해자에게 국가가 치료비를 지급할 것과 현재 위기센터와 연계되어 있는 의료진과 지정 병원이 각 지역별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고소가 각 경찰서마다 있을 것과 성폭력사건을 전담할 경찰 육성, 특히 피해자중 30%를 차지하는 피해아동을 위한 상담전문가와 조사과정에서 진술대리인제도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주간/인/권/흐름

(4월17일-23일)

<18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라이베리아 중부에서 지난 9일 어린이와 여성등 62명 무장괴한에게 무참히 살해됐다고 국제아동기금 밝혀/민주노총 해고자특위소속 해고노동자 41명과 경찰 1백50명이 1시간 20분동안 충돌, 32명 연행, 20여명 중경상/비전향장기수 김인서씨등 3명 기자회견 '북한 송환' 요구

<19일>

4·19혁명 35돌/노동부 발표, 94년 산재사망자 2천6백78명, 산재노동자 8만5천9백48명/서울지역 8개 대규모 병원노조 간부 1백50여명 공동임금교섭 요구하며 밤샘농성/입원중인 민주노총 해고자 특위 소속 노동자들 연행위해 경찰 1개소개 병원 침입/에반스 앤드루 열(36)씨 등 미군 2명 이성미(26)씨등 2명 폭행

<20일>

15회 장애인의 날/ 광주기독교청년회 시정지기단 광주시내 공공시설에 마련된 매점, 자판기 운영실태조사결과 장애인 우선권 조례무시한 것으로 밝혀/ 미대사관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 '통상압력 중단' 요구시위/서울지법 성수대교 붕괴사고 서울시 및 동아건설 관계자 17명중 1명 무죄, 16명 집행유예 선고/ 검찰 인혁당 추모행사에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착수에 반발, 영남대생 천막농성

<21일>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국무회의 의결 거쳐 7월부터 시행키로/ 문체부 저작권법 개정안 발표/ 민주노총 준비위 소속 노동자 및 대학생 5백여명 과천정부종합청사서 경찰폭력 규탄집회/ 비전향장기수 김인서(66)씨 북한가족과 45년만에 친필과 국제통화/ 서울지법 북한소설 '용해공'출판해 국보법위반으로 기소된 도서출판 '일터' 편집부장 박치관씨에게 무죄선고

<22일>

현충전-대노협-조선노협 등 3개 노동단체 '제3차 개입'과 공동투쟁 공식선언/보건복지부 장애인 보험급여기간 2백10일로 한정된 것 내년부터 철폐키로/ 8·15 민족공동행사 남쪽 준비위원회 발족식

<23일>

'WTO 이행특별법 조기실시와 통합의료보험 재취를 위한 전국농민대회'/ 유엔관리들 르완다 후투족 난민촌서 르완다 정부군의 무차별 총격에 의해 8천명 이상 난민 학살당하고 6백50여명 다쳤다'고 보고

해설

지난주 정부는 6법중의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지었다. 확정된 개정안의 내용은 영장실질심사제의 도입등 상당히 의미있는 피의자 인권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졌다. 이 개정안은 오는 임시국회에 상정되어 처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중에는 '긴급구속'이 '긴급체포'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다.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때 영장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임의동행으로 인신구속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난 이후 경찰이 행한 긴급구속제의 남용처럼 발동요건이 명확함에도 가장 경찰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긴급체포제일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지 못한 점이다.

<이달의 주제-노동>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일할 권리와 직업의 자유선택과 적정·유리한 노동조건과 실직에 대하여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 제23조 1항)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5월, 유엔 사회권조약 한국정부 보고서 정식심사

민간단체들, 보고서 작성 완료 회의 참석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는 5월 1일부터 19일까지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첫 번째 정식 심의를 가짐으로써 이에 대한 한국 민간단체들의 활발한 대응이 시작되고 있다.

민변, 인권운동 사랑방, 참여연대등 8개 인권·사회·민간단체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른 정부보고서에 대한 민간보고서 제출과 사회권위원회 회의 참석과 관련 25일 10시 세실레스드랑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인권운동 사랑방 광노현 교수(방동대 법학)는 민간보고서 작성취지에 대해 "정부보고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부족한 정보를 보충함으로써 한국의 인권상황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 "정부보고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부족한 정보를 보충함으로써 한국의 인권상황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 "정부보고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부족한 정보를 보충함으로써 한국의 인권상황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5월경 국내 인권사회단체들은 한국정부가 93년 10월에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정보를 외국의 인권단체로부터 듣고 그해 6월 열리게 된 사전실무분과회의에 약식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사회권위원회는 94년 11차 회기(11월 21일-12월 9일)에서 한국정부의 보고서

를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한국정부가 연기를 요청하여 95년 5월 12차 회기에서 다루게 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28항의 사전질문을 기초로 하여 한국 정부대표를 출석시킨 가운데 정부보고서 내용을 심사하게 된다. 심사결과는 한국정부에 대한 공식권고안으로 발표된다.

이번 사회권위원회 12차 회기에는 민변 조용환, 김선수 변호사와 참여연대 문진영, 장소영씨가 참석하게 된다. 민간대표는 5월 1일 사회권위원회 회의중 한국 상황에 대한 구두 발표 및 슬라이드 상영을 갖고 사회권 관련 국제NGO와 협력 관계를 모색할 예정이다. 출국일은 28일이다.

안산 경찰서, "이씨 폭행한 적 없다" 변명

안산지역단체들 공동대책 모색

25일 안산지역의 반월노동상담소, 전국노점상연합회 안산지역회, 경기노련 안산지구협등 14개 단체는 "안산경찰의 이형기씨 폭행 및 분신방조등 인권유린에 안산지역대책위원회"(대책위)를 구성하고 이형기(38)씨 문제를 지역차원에서 공동대응키로 했다. 대책위는 25일 안산경찰서에 원선과 출소장등을 폭행, 상해, 직

단체로부터 듣고 그해 6월 열리게 된 사전실무분과회의에 약식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사회권위원회는 94년 11차 회기(11월 21일-12월 9일)에서 한국정부의 보고서

는 지속적으로 이형기씨를 위한 모금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모금구좌 농협 211051-52-444202 예금주 신인철).

한편 이형기씨 부인 나야무게(33)씨는 오전 10시 안산경찰서에서 경찰서장등 5명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경찰서장등은 "파출소 부소장등이 직원들이 수감은 채워어도 폭행한 적은 없다"며 말했다고 나씨가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나씨에게 모금을 해주겠다고 말했다지만, 나씨는 이들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다음 달부터는 지로가 개설됩니다.

예금주: 서준식
제일은행 128-10-131017 상업은행 431-07-056582
농협 011-01-404581 조흥은행 438-06-016840
외환은행 057-18-33811-7 우체국 013292-0011731
한일은행 112-182999-12-001
하나은행 105-106617-00107 신한은행 355-02-035530
국민은행 015-21-0723-021

노조파괴반 3월부터 합숙훈련, 현장 장악 안산 우신공업 노조, 구속 5명, 부상 7명

안산 우신공업(대표이사 홍기표, 안산 반월공단 18블럭 소재) 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25일 현재 노조위원장 홍춘표(33)씨등 5명이 구속되었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만 총 8명으로 밝혀졌다. 부상자 중 노조부위원장은 3월25일의 폭력사태로 경희의료원에 한달동안 뇌진탕 증세와 허리 부상으로 입원치료중이다. 우신공업 노조원들에 의하면 지난 3월 이후 우신노조에는 100명에 달하는 일용직 근로자(자칭 노조파괴전담반이라는 성광용역 소속)들이 기숙사에서 합숙하면서 야간 기동훈련등을 벌여왔다고 한다. 이들은 3월25일 노조 부위원장과 노조원 한명을 폭행한데 이어 지난 23일에는 노조원들에게 돌과 쇠파이프를 던져 노조원들에게 던지며 폭행, 현장과 회사 앞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22일의 지역노동자 100여명이 항의집회를 갖고 해산하자 노조원들을 집단폭행, 7명이 부상당했다.

심해진씨가 행사진행을 맡고 박광수감독을 비롯한 전 스태프와 주연배우 문성근, 홍경인씨 등이 참석한다. 이 행사에는 정치, 문화계 인사와 <영화 전대일> 후원회원 2천여명이 초대된다. 문의 747-5091~4

경찰 책임자 처벌 요구 민주노총, 해고자지원대책위

「민주노총 준비위원회」와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지원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9시30분 명동성당 민주노총 해고자특위

소속 해고노동자 단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8일 해고노동자에 대한 노동부 앞 경찰 폭행사건으로 구속된 해고자 석방, 피해보상과 폭행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또한 오는 28일 오전 11시 종로성당에서 「해고노동자 폭행 경찰 책임자 처벌 및 구속노동자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구성을 논의하며, 이후 폭행책임자 집단고발, 경찰청 항의방문등을 벌일 계획이다. 28일 오후2시에는 종로공원에서 “경찰폭행 책임자 처벌 및 해고노동자 복직 촉구 결의대회”가 잡혀있다. 해고자 박성호(한진중공업)씨등 10여명은 24일 오전 10시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병역특례 국회청원 시행령 개정 요구

「병역특례해고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대책위원회」(박형규 목사등)는 24일 「병역특례법 시행령 136조 개정을 통한 병역특례해고노동자의 제2국민역 편입을 위한 입법청원서」를 458명의 청원인 서명과 정대철, 이철의원등 소개의원 13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병역특례로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던 12명이 노태우정권 시절에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이래 계속 수배를 받아오고 있다. 현행 병역특례법 시행령은 병역특례자의 노조활동을 봉쇄하고 있다.

<현장 스케치>-경찰 폭행에 항의 분신한 이형기씨의 모습

경찰한테 사과 한마디만 들었어도...

한 시민이 대책없이 죽어가고 있다. 이형기씨 나이는 38세이고, 다섯살 아래인 아내와 여섯살 난 딸 하나를 두고 있는 그는 가진 것이라고는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경기도 안산 원곡동의 방두개짜리 13평 서민아파트 뿐이다.

그는 덕창산업이라는 회사에서 트럭을 운전하며 생계를 유지해왔다. 그런 그가 지난 20일 이후 누워 있는 것이다.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마지막 숨결을 겨우겨우 유지하며 그는 작은 아파트의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 그의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역겨운 피고름 냄새가 코를 찔렀다. 고대 안산병원과 구로병원, 동대문 이대병원을 돌아다녔지만, 살 가망이 없다는 말이 이씨가 고집하고, 이씨의 아내가 동의해 자진퇴원하여 마지막 못해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빼고 23일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서는 안타깝게 이씨를 그의 아내와 친척들이 지켜볼 뿐이다. 언제 갑자기 그의 병세가 악화되어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것을 가족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다. 고모집에 가 있는 여섯살 난 그의 딸만 모를 뿐이다.

“저라고 다 죽어가는 사람을 집으로 데려오고 싶어졌어요. 우리 집 형편에 돈도 없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까마득해요. 저 사람은 저대로 놔두면 얼마 못 갈 거고...”

이씨의 아내 나아무개(33)씨는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 7년전 함께 살림을 살면서 아이에게 언제나 다정했고, 회사에서 야근할 때면 나오는 빵과 우유도 먹지 않고 남겨왔다는 이씨와의 결혼생활이 아쉽기만 하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8시경 안산 원선파출소에 가서 순경들에게 폭행과 인간적인 모욕을 당하고 분을 못이겨 분신하고 말았다. 파출소 부소장은 그의 머리를 무지막지하게 잡아채고, 의자에 뒷수갑을 채우고 폭행을 했다. 또, 막내동생이나 될 법한 의경들에게조차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다.

“이 사람이 한 마디 진심어린 사과만 받았다면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와 20년 동안 친구로 지내온다는 최남범씨는 친구의 고통스런 모습을 보고도 아무 손을 못쓰는 자신을 저주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씨의 수갑만 채웠지 폭행한 적은 없다더라는 말을 전해들은 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글쎄 경찰이 뭐하는 겁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저들은 자신들 책임회피하려 하니...” 24일 파출소장을 비롯해 3명의 원선파출소 직원이 직위해제되었다. 그날 밤에 찾아간 원선파출소 출입문 정면 책상에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문구가 새삼 눈에 들어왔다.

‘전대일의 밤’ 행사 오늘, 영화제작위원회

<영화전대일> 제작위원회는 오늘 오후7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영화 전대일> 제작 발표회를 갖는다. 이날 발표회는 김명근,

<이달의 주제-노동>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일할 권리와 직업의 자유선택과 적정·유리한 노동조건과 실적에 대하여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 제23조 1항)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특집 포천 주민들의 병원적출물 소각장 반대싸움>

3년 동안 주민의견 무시, 환경영향평가 소홀

포천 병원적출물 소각장 건설 반대투쟁을 해오던 이병준(65, 농업)씨가 자살, 25일 새벽 7시16분 숨진데 이어 같은 날 오후8시경 소각장 반대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던 전덕배(61)씨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포천병원적출물 소각장건설 반대공동투쟁위원회」(공동대표 김광분, 김무경, 황민원 공투위)는 오는 29일 이병준씨 장례식을 국민장으로 치르기로 잠정합의를 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신현갑(31·공투위 기획부장)씨는 숨진 이씨가 93년 소각장반대 싸움 초기부터 열심히 싸웠으며, 자살하던 24일 당일에도 “나 하나 죽으면 좀더 빨리 소각장 문제가 해결될 텐데”하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소각장문제와 관련 공사방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 가압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벌금등 5가지나 되는 법적 제재를 받았다.

석방하고 부상자 치료등 피해보상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제의 ‘병원적출물’에 대한 사업자와 주민들의 의견은 매우 다르다. 우선 사업자가 박씨는 “냉동차로 병원적출물을 운반, 7백도 이상의 고온으로 소각, 냉동동투쟁위원회」(공동대표 김광분, 김무경, 황민원 공투위)는 오는 29일 이병준씨 장례식을 국민장으로 치르기로 잠정합의를 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신현갑(31·공투위 기획부장)씨는 숨진 이씨가 93년 소각장반대 싸움 초기부터 열심히 싸웠으며, 자살하던 24일 당일에도 “나 하나 죽으면 좀더 빨리 소각장 문제가 해결될 텐데”하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소각장문제와 관련 공사방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 가압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벌금등 5가지나 되는 법적 제재를 받았다.

환경영향평가 실시 요구

주민들의 우려는 지난 20일 「환경운동연합」(환경연)이 보내온 ‘포천 병원적출물 소각장 건설 관련 환경영향 의견서’에도 나타나 있다. 이 의견서에 의하면 “적출물등 소각시설기준의 유해폐기물에 대한 처리능력이 잘 규명되고 있지 않다”는 점과 “병원적출물에는 수액세트, 주사기등 PVC와 금속성 성분을 다량 포함하고 있어 분진, 중금속, 다이옥신등 대기오염 물질이 도시폐기물을 소각할 때보다 높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연은 “본 시설 가동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조사, 특히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고 결론내렸

다. 이밖에도 사업자가 행정심판에서 주민의 90%가 소각장 설치를 동의했다고 청구한 데 대해 공투위는 창수면 운산리 주민을 포함해 3천여명의 반대서명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소각장 인근지역에는 운산리 74세대, 오가리 43세대가 살고 있다며 ‘적출물등 소각시설기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3년간의 경과>

포천군 창수면 오가리에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인 병원적출물 소각장 허가가 난 것은 지난 4월20일이지만 포천 병원적출물소각장 반대싸움은 93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각장 대표인 박용한(한국클린시스템, 포천신문사장)은 창수면 오가리에 93년 10월, 11월 1·2차에 걸쳐 장소를 변경해가면서 허가신청을 냈지만 포천군수로부터 ‘적출물처리규칙 제8조6항’ ‘적출물처리지침 2항’ 저촉등의 이유로 반려당했다. 그러나 다시 행정심판을 내

94년 1월 “환경피해 우려와 민원발생등 막연한 이유로 소각장 건설허가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고 창수면 오가리 74번지 허가를 얻게 되었다.

94년 6월 사업자 박용한씨가 공사를 강행하자 주민들은 군청앞 시위등 산발적인 대응을 했다. 이에 올해 초 박씨는 정성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 주민 17명을 고소하고, 3월에 다시 주민 17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민들의 분노는 정변호사가 현재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인 점과 사업자 또한 환경연 회원인 점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

소각장 건설반대로 주민 김원영(47)씨와 김호경(35)씨가 현재 송산교도소에 수감중이며 김광분씨가 수배중인 상태이다. 이에 공투위는 지난 10일이래 3차에 걸쳐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었다.

주한미군법죄근절운동본부 제4회 불교인권상 수상자로

「불교인권위원회」는 제4회 불교인권상 수상자로 ‘주한미군법죄근절운동본부’를 선정, 26일 발표했다.

월말이 다가왔습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꼭 챙겨주세요.

예금주 : 서준식

제일은행 128-10-131017	상업은행 431-07-056582
농협 011-01-404581	조흥은행 438-06-016840
외환은행 057-18-33811-7	우체국 013292-0011731
한일은행 112-182999-12-001	
하나은행 105-106617-00107	신한은행 355-02-035530
국민은행 015-21-0723-021	

'문민정부', 살인철거 넘어 성폭력테러까지

서울 봉천동, 철거반원이 자궁에 연탄재 쑤셔넣어 부산서는 철거민 3명 구속

24,5일 이틀동안 서울 전 농4동, 청량1동, 서초꽃마을, 금호1-6지구등에서 철거반원들의 폭력에 의한 강제철거가 진행되었다. 특히, 25일 오전 6시경 봉천7-1지구(관악구 봉천6동) 주민 전철순(40, 봉천6동철거민대책위 대표)씨는 적준용역회사(대표 정수중)소속 철거반원 30여명(팀장 김인석)에게 집단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에 따르면 철거반원들은 전씨의 머리카락을 잡고 식칼을 들이대며 "사시미를 뜨겠다"라는 욕설과 협박을 했다고 한다. 또한 가슴을 쥐어짜고 "이년 X구멍을 못쓰게 만들겠다"고 하며 하체를 모두 벗겨 음부에 연탄재를 밀어넣고 발로 짓이겼다. 26일 현재사당병원에 입원 중인 전씨는 "삶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도 모자라서 이런 일까지 당하니 무섭고 원망스럽다"고 울부짖었다.

경찰 수사방관에 주민들 분노

한편, 주민들은 이를 수수방관하는 경찰의 태도에 더욱 분노했다. 봉천2-2지구 한 주민은 "철거반원들의 강제철거를 보다 못해 112와 관악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당신이 이런 동네에 살지 않으며 그만 아니냐'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묵인하는 경찰에게 항의하려 간 경찰서에서 용역반원들이 쉬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철거민연합회'의 장양해동씨는 "철거민들은 주민등록증은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다. 국민이면 기본적으로 폭력에 의한 위협에 처할 때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는 강제철거는 경찰의 비호아래 건설자본과 국가권력이 개발이득금을 챙기기위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봉천6동철거민대책위원회'는 △성폭력 진상규명 △부상자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 △용역반 해체 △영구임대주택(상가분양권)과 가수용단지(가수용상가) 등 철거민들의 생존권 확보를 요구하며 국민들에게 선전전을 하고 있다.

전국연합회 책임자 처벌 요구

'전국연합' 대변인 임종인 변호사는 26일 '철거반원의 강제철거와 폭력행사에 대한 논평'에서 "△용역반 해체 △폭력행위자와 경찰직무유기자에 대한 처벌 △도시서민의 생존권 보장과 장기적인 주택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최영애)도 철거반원들을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여성의 성을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명백한 성폭력 사건"이라고 밝혔다.

<적준용역회사 봉천7-1지구 철거반 관계자 명단>

김인석(팀장), 이만수(반장), 엄정섭, 이두현, 장유만, 양경철, 김동환 등 전화 874-2458

부산경찰, 70명 연행 특수공무집행방해로 3명 구속

부산경찰청은 25일 부산 철거민연합(부철연)의 장전중철씨등 3명을 지난 23일의 부산역 집회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했다.

지난 23일 부산철거민연합은 오후5시 부산역광장에서 창립대회를 마치고 부산역 앞 도로를 따라 거리행진에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경찰은 거리행진이 허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저지했고, 이에 항의하는 대회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50여명이 부상당하여 입원했다. 또, 경찰은 이 자리에서 부철연 회원과 학생등 70여명을 무차별 연행했다. 또, 23일밤 부산동부경찰서는 폭력사태에 항의하려 간 학생등을 연행했다. 연행자중 49명은 즉결심판을 받았다.

당시 상황에 대해 부산민가협은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경찰들은 끈봉과 방패로 폭력을 휘두르고 철거민과 학생들이 머리가 찢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무차별 폭력을 자행했고, (대회 참가자들이 해산한 후에도) 백골단과 전경등이 20여명씩 여러조로 부산역광장을 다니면서 대회 참가자료를 보이는 사람들의 옷을 찢고 이빨이 부러질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며 마구잡이로 연행했다"고 밝혔다.

부산지역의 재야단체들은 "23일의 경찰폭력에 대해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규정짓고 경찰폭력을 뿌리뽑기 위한 공동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부산 MBC가 23일 오후 5시30분 뉴스에서 대회 참가자들이 '각목을 휘두르고, 화염병을 준비했다'고 방송한 것이 사실과 달라 25일 부산지역 단체 대표들이 부산 MBC에 항의 방문하여 수정보도되기도

하였다.

이형기씨 국립의료원 입원

안산에서 경찰폭력에 항의, 분신하여 집에서 투병중이던 이형기(38)씨가 26일 국립의료원에 입원했다. 이씨의 입원은 '전국민민주의민족통일유가족협의회'(회장 박정기, 유가협)와 안산지역의 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가족을 설득하여 이루어졌다. 이씨는 병원에 입원하여 봉대를 풀고 치료를 받았다. 유가협 간사 박찬영씨는 "이씨가 치료를 받지 못해 온몸의 화상 상처가 부패하여 끔찍한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씨의 병원비가 없어서 가족과 관계자들은 예를 대우고 있다. 이씨의 병실은 국립의료원 일반의과 530호실이고, 직통전화는 260-7523이다.

<병원비 모금구좌>

농협: 211051-52-444202
예금주 신인철

'세계화와 어린이' 토론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회장 김수남)는 25일 오후 1시부터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제4회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존·보호·발달을 위한 전국회의'를 열어 한국아동의 위상과 교육 등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90년 9월 국제아동기금(UNICEF)이 주관한 '어린이를 위한 세계정상회담'의 결과인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을 위한 세계정상회담선언 및 행동계획' 추진을 목적으로 92년 설립되었다.

성희롱추방 거리 캠페인

'서울대성희롱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낮12시 명동성당 앞에서 '성희롱 추방 거리캠페인'을 갖는다.

<이달의 주제-노동>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일할 권리와 직업의 자유선택과 적정·유리한 노동조건과 실직에 대하여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 제23조 1항)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경찰, 봉천동 철거폭력 수사의지 없다

전철연, 적준용역 관련자 전원 구속 촉구

지난 25일 봉천동 재개발 7-1지구에서 발생한 철거용역반에 의한 폭력사태를 수사중인 경찰이 전혀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봉천동 철거지역에서 일어난 폭력사태는 여성 철거민대책위원장을 대상으로 자행된 악의적인 성폭력이었다고 수사받은 관악경찰서는 적준용역(대표 정수중) 관계자 4명만 소환조사하여 이들로부터 "폭력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진술만 받아놓은 상태. 오히려 경찰은 성폭행을 당해 입원 중인 전철순(40, 봉천6동 철거민대책위 대표)씨에게 경찰서에 출두할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전씨의 성폭행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관악경찰서(경찰서장 김동길) 형사3계는 청소년의 생존·보호·발달을 위한 전국회의'를 열어 한국아동의 위상과 교육 등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90년 9월 국제아동기금(UNICEF)이 주관한 '어린이를 위한 세계정상회담'의 결과인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을 위한 세계정상회담선언 및 행동계획' 추진을 목적으로 92년 설립되었다.

달라고 요구했다. 전씨는 "그동안 경찰이 철거반원들을 감싸고 도는 것을 보고 불신하는 마음이 생겨 경찰 조사를 받고 싶지 않았다. 또한 나는 그동안 너무 엄청난 일을 당해서 누구와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봉천6동철거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점근, 전철순)는 "아픈 환자에게 경찰서로 출두하라거나 위협을 가하는등 경찰의 고자세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한편, 관악경찰서는 25일 용역철거반원들의 폭력사건과 관련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말할 뿐 구체적인 답변은 회피했다.

전철순씨 전치3주 진단나와 사당의원(원장 김중구)은 철거반원의 성폭력으로 입원 중인 전철순씨의 진단결과 전신 타박상으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김중구 원장은 "다행히 음부의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정신적 상처가 더욱 요구하여 경찰들을 내보내

경찰이 대거 동원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어 말세라는 느낌이 든다"라고 말했다.

처벌할 사람은 확실히 처벌해야 '전국철거민연합(의장 남경남, 전철연)은 27일 성명을 발표하여 '봉천동 철거폭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전철연의 성명에 의하면 94년 4월19일 행당2동 재개발 지역에서는 무진용역 철거반원들이 나체로 등장하여 여성 철거민에게 폭언, 구타를 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관련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지난 3월 금호 1-6지구 철거민 박근백씨의 분신사건은 입산개발 철거용역반원들의 강제철거에 맞선 것이었다. 그러나 합의이후 입산개발에 대한 처벌도 없었다.

전철연은 "처벌할 사람은 확실하게 처벌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부녀자에 대한 성폭행 만행은 절대 덮어두어서 안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

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적준용역회사 대표와 철거반원 구속 △철거반원 비호하는 관악경찰서장 처벌 △철거민들에게 순환식 재개발로 재입주 보장을 촉구했다.

전철연은 27일 봉천7-1지구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단 구성 촉구'를 위한 제안을 여러 사회단체에게 호소했다.

성희롱 항소심 공정 판결 촉구 선전전

'서울대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성희롱 문제를 걱정하는 시민모임' 소속 회원 1백여명은 27일 낮12시 명동성당 앞에서 성희롱사건 항소심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울지로 입구까지 선전전을 펼쳤다. 공대위는 "신교수측은 지금까지 8차례 계속된 항소심 재판과정 내내 이미 밝혀진 성희롱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다"며 오는 5월23일 열리는 항소심에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길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성희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책 마련할 것과 기업과 노동조합이 성희롱 추방에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월말이 다가왔습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꼭 챙겨주세요.

예금주 : 서준식
제일은행 128-10-131017 상업은행 431-07-056582
농협 011-01-404581 조흥은행 438-06-016840
외환은행 057-18-33811-7 우체국 013292-0011731
한일은행 112-182999-12-001
하나은행 105-106617-00107 신한은행 355-02-035530
국민은행 015-21-0723-021

인권운동활동가를 위한 제1기 공개강좌(16회)

51차 유엔인권위원회 참가보고

강사: 이성훈

일시: 4월29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1시까지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수강료: 4천원
문의전화: 715-9185(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노동절 맞아 민주노총 원년 선포

민주노총, 세계 노동절 대회 일정 확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등, 민주노총)는 29일부터 5월1일까지 전국에서 제 106차 세계노동절 기념 노동자대회를 갖는다. 이번 노동자대회에서는 △민주노총 건설 원년 선포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 분쇄 및 전국적 공동투쟁 결의 △사회개혁투쟁 선언 △지자체 선거방침 천명 △해방 50주년을 맞아 노동조합의 자주적 통일운동 선포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각 지역에서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 문화행사와 체육대회, 집회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한편, 서울지역의 노동절대회 장소가 전국대에서 서울대로 바뀌었다. 각 지역별 행사일정은 아래 표와 같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회와 관련, “노동조합운동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운동으로 거듭나기 위해 사회개혁투쟁을 이번 임단투 때 본격

적으로 제기할 것이다. 이번 과정을 통해 노동자와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고, 오는 10월 민주노총의 건설을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고자폭행사태 설명회 민주노총준비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등, 민주노총)는 4월18일 노동부 앞 경찰폭행 사태와 사당의원 난입사건에 대한 설명회를 오늘 오전 11시 종로성당에서 갖는다. 또한 2시에는 탑골공원에서 '경찰폭행 책임자 처벌 및 해고노동자 복직촉구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

한편, 민주노총 해고자특위는 지난 19일 사당병원에서 환자복을 입은채 연행된 나현균씨의 사진이 인터넷서널 헤럴드 트리뷴(Herald Tribune)지에 실려 국제적 망신을 샀다고 전했다.

또, 영국노총(TUC)는 25일 김영삼대통령에게 지난 19일의 노동부 앞 경찰폭력에 항의하는 서신을 보냈다. 이 서신에서 “영국노총은 7백만 조합원을 대표하여 구속자의 즉각 석방, 집단폭행 책임자 처벌등 민주노총의 요구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귀 정부(한국정부)는 ILO 회원국으로서 부과되는 책임, 세계경제대국으로 귀국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는 것에 걸맞게 노동조합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심수 대사면 촉구 불교인권위등 9개 단체

「불교인권위」, 「대구 자비의 전화」, 「승려인권문제연구소」 등 9개 불교단체는 27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에 “부처님 오신 날 대사면, 복권을 행해 문민정부임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국 사원에 27일부터 5월7일까지

‘국가보안법 철폐주간’을 선포할 것을 요구했다.

국보법 무죄판결자 중언

제84차 민가협 목요일집회 제 84차 민가협 목요일집회가 4월 27일 오후 3시 30분부터 약 1시간에 걸쳐 탑골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는 국가보안법 7조(고무.관양)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6월과 21일 각각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난 이창복(전국연합 상임의장)씨와 박치관(사람과 일터 발행인)씨등 약 30여명이 참석하였다. 두 사람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때까지 함께 싸워나가자”고 말해 집회 참석자와 주위 시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포천소각장 회사측 법정대리인 사임 밝혀져

「환경운동연합」은 27일 포천 병원적출물 소각장반대 싸움에서 사업자 박용한씨의 법정대리인으로 알려진 정성호(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변호사가 4월10일자로 법정대리인을 사퇴했다고 알려졌다(<인권하루소식> 391호 참조).

○ 행사 안내 ○

□ 외국인노동자 문화한마당

- 일시: 4월30일(일) 오후3-8시
- 장소: 부천 석왕사 너른마당
- 주최: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032-668-0077)

□ 중국노동자센터 개소1주년 기념행사 및 심포지움

- 일시: 4월30일 오후6-8시
- 장소: 용산고등학교 강당
- 내용: 1부 심포지움-‘한국내 중국노동자(교포) 문제’ 2부 중국노동자 위안잔치
- 주최: 중국노동자센터(☎ 789-6355~6)

□ 아시아지역 가내 노동자 연대를 위한 국제회의의 보고회

- 일시: 5월9일 오후7시
- 장소: 여성복지회관(☎867-0516, 869-1347)
- 내용: 한국 가내노동의 실태와 현황/ 가내노동자에 대한 ILO의 토론결과와 아시아지역 가내노동자 실태보고/ ‘아시아지역 가내노동자 연대를 위한 국제회의’ 결과 보고
- 주최: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869-1347) 한국여성민우회(☎ 269-5764~5)

근 조
대구도시가스
폭발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경찰폭력, 화장 지워진 문민의 가증스런 얼굴 공대위, 해고자 폭행·사당의원 난입에 강력 대응키로

「경찰폭력 진상규명 및 사당의원 불법점거 규탄과 국민의 기본권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계훈제등 16명, 공대위)는 28일 오전 11시 종로성당에서 경찰의 해고노동자 폭력 사태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첫번째로 민주노총 해고자특위 상황실장 이형진씨와 사당의원 원장 김중구씨가 나와 4월 18일부터 20일 사이에 벌어진 경찰폭력 사태를 설명했다. 사당병원 원장 김씨는 “경찰의 병원 난입은 70-80년대 군사정권 아래서도 결코 없던 일”이라고 말하며 “이런 행위는 환자들의 진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치료할 권리를 박탈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노동정책연구소 소장 박석운씨는 “이번 사건은 백주대낮에 일어난 명백한 테러”라고 말하며 “적법절차를 떠난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진방주 목사는 “군사정권은 군대를 동원하여 인권을 침해하더니 문민정부는 경찰을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다”고 말하

며 “화장이 지워진 문민의 얼굴이 가증스럽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앞으로 노동계, 의료계, 종교계등을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집단적인 고소·고발운동과 노동부, 경찰청 항의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해고노동자 대책마련 및 복직과 구속자 석방 △청사경비 대장과 과천시장 구속, 노동부 관련자 처벌 △박일룡 경찰청장 사임 △노동부장관과 내무부장관 공개사과 △노동악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백기완, 김말룡씨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같은 날 오후2시, 설명회가 끝난 후 「민주노총 해고자특위」(대표 강중철, 해고자특위)는 탑골공원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 해고자특위는 “과천경찰서장의 직위해제, 폭행당한 해고노동자에 대한 피해보상, 노동부장관과의 면담, 노동악법의 개정”등을 요구했다. 대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명동성당까지 행진을 했다.

안기부, 박창희 교수 구속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

국가안전기획부는 27일 한국의국어대학교 박창희(63, 사학과)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안기부에 의하면 박씨는 90년 가을 일본에서 북한공작원인 서태수(71)씨에게 포섭되어 서씨의 지령대로 움직여 온 혐의다. 서씨는 박씨에게 8대학교의 박사무게 교수를 포섭, 일본에 데리고 오라는 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 박씨는 박사무게 교수를 93년 1월 박사무게 교수를 소개하는 등 30여차례에 걸쳐 일본을 드나들며 서씨와 회합통신해 왔다고 안기부는 밝혔다.

안기부는 8대의 박사무게 교수는 서씨와 일본에서 만난 자리에서 서씨의 포섭을 거부하였고, 귀국 직후 안기부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북한의 공작원으로 알려진 서씨는 47년의 대구폭동에 참가한 뒤 일본으로 탈출, 조총련에서 활동해왔다 고 안기부는 밝혔다.

사회권위원회 제12차회기 민간단체 대표 출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선수씨, 「참여연대」의 문진영, 장소영씨는 유엔 경제·사회·문화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 제 12차회기에 참석하고자 28일 제네바로 출국했다. 민간단체 대표로 참석한 이들은 제네바에서 조용환 변호사와 합류하여 5월 1일 한국상황에 대한 구두발표와 슬라이드 상영을 갖는다.

정부 안전사고 대책 질타 전국연합, 대구참사 논평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28일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에 대해 논평을 발표했다. “아연동 가스 폭발사고에 이어 발생한 이번 사고는 정부의 안전사고 근절구호를 무색케 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종합대책 수립과 책임자 처벌,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또한 「전국연합」과 「민주노총준비위원회」는 29일 청출, 조총련에서 활동해왔다 고 안기부는 밝혔다.

월말입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꼭 챙겨주세요.

예금주: 서준식
제일은행 128-10-131017 상업은행 431-07-056582
농협 011-01-404581 조흥은행 438-06-016840
외환은행 057-18-33811-7 우체국 013292-0011731
한일은행 112-182999-12-001
하나은행 105-106617-00107 신한은행 355-02-035530
국민은행 015-21-0723-021

<인권하루소식> 95년 4월분 총목차(374-393호)

월일	호	면	기 사 제 목
4/1	374	1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노조활동 위축, 민주노총 조직적 대응모색/8·15 50주년 기념 민족 공동행사 제안/전국연합, 한반도평화협정 제기 정책토론회/한일인권포럼 열려
		2	「인권하루소식」 3월분 목차(352호-373호)
		3	「인권하루소식」 3월분 목차(352호-373호)
4/4	375	1	국보법 제7조로 구속연장 피해자 19명, 국가상대로 손해소송제기/이상우씨 2년6월 선고/노점상연합회 간부에 최정환씨 장례로 소환장
		2	4·3항쟁 위령제 갖고 진상규명 다짐/이상우씨 사건의 문제점/주간인권호름
4/6	376	1	5·18묘역 국립묘지 승격 최규하 전대통령 증언촉구/학단협 김무용씨사건 관련 성명서 발표/공동육아연구회, 공동육아현장학교 진행/문국진씨 1심 선고 예정
		2	4일은 정신건강의 날, 정신질환자의 문제공유/김상진열사 20주기/한국여성의 전화 제24기 상담원교육/<독자투고> 박근백씨 사건으로본 이땅의 철거문화(고상만 전국연합 인권위)
4/7	377	1	최초로 국보법 위반 '진부' 무죄선고, 이창복씨 석방/유엔인권위 모니터링 활동 이상훈씨 귀국/한국 제조업노동시간 주48.9시간, 66개 국가중 7위-ILO발표
		2	한일인권포럼 도쿄와 오사카에서 개최, 국보법 철폐결의/<인터뷰> 제일한국인정치범 손유형씨 부인 부신화씨
4/8	378	1	민주세력 탄압증지, 사회단체 선거 참여 보장촉구, 광주연합 성명 발표/ 부산고문사건 TV 방영, sbs 「그것이...」/장애로 인해 집중적인 차별에 시달려, 여성장애인 공청회
		2	<고베 대지진 현장을 돌아보고> 복구정책에 민족적 차별은 있다/인권간행물
4/11	379	1	노동부 94년 산재율 발표, 중대재해를 심각, 산재율은 줄고 사망자 21.1% 늘어/민정련 울산지부 5명 국보법 위반 구속/경비교도대원 김성철씨 구타호소, 자살/인혁당 20주기 추모제 열려
		2	<자료>-이창복씨 국보법 위반무죄 판결중 제7조에 대한 법원판단 부분/주간인권호름
4/12	380	1	장애인 10% 공천, 비례대표제 참여 촉구/박근백씨 치료보장등 용역회사와 합의, 금호지구 철거대책위/성폭력상담소 94년 상담통계 발표, 어린이 성폭력피해 심각/인권어록
		2	김상진열사 20주기 출판기념회 열려/민정련 정치적 탄압증지 발표/<현장스케치> 경비교도대원 김성철씨의 죽음
4/13	381	1	조선노협 상경투쟁, 산재 직업병예방 촉구/노동부 94년 산재통계 ILO에 허위보고/지자체 후보공천 신청 재야단체 실무자 구속/한국중대재해를 세계 4위-『노동통계연감 1994』
		2	전국연합등 32개 단체 공동기자회견, 선거법 87조 폐지요구/언론연구원 교육, 언론의 인권 침해 강의/북한의 비전향장기수 가족들이 보내온 편지
4/14	382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정보통신 검열 시작/ 제일한국인단체, 전후보상·명예회복 촉구/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17·32조
		2	김성철씨 자살사건을 계기로 본 경교대
4/15	383	1	빈민대회, 용역단속방 해체·강제철거 중단등 촉구/여성의 전화, 여성상담사례집 펴내/우조교사건 재판부에 편지보내기운동/ 장애아동과 어깨동무, 장애인의날 행사
		2	김대중씨와 한일의원연맹 일본측 회장, 해방 50주년 맞아 양심수석방 노력 약속/광주전남 연합등 성명, 재야회원 실행선고 규탄/대한변협, 정부추진 사법개혁 반대/인권간행물

<인권하루소식> 95년 4월분 총목차(374-393호)

월일	호	면	기 사 제 목
4/18	384	1	해고자등 1천5백명 집회, '제3차개입금지 어기기' 집단적 결의
		2	<현장스케치> 4월혁명전시회 '껌테기는 가라'/장기수 강철순씨 운명/이부영의원 재판연기/일본군 위안부 영화 시사회/주간인권호름
4/19	385	1	유아 9백71명중 68명 학대, 방임당해, 아동학대예방협회/18일 비전향장기수 송환호소, 김인서씨등 기자회견/부산대 자주대오사건 3명 집행유예/인권어록
		2	5월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최초 방한/해고노동자 전경에게 폭행 7명 병원후송/참여연대 1차 국제포럼/제6회 4월혁명상 윤상원·신장근씨 수상
4/20	386	1	경찰, 부상 해고노동자 병원에서 강제연행/불교인권위 승려인권문제연구소 발기/김재오씨등 필리핀방문 '외국인노동자 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위해
		2	북경여성대회 참가신청 이번주 마감/장기수 고강철순씨 장례/<독자투고> 일본군 종군 위안부 기록영화 '낮은 목소리'/ 여성장애인분과 '빛장을 여는 사람들' 북경여성대회 준비박차
4/21	387	1	경찰, 새벽 병원난입, 노동자 강제연행/제판부 고문후유증 문국진씨 재판 미뤄
		2	장애인의무고용률 0.54%, 정부 발표/행사안내, 동정
4/22	388	1	해고노동자 구속연행 항의집회, 총 11명 구속/북한소설 출판 국보법 무죄/국제 엠네스티 뉴스, 김삼석씨 석방촉구/『민중사회를 위한 변론』 4호 출판
		2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김기중변호사)/인권간행물
4/25	389	1	파출소폭행 사과요구 분신, 시민중대/시민 이형기씨 진술내용/안산우신공업 파업에 노조 파괴전담반 동원
		2	민주노총 해고자특위, 무기한 단식농성/성폭력위기센터 개소 4주년/주간인권호름
4/26	390	1	민간단체, 유엔 사회권조약 보고서 작성완료, 회의 참석/안산경찰서 "이형기씨 폭행한적 없다" 변명, 안산지역단체 공동대책 모색
		2	안산 우신공업 노조 5명 구속, 노조파괴반 3월부터 합숙훈련/민주노총 경찰책임자처벌요구/전태일의 밤' 행사/<현장스케치> 경찰폭행에 항의 분신한 이형기씨 모습
4/27	391	1	<특집>포천 주민들의 병원적출물 소각장 반대싸움/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제4회 불교인권상 수상
		2	서울 봉천동, 철거반원 자궁에 연탄재 쑤셔넣어/이형기씨 국립의료원 입원/성희롱추방거리 캠페인
4/28	392	1	경찰, 봉천동 철거폭력 수사되지 않다/성희롱 항소심 공정판결촉구 선전전
		2	민주노총, 노동절맞아 민주노총 원년 선포/민주노총 준비위 해고자폭행사태 설명회/불교인권위등 9개단체 양심수 대사면촉구/민가협 84차 목요집회/포천소각장 회사측 법정대리인 사임 밝혀져/행사안내
4/29	393	1	경찰폭력, 화장 지워진 문민의 가슴스런 얼굴, 공대위, 해고자 폭행·사당의원 난입 강력 대응키로/안기부, 박창희 교수 구속-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사회권위원회 제12차회기 민간단체 대표 출국/정부안전사고대책 질타, 전국연합 대구참사 논평
		2	<인권하루소식> 95년 4월분 총목차(374-393호)
		3	<인권하루소식> 95년 4월분 총목차(374-393호)

<인권운동사랑방>은 국내 3대 컴퓨터통신망에 가입해 정보를 주고 받고 있습니다. 긴급히 연락주실 내용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주십시오. <인권하루소식>에 제공할 정보나 기사도 컴퓨터통신을 통해 보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하이텔, 천리안 ID: rights 나무꾼 ID: 인권사랑

인권하루소식

95년 5월

(제394호 - 제400호)

대구도시가스폭발
참사로 부상당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노동약법 어기기’와 ‘사회개혁’ 투쟁으로 민주노총 건설

1일, 수도권 노동자대회 3만 노동자 참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준)」(공동대표 권영길·양규현·권용목, 민주노총)은 1일 노동자대회에서 노동약법 어기기투쟁과 사회개혁 투쟁을 전개해 올 10월안에 민주노총을 건설하기로 결의를 모았다.

따라서 민주노총(준)은 소속 단위사업장과 함께 5, 6월 임투동안 대표적인 노동약법으로 손꼽히는 복수노조금지, 제3자개입금지,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을 무력화하는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즉, 제3자개입금지에는 제3자개입으로 대응하고, 노조의 정치활동금지는 6·27 지자체 선거에 적극 참가해 깨뜨린다는 것이다.

권영길 공동대표는 “더이상 구호나 주장이 아닌 실제적인 사회변혁의 힘을 기반으로 올해 반드시 민주노총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국민 대다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개혁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제시한 6대 사회개혁투쟁은 의료보험통합과 보험적용확대, 세계개혁, 연금제도 개선, 재벌경제력 집중 규제, 교육개혁 등이다. 이밖에도 민주노총은 임금가이드라인 분쇄, 해고자복지투쟁, 8·15 민족공동행사 실현 등 통일운동을 올해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대회에 참석한 3만여명의 노동자들은 식전행사와 본대회를 서울대에서 마친 뒤 보라매공원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전근대적 노동정책 철회 전국연합·AI 한국지부 노동절 성명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1일 세계노동절 제105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

표하고 “재벌편향의 경제정책과 전근대적인 노동정책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연합은 성명에서 “김영삼 정부는 임기초기 약속과는 달리 해고자복지, 노동법 개정, 임금교섭등 노동정책에 어떠한 성의도 보이지 않는다”며 “진정으로 세계 속의 일류국가로 도약하고자 한다면 노사관계의 세계화, 노동정책의 세계화, 노동자의 자주적 권리보장등에 중점을 두는 집권층의 발상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 한국지부)도 1일 노동절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지부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자유로이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였다

는 이유만으로 체포, 고문 또는 살해되는 세계도처의 인권침해 사태는 즉각적으로 중단되어야 하며 이러한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처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노동쟁

의조정법내 제3자개입금지규정은 국제노동기준에 반하는 법률”이라며 “한국정부가 즉각적으로 이 조항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조선대 교지편집장 구속 전남대생도 연행 조사중

4월30일 오후 8시40분 조선대 교지 <민주조선> 편집장 진재후(기계설계공학 4년, 92학번)씨가 후배 병문안을 하러 광주 동광주병원에 들렀다가 병원에서 전남도경 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 구속되었다. 진씨는 지난해 이철규열사 추모제에 맞춰 <민주조선> 창간호에 실린 이씨의 글 ‘미제침략 1백년사’와 ‘북한의 혁명과 건설’등을 판별로 제작한 것과 관련하여 수배를 받아왔다. 한편, 지난해 <민주조선> 편집장이었던 차계덕씨도 같은 이유로 지난해 구속되었다가 최근 석방되었다.

전 전남대 동아리연합회 학술부장 양성현(물리학과, 91학번)씨는 1일 오전 8시 집에서 전남도경 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 알 림 ○

* <인권하루소식> 기자로 1년 이상 근무한 김수경 기자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에서 근무했던 김정희씨가 새롭게 <인권하루소식> 기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 5월부터 <인권하루소식>의 정보망이 넓어집니다. 그동안 <인권하루소식>이 수도권 중심 소식에 머무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13개 도시의 인권단체와 재야단체 실무자들을 지방통신원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지방통신원들의 활약으로 <인권하루소식>은 전국적인 인권소식망을 갖출 것이고, 지방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나 인권 증진 활동들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하루소식>의 넓어진 보폭을 지켜봐 주십시오.

● 공판 안내 ●

- 5월 2일(화)
 - 함평기, 국보법 위반, 오후4시, 서울지법 8단독 425호
- 5월 3일(수)
 - 이진영, 국보법 위반, 오후2시, 서울지법 1단독 424호
 - 신용섭, 국보법 위반, 오후4시, 서울지법 4단독 421호
- 5월 4일(목)
 - 서중현, 국보법 위반, 오후1시, 서울지법 합의21부 311호
 - 김현준, 국보법 위반, 오전10시, 서울지법 합의23부 319호
 - 문국진, 국가손배소송, 오전10시, 서울지법 민사13부 559호(선고)
- 오종열(광주연합 의장), 집시법 위반등, 오전11시30분, 광주지법 201호

외국인노동자 한마당 열어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외국인노동자문화한마당’이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의 주최로 지난 4월30일 오후3시 부천 석왕사 너른 마당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1백여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은 부천어린이들의 태권도 시범을 관람한 뒤 양편을 갈라 웃놀이, 족구, 농구, 훌라후프등을 하며 평소 구경이 있던 마음을 풀고 즐거움을 나눴다. 행사가 진행되는 마당 한쪽에는 외국인노동자들이 가져온 고향의 사진과 포스터등이 전시되어 각국의 자연환경과 문화등이 소개되었다.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은 지난 3월에 부천지역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를 상담·지원하고자 문을 열었다. 사무국장 예영주씨는 “코리아드림의 꿈을 안고 한국에 와서 자신의 친구가 판에 실려 또는 한쪽 팔과 다리를 잃은 채 귀향하는 현실에 처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마음놓고 놀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고자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포천 음독 이병준씨 장례 ‘포천병원 적출물 소각장

건설 반대공동투쟁위원회(공동대표 김광분등, 공투위)는 지난 25일 음독자살한 고 이병준(65)씨의 장례식을 4월29일 경기도 포천군 창수면 추동리에서 공투위장으로 치렀다. 공투위는 포천읍내에서 영결식과 노래를 치를 계획이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곧바로 장지로 이동하여 약식으로 치렀다. 한편, 이씨와 같은 날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 신현갑(31)씨의 장례는 지난 4월27일 가족장으로 치뤘다.

국보법, 노조법 폐지 촉구 전국연합, 법의 날 성명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대변인 임종인)은 1일 법의 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 국보법과 노동조합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전국연합은 “이성과 상식에 위배되는 법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80년 권력찬탈과정의 국가보위입법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가보안법과 노동조합법을 들었다. 전국연합은 “국민의 사상, 표현, 학문,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보법과 노조의 정치참여금지, 복수노조금지, 공무원노조금지, 제3자개입금지조항이 있는 노동조합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오늘의 행사 ○

- 어린이날 기념 토론회-방과후 아이들: 교육과 보호 어떻게 할까
· 일시: 오후3시-5시30분
· 장소: 종로성당 3층 강당(중요공원 앞)
· 주제발표: 방과후 아동보호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김재인, 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원)/방과후 아동의 현실과 민간공부방의 사업전망(김명희,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방과후 아동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에 대하여(이옥, 덕성여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 토론자: 차원재(한석국민학교 교장)/매명준(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사무관)/홍미영(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의원)
·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전화: 738-2883)
- LG그룹 해고자 복직 촉구대회
· 일시: 낮 12시30분-2시30분
· 장소: LG그룹 본사 쌍둥이 빌딩 중앙현관앞(여의도)
· 주최: LG그룹의 도덕성 회복을 촉구하는 LG고객 일동(전화: 784-6037)

주/간/인/권/호/름

(4월24일-30일)

<24일>

폭행사과 요구하며 분신한 이형기씨 사건과 관련 안산경찰서 원선파출소장의 2명 직위해제/ 민주노총 해고자특위 소속 10명 명동성당서 단식농성/ 건설교통부 전국 공용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장 1% 의무화 올해안 입법화 예정 / 목포해양경찰청 베트남난민 7명 탄 목선 발견/ 안산 우선공업 농성노동자 관리직 사원과 충돌, 노동자 7명 입원, 노조사무장 김성학씨는 23일 구속/ 일본 환경단체 해 폐기물 운반선 일본입항에 대해 반례시위

<25일>

인권운동사랑방, 민변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 관련 기자회견/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반핵운동본부’ 회원 20여명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플루토늄 비축정체반대 시위/ 독일 4백여명의 반핵시위대 핵폐기물 수송에 항의 철도차량에 불 지르고 시위, 25명 체포/폭력철폐기 근절과 전·월세 안정을 위한 국민대회 열려, 봉천동 재개발지역 부녀자들 철거용역회사 고용원들에게 폭행당했다고 폭로/ 서울고법 민사5부, 91년 시위중 숨진 김귀정씨 유족에 1억4천만원 배상 판결/ 비동맹회의 인도네시아서 개막, 르완다 인종학살·남·북반부 발전문제등 국제현안 다뤄/ 아르헨티나군 70년대 군부에 의해 수천명의 반체제인사 납치·살해된데 대해 처음으로 공식사과/한국통신, 노조간부 64명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 포천 병원적출물 소각장 건설반대해은 이병준씨 농약먹고 자살

<26일>

관악구 봉천6동 세입자 폭행사건 관련 철거용역회사인 적준개발 현장소장 경제용씨등 4명 소환, 조사/ 부산 만덕구 교생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 항소심 첫공판/ 불교인권위 제4회 불교인권상 수상단체로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선정/ ‘올바른 교육개혁을 위한 범국민연대의’, 발족식/ 인천지방노동청, 풍납정밀 대표 조철원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북여성의전화 94년 한해동안 상담 6백17건 중 구타 1백8건으로 17.5% 밝혀

<27일>

경원대, 경원대생 1백8명 미등록계적 철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준비위원회’, 18일 노동부앞 경찰폭행사태와 관련 설명회, 결의대회 가져/ 노동부 여성만 모집·채용시에 도 신체조건제시 법적 금지등을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마련/안기부, 외대 박창희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통신)혐의로 구속

<28일>

대구지하철 공사장에서 도시가스폭발로 1백명 이상 사망

해설

대구지하철 공사장에서 도시가스 폭발 참사가 일어나 학생들을 비롯한 1백여명이 죽는 참사가 발생했다. 작년 아현동도시가스사건의 재판인 이 사고는 성수대교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석방된 직후 일어났다. 정부는 출속적인 수사로 이 대형참사를 마무리짓는 선에서 끝내려 하고 있다.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둔 개발로 인식전환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인식의 대전환이 없이는 대형참사는 언제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대구도시가스폭발
참사로 부상당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해고자 복직, 소비자가 나섰다

LG그룹 도덕성 회복 촉구하는 소비자들, 결의대회 가져

소비자들이 해고자 복직 문제를 놓고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다. 「LG그룹의 도덕성 회복을 촉구하는 LG소비자들」(대표 신용순, LG소비자들)은 2일 오후 12시 30분 여의도 LG본사 쌍둥이 빌딩 앞에서 LG해고자 복직 촉구대회를 가졌다. 촉구대회에서 LG소비자들은 “LG그룹이 인간존중이라는 캐치플레이에 걸맞게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본에 살고 있는 윤명예(35)씨는 “LG그룹은 자기 가족도 해고하면서 어떻게 고객을 사랑한다고 말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윤씨는 LG그룹이 광고를 통해 마치 공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이미지를 가꾸지만 실제로 노조활동

하는 노동자를 해고시키고 해고자 복직투쟁에 구사대를 동원하는 등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촉구대회를 산본지역 주민들이 앞장서게된 이유에 대해 윤씨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주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일하는 분이었는데 알고보니 LG그룹 부당 해고자 이동열씨였다.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어서 오늘 이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윤씨는 “우리 소비자들의 의식도 이제 많이 향상되어 나쁜 짓 하는 기업의 물건은 쓰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쓰는 물건을 노동자들이 만들고 있는데 노조활동했다고 노동자를 해고시켜서야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LG소비자들은 해고자 복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LG고객 및 전국의 주부, 학생, 소비자 단체등과 연

대하여 항의전화걸기, 제품 불매운동등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소비자들이 기업의 도덕성 회복과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대회가 끝나고 60여명의 주민들은 쌍둥이 빌딩을 둘러싸고 해고자 복직의 정당성을

감옥 창살마저 막아버린 영등포교도소 민가협, 법무부 항의방문

영등포교도소(소장 송선홍)가 지난 4월15일부터 독거수들이 수감되어 있는 감방의 창문을 자살행위를 막는다는 이유로 봉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 민가협)에 따르면 영등포교도소는 “법무부의 지시”라며 유일하게 방안에 햇빛이 들어올 수 있는 창문을 두꺼운 철판으로 막고, 철판에 구멍을 뚫어놓았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구국전위’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형을 선고받고 면회한 가족들에 의해 밝혀졌다. 영등포교도소측은 “창문 봉쇄는 재소자간의 격리와 자살방지를 위한 것이며, 법무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영등포교도소를 제외하고 다른 교도소나 구치소에도 이런 사실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민가협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영등포교도소의 경우

홍보했고 구본승 회장과 만나려 했으나 LG그룹측의 저지로 무산, 항의서만 전달했다.

민주노총(준) 해고자특위는 “해고자 복직 투쟁은 지금껏 당사자와 가족들의 몫이었는데 소비자들이 나선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노동운동이 이제 전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며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작년 여름 열악한 교도소 환경과 폭염으로 인해 갑자기 재소자가 절식사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를 교훈 삼아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여름을 앞둔 지금 창문마저 봉쇄한 것은 교정행정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비난했다.

우리나라의 교도소나 구치소 감방에는 단 하나의 창문이 달려 있는데, 이 창문에도 손가락 굵기의 최창살이 박혀 있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재소자들은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운동시간외에는 햇빛을 맘껏 쬐 수 없다.

한편, 민가협에서는 2일 이에 대해 안옥희씨등 의장단 6명이 항의방문하였으나, 보안과 직원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가협은 이번 사건에 대해 “행정편의적이고 비인간적인 처우”로 단정짓고 이의 철회를 위해 교정국장을 면담하여 따질 예정이다.

인 \ 권 \ 어 \ 특

△ 세계화도 복지국가도 필요없으니 제발 늙어서 죽을 수 있게만 해달라

- pc통신 토론장에서 경북대 여승환

△ 대구에서 또 가스 폭발 대참사. 사보타지보다 더 무서운 얼렁뚱당 정신

- 조선일보 4월 29일 째면봉

△ 한국인들은 경험을 통해 배우지 못하는 것 같다. 그들은 편리하게 잊었고 법을 어긴 사람들을 용서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지우는 버릇이 있는 것 같다. 한국 국민들이 자기 행동에 책임지려 할 때 민주주의의 꽃이 피고 사고도 줄어들 것이다.

-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지 29일 논평

어머니 상습 폭력 보다 못한 살인

여성의 전화, 구명운동 펼쳐기로

「한국여성의 전화」(회장 신혜수, 여성의 전화)는 지난 3월18일 계속되는 가정 폭력 때문에 아버지를 존속 살해한 전경진(17)씨에 대해 구명운동을 벌이겠다고 2일 밝혔다.

여성의 전화가 어머니 한 아무개씨와 아들 전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 따르면 한씨는 결혼초부터 18년동안 남편 전상덕씨에게 매를 맞았고 싸움을 말하는 과정에서 아들 전씨 또한 많은 구타를 당했다고 한다. 또한 별거동안에도 아버지 전씨는 한씨를 자주 불러내어 모욕을 주거나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했다. 한씨는 "93년 남편 구타를 피해 경찰서에 보호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관할이 아니라며 회피했다"고 진술했다.

여성의 전화는 "가정폭력, 아내구타는 사적인 문제이니 가정에서 해결하라는 우리사회의 통념이 결국 한 소년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죽인 패륜아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의 전화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가정폭력방지법 등 법적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전씨의 구명운동을 펼쳐기로 했다.

전씨는 현재 인천교도소에 수감중이다.

맞벌이부부 아동 위협에 방치 여연, 방과후 어린이 문제 토론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미경등 3명, 여연)은 '방과후 아이들'교육과 보호 어떻게 할까를 주제로 어린이 날 기념 토론회를 2일 종로성당에서 열었다.

'방과후 아동지도의 실제와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한 김재인(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원)씨는 "어머니가 취업한 국민학생은 평균 3-7시간 정도를 혼자서 지내며 유해한 환경과 성폭력과 같은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빈민지역의 경우 주변 환경의 열악성 때문에 의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방과후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위해 "아동지도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과 지역사회시설의 개발, 아동지도사 교육의 제도화, 아동지도프로그램의 개발"을 주장했다.

그밖에 김명희(서울지역 공부방연합회 회장)씨가 '방과후 아동의 현실과 민간공부방의 사업전망'에 대

해, 이 옥(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교수가 '학령기 아동을 위한 방과후 탁아프로그램의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대구참사 졸속수사 규탄

대구도시가스폭발참사에 대한 졸속수사와 서둘러 덮기식의 사건 마무리에 대해 대구지역의 단체들이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 대구 지역의 기독교청년회, 여자 기독교청년회, 경실련, 흥사

단, 여성회등은 2일 성명을 내고, "사고현장의 안전검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채 납득할 만한 진상규명이 복구에 나서고 있다"며 사건을 축소, 마무리하려는 검·경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전국연합도 2일 논평을 통해 "철저한 수사 책임자 처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한총련은 출범식 기간동안 모금과 헌혈운동을 펼쳐기로 했다.

5.3 동의대 사건 잊으셨습니까?

고난모임, 진상규명 구속자 석방 요구

5.3동의대사건이 발생하지 6년이 지난 오늘 당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다시 일고 있다. 당시 노태우정권이 고 문익환목사의 방북사건을 빌미로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전국에 비상경계령을 내렸다. 또한, 안기부, 보안사, 검찰, 경찰 등으로 합동수사본부를 만든 가운데 당시 부산 동의대에 농성중인 학생들을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재로 인해 경찰관 7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학생운동사상 최악의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의 정권과 언론은 이에 대한 원인규명을 방기한 채 학생들의 과격화 시위를 이유로 학생들을 매도하였고, 당시 도서관에서 농성중이던 동의대생 100여명을 연행하였다. 이중 72명의 학생들이 구속·기소, 30여명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들중 윤창호(동의대 총학생회장, 무기형에서 20년으로 감형), 오태봉(20년형에서 8년으로 감형)씨들은 지금도 감옥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당시 사건발생의 원인은 89년 5월1일 동의대 학내시위에서 부산가야파출소 경찰이 총기난사를 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이튿날인 2일 학생들이 총기난사를 규탄하는 학내 시위를 하던중 학내사찰중인 전경 5명을 발견, 학생 1백여명이 이들을 도서관에 감금하였고, 이를 강제진압하려 경찰병력이 3일 학교 도서관에 진입하면서 발생했다. 경찰이 학생들을 진압하기 위해 도서관으로 진입하던 중 7층 세미나실에 큰 화재가 발생, 비극이 일어났다. 당시 강제진압의 필수항목인 매트리스를 바닥에 깔지도 않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당시 진압에 나섰던 전경들도 화인에 대해 양심선언을 하였지만, 이는 묵살되고 학생들의 화염병 투척에 의한 화재로 판결내려져 동의대 학생들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대표 신경하, 고난모임)은 2일 목회자 74명과 평신도 85명의 서명을 받아 5.3동의대 사건의 전면재수사와 화재원인 진상규명 △구속자들의 명예 회복과 석방등을 요구했다. 고난모임은 같은 날 국회에도 이와 같은 요구를 전달했다.

대구도시가스폭발
참사로 부상당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노동운동 전면적인 탄압에 공동대처

경기남부지역 80여 노조·노동단체 노동탄압에 제3자개입선언

경기남부지역 80여개의 노동조합과 노동단체들이 '제3자 개입'을 선언했다. 이는 민주노총(준)이 제3자개입 선언방침을 결정한 이래 한 지역에서 가장 많은 조직이 동시에 참가한 경우다.

3일 수원 동회장에서 모인 경기남부지역의 노동조합과 노동단체 대표들은 "현정권에서 군부독재시절보다 더 강도 높고 교묘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고, 특히 경기남부지역에서는 그 사태가 심각하다"며 "정권의 적극적인 개입 하에 노동조합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책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기남부지역 민주노조운동진영은 약박은 어겨서 깨뜨리고 최근 자행되고 있는 탄압에 적극적으로 맞서 나가기 위해 3자개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3일 현재 경기남부지역에서는 안산지역에서 30개, 안양지역에서 23개, 수원지역에서 21개의 노동조합과 노동단체등 80여 노동조직들이 3제개입 선언에 서명했다. 이들은 계속 서명을 확대해나가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노동운동탄압에 적극 연대투쟁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의 기자회견에서 특히 안산 우신공업, 수

원의 한일전장, 안양의 LG전선, 의왕의 계요병원에서 해고와 폭력, 노조간부의 구속, 교섭 지연등 부당노동행위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산지역의 우신공업에서는 지난 4월22일 폭력 사태가 발생, 농성 중인 노조원들이 구사대의 폭력으로 쫓겨났다. 이후 회사에 출근하려는 노조원들을 구사대가 두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둘러 노조원 중 40여명은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또, 폭력으로 강제사직서를 쓴 사람도 17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노조위원장등 노조 간부 5명이 구속된 상태이며, 노조원 7명이 부상당해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거나 통원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폭력을 휘두른 구사대는 단 한명도 입건되지 않았다.

진상규명, 구속자 석방 촉구 5.3동의대사건 집회 열려

6년전 발생한 동의대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가 3일 오후 부산 동의대 교정에서 열렸다. 5.3동지회, 구속학생가족대책위원회, 동의대총학생회 등과 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등이 주최한 이 집회에는 학생, 시민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날의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정부가 5.3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의건으로 구속중인 윤창호씨 등 5명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5.3 동의대 사건은 "화염병에 의한 화재 발생"을 주장하는 검찰의 주장이 재판부에서조차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화재 발생원인에 대해 지금까지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도 2일 성명을 발표,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인권하루소식> 5월3일자 참조).

어린이성폭력예방비디오 홍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 성폭력상담소)는 어린이 날을 맞이하여 어린이 성폭력예방비디오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성폭력상담소는 "전체 성폭력 사건중 28.7%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라는 점을 생각하여 어린이 성폭력의 실상과 예방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내 몸은 내가 지켜요>란 제목의 어린이 성폭력 예방비디오는 93년 피나비전에서 제작, 그동안 전국 8백여 국민학교, 유치원등에 배포되어 많은 호응을 얻어 왔다고 상담소측은 밝혔다. 문의전화 576-7127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강연 17일 정대협, 대한변협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등)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선)등은 한국을 방문하는 유엔 인권위원회 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라디카 쿠마라스와미(Ms. Radika Coomaraswamy, 스리랑카 변호사)씨의 강연회를 17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가진다.

<인권하루소식> 합본 III호 판매중

신공안정국과 94년 하반기 인권상황을 한 눈에!
주요내용: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실천 / 한국의 인권, 1994 / 합본 I-III호 통합 색인(총 360쪽)

책값: <인권하루소식> 독자 5천원, 일반 1만원

** 신청은 인권운동사랑방(전화 715-9185)으로, 입금 확인된 다음 우송해드립니다.

<알림>

* 이번주 인권활동가를 위한 공개강좌는 쉽니다. 오는 13일에 열리는 다음 강좌는 형사소송법을 주제로 차병직변호사가 맡게 됩니다.
* <인권하루소식> 내일자 쉽니다.

지난달 구독료를 내셨습니까?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꼭 챙겨주세요.

예금주 : 서준식

제일은행 128-10-131017 상업은행 431-07-056582
농협 011-01-404581 조흥은행 438-06-016840
외환은행 057-18-33811-7 우체국 013292-0011731
한일은행 112-182999-12-001
하나은행 105-106617-00107 신한은행 355-02-035530
국민은행 015-21-0723-021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①> 어린이날에 생각하는 아이들의 권리

“매일 3천5백명의 어린이들이 영양실조와 질병, 가난으로 죽어간다. 제3세계 어린이중 대략 1억3천만명의 학령아동이 초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그중 2/3는 여자아이들이었다. 세계 55억의 인구중 약 1/3이 안전 한 식수를 마시지 못하며 그결과 200만명이 넘는 5세 이하 어린이가 해마다 설사병으로 죽어간다. 에이즈가 새로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나라에서는 새로운 감염자의 60%가 청소년이다.” [유니세프 1994년 연차보고서중에서]

“현재 보육시설의 공급율은 전체 보육수요의 22%에 불과하다. 이혼율이 4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가정환경상실 아동의 수도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소년소녀가장은 8년 전보다 50%나 증가하였다. 교사나 부모의 이유없는 꾸중이나 가정불화, 성적부진을 이유로 가출충동을 느끼는 중고생이 전체학생의 63.4%에 이른다. 아동과 청소년의 가장 큰 사망원인은 교통사고등 ‘불의의 사고’에 의한 것으로 전체의 45%이상 차지한다. 장애아동중 불과 12.6%만이 교육혜택을 받고 있다. 아동수당제도조차 없는 사회 복지서비스예산은 전체 예산의 1.7%에 불과하며 이중 아동을 위해 쓰이는 것은 극히 적다. 한 예로 정부의 생계 보호를 받는 아동의 1인당 하루 반찬값은 1천20원에 불과하다. 성폭력상당사의 상담통계에 의하면 어린이와 청소년이 전체 피해자의 50.8%를 차지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을 할 수 있는 전용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학교 어린이의 74%가 학원이나 과외공부를 한 경험이 있으며 학교에 와서 수업시간에 학원숙제를 하느라 수업을 제대로 못 듣는 어린이가 있다. 덕분에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가계지출의 30%에 이른다. 교육부는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10%를 통폐합시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에 대한 한국 민간단체보고서 초안 중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다는 각종 행사의 50%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어린이날이다. 그러나, 앞에서 산만하게 나열된 통계들은 5월에 편 웃음꽃이 어른들의 연극이 아닌 가 하는 의심을 하게 할 뿐이다. 어린이 문제에 대한 토론은 막연하게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문제’ 중심으로 넘비끓듯하는 경향이 있다. 결식아동의 문제에 서 소년·소녀가장으로 심장병어린이의 문제로 옮겨다니는 식으로 말이다.

<인권하루소식>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어린이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과 지침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은 54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이다. 이는 어린이를 삶과 교육과 권리의 주제로 인정하고 어린이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1994년말까지 168개국에 비준한 인권조약이다. 이 조약에 비추어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문제를 ‘생명, 생존, 발전권, 부모, 가족에 관계된 조항’, ‘의견표명의 권리’, ‘특별한 상황에 처한 아동’으로 나누어 앞으로 7회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 행사안내 ○

- 제5회 새날을 열어갈 아이들의 한마당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 일 시: 5월5일 오전 10시-오후 4시
 - 장 소: 서울교육대학교
 - 주 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지역사 회탁아소연합 등 7개단체(☎ 634-6508)
- 「봉천동 나눔의 집」 ‘청소년쉼터’ 개소식
 - 일 시: 5월6일 오후 4시
 - 장 소: 봉천동 나눔의 집(☎ 871-1596)
- 이철규열사 6주기 추모제
 - 일 시: 5월6일 오후 2시
 - 장 소: 광주 망월동 5·18묘역
 - 주 최:이철규열사추모사업회(☎ 062-232-5809)
- 김기설열사 4주기 추모제
 - 일 시: 5월7일 오전 12시 (오전 10시 동대문운동장 시계탑 앞 출발)
 - 장 소: 마석 모란공원
- 인천 생존권쟁취 결의대회
 - 일 시: 5월8일 오전 12시
 - 장 소: 인천시민회관 앞
 - 주 관: 주거권 실현을 위한 인천시민연합, 인천노점상연합회(☎ 032-874-5431)
- 토론회-「손해배상청구소송과 단체행동권」
 - 일 시: 5월9일 오후 2시
 - 장 소: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 최: 손배소송공동대책위원회(☎ 765-2010)
 - 내 용: 손배소송에 의한 노조탄압의 실태(석치순)/손배 소송판례의 문제점(이원재)/외국사례로 본 손배소송의 문제점(이광택)/손배소송에 대한 대응방안(박석운)

◆ 동 정 ◆

- '91년 유서사건으로 3년 2개월의 실형을 살고 지난해 8월 만기출소 한 강기훈(32세)씨가 5월부터 인권운동사랑방 자료실에서 근무한다.
- 「안산경찰의 이형기씨 폭행 및 분신방조등 인권유린 안산지역대책위원회」는 현재 국립의료원에 입원 치료중인 이형기씨를 위한 모금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구좌번호: 농 협 211051-52-444202
 - 예금주 신인철
- 「민주노총(준) 해고자특위」 소속 10여명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과천종합청사 앞 폭행에 대한 규탄과 책임자처벌,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다.
- 김겨성 목사(인권운동사랑방 자문위원)가 네팔 카투만 두 소재의 HURIDOC에서 4월17일부터 10일간 인권자료 데이터분석교육을 받고 27일 귀국했다.
- 전국연합에서 함께 일해온 최홍제씨와 신미혜씨가 7일 오후 1시 고려대 노원극장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 「영화전대일 제작위원회」는 영화제작에 필요한 경비를 모금하고 있다. 전대일열사의 생애를 재조명하는 이 영화에는 문성근, 홍경인씨등이 개런티없이 출연한다(전화: 02-3672-4138,9)
- 모금 지로번호 5311668 예금주: 기획시대 이소선

대구도시가스폭발
참사로 부상당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정신적인 고문후유증 첫 국가배상판결 서울민사지법, “국가는 문국진씨에게 1억4천만원 지급하라”

과거 군사정권에 의해 고문을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재판장 성문용 부장판사, 주심 최혜리판사)는 4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559호 법정에서 문국진(35)씨가 제기한 고문후유증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심에서 “국가는 문씨에게 1억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발작 및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도 필요한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조사를 강행, 징벌방에 가두는 등의 조치로 원고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측의 주장을 인정하여 수사 관계자들의 직무집행상의 위법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기한 3년의 손해배상청구권 공소시효 만료 문제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비로소 시효를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공소시효에 대한 진일보한 판결을 내렸다.

이번주 <인권운동활동가를 위한 공개강좌>는 **쉽니다. 다음주 강좌는 차병직 변호사가 진행하는 ‘형사소송법’입니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문씨의 치료비를 포함하는 고문후유증 치료와 문씨가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도 배려하여, 배상액을 결정했음을 밝혔다.

문국진씨의 부인 윤연옥(33)씨는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사법부가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고문후유증을 인정한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고문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해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었으므로 당연히 이들의 원상회복과 치료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경찰서에서 고문을 당한 김중경(44)씨, 반계동맹당 사건으로 고문당한 박충열(35)씨등이 제기한 민사소송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문씨의 재판결과를 주목해 온 5, 6공 시절의 고문피해자들의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문국진씨는 86년 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공소시효에 대한 진일보한 판결을 내렸다.

현(93년 사망)씨등의 수사관들로부터 3일간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고문을 당했고, 이후 성동구치소에 서도 징벌방에 갇히는 등의 고문을 당하다가 발작 증세를 보였다. 87년 3월 기소유예로 출소한 그는 현재까지 일곱번째 발병하였고, 현재도 고대구로병원에 입원해 있다. 변호인은 백승현 변호사가 말했다.

또 하나의 부끄러운 방송사 대구가스폭발사고 보도

「방송개혁국민회의」(공동 본부장 강문규등 9명, 방개혁)은 지난 4일 프레스센터에서 대구 가스폭발사건의

<주요사고 TV 방송시간 비교>

* MBC 뉴스데스크

사고명	방송시간			낮방송여부
	사고당일	이틀째	사흘째	
성수대교붕괴 '94.10.21	47분19초	18분25초	23분2초	낮12시15분까지 연장
아현동가스폭발 '94. 12. 7	23분34초	15분57초	20분51초	공보처 불허
대구 가스폭발 '95. 4. 28	23분56초	13분10초	10분26초	오후 3시부터 20분 방송

* KBS 9시 뉴스

사고명	방송시간			낮방송여부
	사고당일	이틀째	사흘째	
성수대교붕괴 '94.10.21	31분17초	21분10초	21분1초	거의 중일방송
아현동 가스폭발 '94. 12. 7	12분15초	12분25초	7분35초	없음
대구 가스폭발 '95. 4. 28	18분4초	20분8초	16분10초	오전 15분연장, 야구중계 중 20여분방송

<자료제공: KBS노보>

새날을 열어갈 아이들의 한마당 행사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교 육대학교 교정에서 어린이 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전교조 서울지 부」, 「서울교대총학생회」 등 8개 단체가 "제5회 새 날을 열어갈 아이들의 한 마당-머리가 하늘까지 닿 겠네"가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있었다. 행 사가 열린 서울교대 교정

곳곳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과학놀이동산, 음악놀이동 산, 그림그리기, 공동체 놀 이마당등이 펼쳐져 선생님, 부모와 함께 나온 어린이 들은 하루종일 즐겁게 놀 이를 즐겼다. 또, 교정의 곳곳에는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시들이 전시 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어린이도서관연구회」에서는 어린이권장도서전시회를 갖기도 했다.

어린이권리 홍보물 배포

15개 단체로 구성된 「어 린이·청소년 권리 연대회 의」는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만화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4쪽 으로 된 이 홍보물은 부모 와 어린이·청소년이 함께 읽으며 인권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홍보물이 필요한 단체나 개인은 인권운동사랑방(전

화:715-9185)로 연락하면 된다.

봉천동 철거 성폭력책임자 처벌 요구 성명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 대표 이미경등), 「한국여성 의 전화」(대표 신혜수)는 봉천 6동 철거민대표 전철 순씨에 대한 성폭력사건과 관련해 2일 성명서를 발표 하여 성폭력 가해자 적준 용역회사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독자기고> 티벳의 노승려·세계화·인권

혜 진 (불교인권위원회 간사, 현재 국제엠네스티 런던사무국 인권과장중)

며칠전 티벳의 불교승려가 엠네스티 사무국을 방문하여 티벳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연설할 기회가 있었다. 팔든 가트소라는 이름의 이 승려는 티벳의 독립을 주장하다 정치범으로 체포되어 33년동안 중국의 감옥에서 보냈다. 물매, 전기고문등 형용할 수 없는 학대를 다 견내하면서 수형생활을 견뎌온 그의 신념은 엠네스티내에서도 화제가 될 정도였다. 그는 지난 수년에 걸친 구명활동으로 92년에 석방되었다.

"수형생활중 어느 날엔가 빈약하기 짝이 없던 식사가 갑자기 바뀐 적이 있다. 나를 대하는 중국관리들의 태도가 이전과는 전혀 판판이었다. 영문도 모르고 먹은 그날의 아침식사가 지금도 내 기억속에 생생하다"고 말을 댔 뒤 "마오이즘은 비판을 중요시한다. 비판이 없는 발전은 없기 때문이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중국정부는 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서 나의 수형생활이 알려지고 엠네스티의 구명활동이 시작되었을 때 중국정부의 나에 대한 입장은 판이하게 달라졌다. 그들은 지금 관성에 젖어 있으며 마오이즘을 망각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엠네스티의 구명활동은 여러분이 나에게 준 아침식사이자 중국정부에게 잠시나마 마오이즘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문등 온갖 고통을 다 감내해야했던, 그래서 62세의 나이에 걸맞지않게 훨씬 늙어보이는 그가 한 말은 나에게 많은 것을 반성하게 한다. 한국의 인권단체는 그동안 국내의 민주화와 인권문 제에 집착한 나머지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에 너무나 무 관심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티벳의 독립과 인권문제에 있어서는 중국과 관계를 고려하여 예외 외면해 왔다. 실 제로 동서냉전시기에는 티벳의 독립과 인권문제가 서방 국가에 의해 중국에 대한 체제내적인 압력을 가하기 위 한 수단으로 이용해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 시기 군사정권하에서 모든 것이 조작되던 시대적 상황이 있었다. 이 시기 북 한 문제를 거론하는 일 자체가 오히려 정권에 의해 왜곡 되기 심상이어서 민주화 운동과 통일운동에 막대한 지장 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동서냉전의 붕괴는 한반도에 새로운 시

대적 상황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인권, 사회개 발, 환경등 새로운 지구적 차원의 과제에 직면하였고 우리도 그 주체로서 변화에 부응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작년 이후 한국의 인권단체 내부에서도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새로운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의 거론은 북한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통일을 이루려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우선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해 한국의 인권단체가 주관이 되어 동티모 르인의 비참한 인권상황을 한국 국민에게 알린 사실이나 아르헨티나의 오일광장 어머니회를 초청하여 그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노력은 서로간의 인권문제를 공 유하고 지구촌 가족으로서의 의무인 국제적인 인권문제 에 동참하고자 하는 한국인권단체의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티벳의 독립과 인권문제는 지금 심각한 지경에 와 있 다. 95년 발간된 엠네스티의 자료에 의하면 93년과 94 년의 티벳의 인권 실태는 지난 수년보다 훨씬 악화되었 으며 특히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은 독립운동가들 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독 립운동 시위에 참석한 수감자중 몇몇은 단지 12세에 불과하며 이들 어린이들은 고문과 견디기 힘든 노동으 로 고통받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한 나라의 독립은 무 엇보다도 우선되는 문제이다. 우리 민족은 일제 36년간 의 식민통치를 겪으면서 나라없는 민족의 아픔이 얼마나 비참하며 독립이 얼마나 소중한 가를 몸으로 체험 하며 익히 알고 있다. 티벳은 중국에 의해 나라를 빼앗 긴 채 지난 수십년간을 식민통치하에서 고통받아왔으며 현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구금, 구속되어 있다. 그들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독 립운동의 명분은 강대한 중국에 의해서 점차 감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지난 시기 어느날 그에게 따뜻한 아침식사를 가져 다준 엠네스티 회원들의 편지 한통 한통의 관심처럼 다시 한번 한국의 인권단체를 비롯한 세계인의 관심이 주어져 야할 때다. 노승려는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이 못내 아쉬운 듯 이번의 여행길도 조국의 인권실태를 알리고 이를 국제 적으로 호소하기 위한 걸음이라고 새삼 강조한다.

<이달의 주제- 사회권>
가맹국은 누구나 상당한 생 활수준을 유지하고, 또한 부단히 생활조건을 향상시 킨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조약 제11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광주학살 책임자 '기소촉구' 운동 펼쳐

광주민중항쟁 15주년 앞두고 진상규명 요구도

광주민중항쟁 15주년을 앞두고 전국에서 학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 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의 5.18민중항쟁 15돌 행사위원회는 8일 기념제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 고 학살 책임자 '기소촉구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

언문에서 위원회는 "광주문 제 해결은 오직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명예회복·피 해배상·기념사업이란 원칙 아래 이뤄져야 한다"면서 "학살자들을 즉각 기소하 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정부에 대해 "진 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뱉

날 역사에 맡기자는 (93년) 5.13담화는 광주의 이름을 빌어 문민이라는 탈을 구하 려는 행위라며 원칙에 따라 광주문제를 해결해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의 정기를 끝 게 세우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5월 한달동안 학살책임자 기소촉구와 책

임자 처벌을 위한 1천인 선 언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5·18 진상규명과 광주 항쟁정신계승국민위원회'(공동대표 김상근등 12명, 국민위원회)는 8일 오전 12 시 명동성당 주변에서 광주 학살 책임자의 기소촉구와 처벌을 요구하며 거리홍보 전을 가졌다. 국민위원회는 오는 13일(토) 오후2시, 장 충단공원과 광주에서 '5.18 민중항쟁 15주년 기념 및 학살책임자 기소촉구 국민 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민주주의민족통일 부천연합」(상임의장 김명 원, 부천연합)은 8일부터 '광주책임자 기소촉구 부천 시민 1천9백80명 선언운동' 을 펼치고 있다. 부천연합 은 선언운동 취지서에서 "나치전범을 지금도 처벌하 고 있는 유럽등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학살의 책임자를 범정에 세울 때 민족정기가 바로 선다"고 밝혔다. 부천연합 정책위원 장 유홍(36)씨는 "광주학살 이 일어난 1980년은 기억하 자는 의미에서 부천시민 1980명을 모아 선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천연합 은 선언운동의 결과를 5월 하순 지역신문에 게재하기 로 했다.

'이랜드 신화'에 가려진 노조탄압

-이랜드그룹 부당하고 노동자 항의농성 43일째-

이랜드그룹(사장 박성수) 이 3월23일 직영점인 진로 라파밀리아에서 일하던 김 은주, 조은주씨와 노조사무 국장 박재석씨를 해고하고 류정무씨를 감봉처리하였 다. 이랜드 노동조합(위원 장 신진식)은 이를 부당해 고로 규정하고 43일째 노조 사무실에서 철야농성을 하 고 있다.

회사측은 김씨등이 외상 거래를 했다는 해고사유를 들고 있지만 노조측은 이는 극적인 노조활동을 했던 것 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는 의혹이 짙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진로라파 밀리아 지점장 이태수씨는 94년 11월 조합원들의 총회 참석을 방해하고 12월 조합 간부 김용필씨를 폭행했다 고 한다. 이에 노조는 95년 1월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아울러 이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런 일련의 사건에 이어 회사측이 노조원들을 해고, 감봉한

것이다. 부위원장 홍윤경씨는 "최 근 회사가 강행하는 보복조 치는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홍씨는 "94년 1월 29일 10중에 걸친 '조합활동에 관한 임시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단체협상을 체결하기 로 했으나 회사는 1년6개월 이 넘도록 옹호하지 않아 단 체협상을 체결하지 못했다" 고 밝혔다.

회사는 93년 10월 노조가 만들어진 이후 조합원들을 해외연수에서 제외시키는 등 많은 불이익을 주고 있 어 출범당시 7백여명이었던 조합원은 3백여명으로 줄어 들기도 했다. 최근에는 사 규에 징계규정을 강화하여 불법집회 참가나 홍보물 배 포, 게시판 부착도 징계와 해고의 사유에 포함시켜 많 은 사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랜드는 '이랜드 스피릿'(ELAND Spirit)이라는 18개 기독교 성향의 경영이 념을 추구하며 매일 종교

프로그램을 갖는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이다.

홍윤경씨는 "이랜드는 신 화적인 고속성과 독특한 경영방식으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 대학생 기업 선호도 5위 안에 들지만 노 조에 대해서는 보수적이고 전근대적이다"고 말했다. 또한 홍씨는 "회사가 평소 '사랑'이라는 기독교 정신을 강조하면서도 '노조는 옳지 않다. 노조는 신앙적으로 안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이랜드 노조는 부 당하고무효소송을 제기하고 해고자 복직과 사원들의 복 지 및 임금인상을 위해 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판 안내 ●

- 5월9일(화)
 - 조홍영, 국보법 10시 서울지법 422호
 - 오세중, 국보법 11시, 서울지법 317호
 - 두밀리분교폐교철폐, 오전10시, 서울고법 413호
- 5월10일(수)
 - 감병목, 국보법 10시, 서울지법 418호
 - 노영근, 업무방해, 10시, 서울지법 422호
 - 김연환, 노동쟁의법조정위반, 10시, 서울지법 422호
 - 황인성, 국보법, 4시 서울지법 319호

노태훈씨 성공회대학 '인권과 국제인권단체' 강의

는 주요한 국제인권조약, 민간단체들의 활동, 93년 비엔나세계인권대회 참가경험 등에 관해 2시간30분 동안 얘기를 나누었다. 특히 민간단체들의 활동에 대해 "정보수집, 실태조사, 홍보, 대안제시등이 연결되는 현 상황등이 NGO의 생명"임을 거듭 강조했다.

<인터뷰> 유엔 아프가니스탄 특별보고관 백충현 교수 한국, 인권3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해야

"개인적으로 국제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대일관계와 정신대 문제 등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국제적으로 한국은 93년부터 유엔인권위원회 회원국이 되면서 수혜국의 입장에서 벗어나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은 인권 3등급에서 인권2등급으로 변해야 한다."

백충현 교수(서울대 법대)는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지난달 18일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으로 임명되었다.

△ 아프카니스탄 특별보고관으로서 해야 할 일은?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할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얘기를 듣고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아프카니스탄은 전쟁, 무기, 마약밀매 등 집단적이고 개인적인 인권침해가 심각하다. 인권침해의 악순환이 계속됨에 따라 국제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아프카니스탄은 다민족, 다종교 사회로서 소련의 지배이후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 조사이후에는 유엔인권위원회에 보고서도 제출할 것이다.

△ 한국의 인권문제도 국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거론되어야 한다. 국내적인 인권침해도 국제적인 기준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제적인 인권기준은 예방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 문민정부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는? -방향은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은? -분단의 특수성이라는 역사적 상황을 보아야 한다. 어느 편에 서기란 대단히 어렵다. 통일과정에서 우려되는 측면도 많다. 통일의 조건이 다가오면 변화될 수도 있다.

<해설>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이란?

유엔인권위원회는 70년대 초반부터 특별보고관을 임명하여 인권침해의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유엔인권위원회의 정책과 결정을 내오도록 했다. 특별보고관은 국가와 주제별로 구분된다.

'국가'의 경우 70년대 초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칠레의 인권문제를 다루었고 현재 미얀마, 쿠바, 아이티, 르완다 등 20여개 국가를 담당하는 특별보고관이 활동중에 있다. 주제의 경우 80년대 초 불법처형을 다루는 특별보고관을 시작으로 실종, 고문, 의사표현의 자유, 아동 등 다양한 주제별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임명되었다. 이번 51차 인권위에서는 소득재분배, 인권과 산업폐기물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주간/인권/흐름

(5월1일-7일)

<1일> 민주노총(준) 노동자대회에서 '노동악법 어기기'와 '사회개혁' 투쟁 전개, 10월안 민주노총 건설키로 결의/ 서울지법, 국선번호인 선정에서 생활보호대상자 확인서 제출 대신 재판부의 판단만으로 가능토록/ 일본 학자·문인 등 저명인사 71명 기자회견, "국회는 과거전쟁 사죄하는 결의 채택하라" 촉구

<2일> 'LG그룹의 도덕성회복을 촉구하는 LG소비자들, LG해고자 복지 촉구대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봉천6동 철거민 성폭력사건과 관련해 성폭력가해자 적준용역회사 책임자 처벌 촉구/ 민가협, 영등포교도소(소장 송선홍)가 4월15일부터 취해온 독거수감방 창문 봉쇄조치에 법무부 항의 방문/ 여성의 전화, 어머니 폭행 아버지를 살해한 전경진씨에 대한 구명운동 전개

<3일> '5·3동지회', '동의대총학생회' 등 5백여명, '5·3 동의대 사태 진상규명' 촉구 집회 가져/ 경기남부지역 80여개 노조, 노동단체 제3차개입 선언/ 미국 남부 앨라배마주 50여년만에 죄수에게 족쇄노역 부활/ 서울지법 형사항소 4부,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5개 조항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전중앙정보부장 김형욱씨 사건)/ 지난해 반정부적 기사 실었다는 혐의로 발매금지처분 받은 인도네시아 주간지 <템포> 승소

<4일> 5·18민중항쟁 15돌 행사위원회, 학술책임자 기소촉구운동 중심으로 15돌 행사기조 마련/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 고문피해자 문국진씨에게 국가 1억4천만원 배상판결/ 제주경찰청, 국보법상 이적단체구성, 고무찬양 혐의로 제주대 졸업생 강형택씨 등 5명 긴급구속/ 한국 최초의 유엔인권보고관 백충현(56·아프가니스탄 인권문제 특별보고관)교수 외무부 기자실서 간담회

<6일> 정부 인력수급대책 마련 위해 서머타임제,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자파견법등 적극 검토중/ 한총련 소속 대학생 4만여명 대구시에서 대구 가스폭발사고 철거수사등 요구 시위

<7일> 민주노총준비위 정부의 변형근로시간제와 근로자파견법 도입 강력저지 할 방침

해설----- 광주민중항쟁 15돌이 가까와옴에 따라 다시 그날을 기억하는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기획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광주학살의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학술 책임자의 기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나 선언이 준비되고 있다.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것은 인권을 울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지만, 올해의 행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되는 것은 또 한번의 행사로 끝내지나 않을까 하는 점이다. 5.18주간이 끝나면 곧바로 지자체 선거 정국으로 곧장 돌입한다. 언제 광주책임자를 기소하라고 했다 무섭게 지자체 선거에 매몰되는 그런 일을 올해도 또 보아야 할까?

<이달의 주제- 사회권>
가맹국은 누구나 상당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또한 부단히 생활조건을 향상시킬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조약 제11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근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일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국내 최초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방한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후사인씨, 국보법등 조사항동

국내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최초로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이 우리나라에 오고 있지만 아직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Freedom opinion of expression on special rapporteur) 아비브 후사인(Mr. Abid Hussain, 인도)은 6월 말 한국을 방문, 조사항동을 벌이게 되었다. 후사인씨는 한국정부에게 방문의사를 밝혔고 이를 외무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방한이 이루어졌다. 후사인씨는 민간단체와 정부를 만나 조사항동을 벌이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2면에 해설 기사).

보고서에서 그는 "대부분의 국가가 분명하게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의 자유는 단지 민주주의의 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안전과 평등의 전제조건으로서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작가 황석영씨의 사건이 언급되었다.

회사측의 손배소송에 노조원 공동책임으로 대응 손배소송 공대위

사법부가 노조의 정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측의 손배배상청구를 거의 인정하는 판결을 거듭 내려 노동조합의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가운데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민주노총준비위, 민주사회보안법이 국제기준에 의해 심판받을 수 있는 기회이며, 특별보고관이 이를 거론하는 것도 최초라는 점에서 반인륜적인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후사인씨는 지난 51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94년의 활동보고와 9개국의 인권상황을 개괄한 보고서(E/CN.4/1995/32)를 제출했다. 이

는 '손배소송에 의한 노조 탄압의 실태'를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씨는 손배소송에 대한 노조의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원재 변호사는 손배배상소송을 하는 사용자 대부분의 목적이 "민사소송의 형식을 빌어 노조간부들을 배제시키거나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함"에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왜곡, 산업평화를 저해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권리남용, 반사회적행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므로 손배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석운 소장은 손배소송에 대해 "노조는 조합원 모두의 공동책임, 공동대응, 공동행동을 조직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고 사회적으로는 전국민적인 사법감시운동과 자료축적, 노동법개정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동산의료원

노조간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 서울지하철, 금호타이어, 한진중공업노조 간부에 대한 대규모 손배청구소송이 제기되고, 금년 초에는 창원의 삼미특수강노조 간부에 대한 30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면서 노동쟁의로 인한 손배청구 소송이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두말리분교 폐교철회 선고 또 연기

지난 94년초부터 1년6개월을 끌어온 두말리분교 폐교철회소송 선고공판이 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시금 연기되었다. 선고공판의 연기이유에 대해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피고(경기도 교육감과 경기도의회)의 적격여부에 대해 법률심리를 더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다음 선고공판은 16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413호에서 열린다.

인 \ 권 \ 어 \ 특

○ 대구참사에도 인기 걱정하는 대통령

대구사고는 몇사람의 무책임한 짓 때문에 아까운 많은 희생자를 냈다. 정부도 공동의 피해자다. 미국에서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비난하기는커녕 오히려 인기가 올라가더라. -김영삼대통령, 5월2일 민자당 초·재선 의원 청와대 초청만찬 자리에서

<인권운동사랑방 통신 ID>
rights(하이텔, 천리안) /인권사랑(나우컴)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②>

어린이의 생명·생존·발전권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이하 조약)을 정부나 학계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라 부른다. 조약에서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자'를 가리키므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를 구성한 21개의 민간단체들은 '아동'이란 단어가 일반인에게 주는 의미의 한계를 생각하여 '어린이·청소년'이라 부르기로 했고,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협약'보다는 '조약'으로 부르기로 했음을 밝혀둔다.

조약에서 어린이의 생명·생존·발전권을 규정한 조항은 제 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

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권이란 타인에 의한 자의적 생명 박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생존을 확보하는 경제·사회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당사국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다.

우리가 권리를 말할 때는 생명이 있는 인간들 사이의 '행위'를 전제한다. 생명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므로 그 변화발전에 따르는 자유가 필수적이고, 생명을 유지·신장하기 위한 물질적·정신적 필요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더구나 인간은 그저 먹고 마시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존을 포

함하여 나름대로 삶의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산다. 여기서 인간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두 가지 권리가 생겨난다. 즉, 목적을 지닌 생명체로서 살아가기 위한 행위의 '자유권'과, 그렇게 행위하면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사회(복지)권'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약에서는 6조의 생존·발전권과 관련하여 '도달가능한 최상의 건강을 누릴 권리,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권리(24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26조)' 등과 함께 광범위한 시민권(13, 14, 15, 16조)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장황하게 자유권과 복지권을 얘기하기 전에 심하게 말해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다행인 상황이다. 얼마전의 대구가 스포발사고에서 희생된 청소년들의 예를 보듯 5-14

세의 어린이의 사망원인의 45.5%가 불의의 사고에 의한 것이며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의 37.5%가 집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은 우리의 환경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려주고 있다. 해마다 각종 마스크와 사회단체에서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벌여야만 치료받을 수 있는 어린이들이 수천명에 이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예방'의 의료정책이나 값싼 의료서비스의 혜택과의 간격을 보여주는 증거는 아닌가?

아이들에게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얼마나 허망한가? 귀가 후에 양치질을 하면 병이 예방된다고만 가르치면 아이들은 건강할 것인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은 언제쯤 가르칠 것인가를 묻고 싶다.

<해설>

유엔인권위 활동의 꽃-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최근 국내에서 유엔의 인권관련 특별보고관에 대한 관심이 급속하게 높아졌다. 최근까지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이 용어는 지난 달 백충현 서울대법대교수가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아프리카니스탄의 인권에 관한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되면서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게다가 정신대 문제와 관련하여 이번 달 중순 방한 예정인 여성폭력(Violence against women)에 관한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아라수아미(스리랑카)여사와 6월 말로 예정된 '의사표현의 자유'(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브 후사인(Mr. Abib Hussain)씨의 방한으로 인해 국내의 특별보고관을 비롯한 유엔의 인권기구와 제도에 대한 관심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보고관제도는 유엔의 인권기구가 특정 인권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인권전문가를 임명해 조사를 통한 결과를 보고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른바 유엔인권위 활동의 '꽃'이라도 불리우는 이 제도는 주제별(Thematic)·나라별(Country) 특별보고관으로 구분되는데 양자 모두 유엔인권위 활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내용은 유엔 인권위가 해당 문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척도와 기준이기 때문에 각국의 정부는 그 내용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한다. 민간인권단체의 경우는 인권침해 현실이 왜곡없이 반영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 제도는 70년대 초 남아공과 칠레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특별보고관을 임명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숫자가 점점 늘어나 자의적 구금과 고문 등 10여개의 주제별,

그리고 르완다와 버마 등 13개국에 대한 특별 보고관이 활동해왔다.

한편 나라별 특별보고관의 임기는 보통 1년인데 반해 주제별 특별보고관은 3년이며 보통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임되는 것이 관례이다. 올해 열린 51차 인권위에서는 부룬디(Burundi)와 '소득분배(Income Distribution)' 및 '독성폐기물(Toxic Waste)'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새로 임명된 바 있어 특별보고관의 활동 범위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인권하루소식> 3월18일(제364호)자 참조).

한때 특별보고관제도가 명분에 비해 실질적인 인권문제 개선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작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각각 '인종차별', '종교적 불관용',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초청하면서 특별보고관의 역할과 권위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폭력에 대한 특별보고관이 이번달 일본과 남·북한을 방문함에 따라 이들 모두는 처음으로 유엔의 특별보고관을 맡아들이는 셈이 된다.

참고로 한국의 인권문제는 이번 51차 인권위에서 '의사표현의 자유'(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이외에도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Working Group)의 보고서에 언급되어 앞으로 이와 관련된 유엔 인권담당자의 방문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의 주제- 사회권>

가맹국은 누구나 상당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또한 부단히 생활조건을 향상시킬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조약 제11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균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팩스) 715-9186

철거폭력 회사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봉천동 성폭력 적준개발, 16개 지역에서 철거 용역 맡아

지난 4월25일 봉천동 철거지역에서 주부에 대한 성폭행을 저질러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주)적준개발(대표이사 정숙중)은 현재 서울의 16개지역에서 철거 용역을 맡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적준개발은 봉천동 뿐만 아니라 고공철탑 농성중 박균백씨가 분신한 금호6구역, 돈암동, 도화동, 신정동 등 그동안 철거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의 철거를 도맡아왔다. 그런 과정에서 시공사들과 재개발조합측으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획득하고 있어 올해부터는 상계동과 중계동의 철거까지 맡게 되었다.

한 지역 철거에 20억

보통 이들이 재개발조합측으로부터 철거용역을 맡게 되며 한건당 20억원 전후의 금액에 계약을 체결하는데, 철거하는 가옥수와 면적에 따라서 계약금액은 차이가 있다. 돈암동지역에서 적준개발은 무려 22억8천만원에 철거용역을 맡은 것으로 확인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적준개발은 현재 16개 철거지역에 팀장과 반장만 총 75명을 배치해놓고 있으며, 유사시에는 동원능력이 5백에서 2천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철거민연합'(의장 남

경남)에 의하면, 철거에 동원되는 이들은 주로 강태들로 폭력전과자나 특수부대 출신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이들은 주로 라인이라고 하는 조직폭력배들의 은밀한 선을 타고 모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모자라는 인원은 소규모 인력업체를 통해서 공급받게 된다고 한다. 이들의 일당은 보통 50만원 선으로 알려져 있지만, 철거 당시의 주민의 저항 정도에 따라서 시간당 50만원 이상도 지급되고 있다고 한다.

철거민의 인권은 어디로

철거시 마지막까지 남게 되는 사람들은 주로 세입자들인데, 이들은 가수용 단지의 설치등을 요구하지만, 가옥주들로 구성된 재개발조합측으로부터 무시당하기 일쑤다. 회유와 협박으로도 떠나지 않는 세입자들을 몰아내기 위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폭력방식이 동원된다. 철거강태들은 쇠파이프와 각목등으로 무장하고, 심지어는 어린이와 노인까지 안하무인으로 구타를 자행하고 순식간에 동내는 아수라장이 되고 만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철거민들도 무장을 하고 대항하지만, 거의 힘에 밀리게 된다고 한다. 양해동(41, 서울철거민연합 의장)씨는 "철거투쟁의 승리율이 1%도 안된

니다. 이번엔 봉천동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성폭력은 사실 철거지역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노인들도 죽도록 얻어터지기 일쑤인데요. 피해를 본 사람들이 쉬쉬하니까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철거민에게 주거권이니, 인권이니 하는 건 너무 요원한 얘깁니다."

경찰은 누구 편인가?

더욱이 철거반원들을 폭력으로 내모는데는 철거 지역 비용을 철거용역업체가 배상하게 되는 계약조건이 한몫 한다. 돈암동 지역의 재개발조합과 적준개발이 계약을 맺을 때도 "8개월 이내에 용역업체로서의 책임을 완수하고 만약에 완수치 못할 경우 벌칙금을 1일

당 총금액의 천분의 일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철거전문회사들이 주민들을 폭력으로 내모는 동안 아무리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경찰은 수수방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을 구속하고는 해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번 봉천동 철거지역에서는 성폭력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담당 관악경찰서(서장 김동걸)는 적준개발 관계자 4명을 소환하더니 바로 그 다음날 훈방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철거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등 재야단체들은 봉천동 지역의 성폭력 사태를 맞아 공동대책본부의 결성을 서두르고 있다. 이들은 철거용역회사의 해체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고발과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오늘 <인권하루소식> 400호 돌파

<인권하루소식>이 93년 9월7일 첫호를 내보낸지 벌써 1년8개월, 지령 400호에 달했습니다.

<인권하루소식>은 그동안 인권의 감시자 역할과 인권의 나팔수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장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애정으로 <인권하루소식>을 격려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지면으로나마 감사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격려에 힘입어 보다 나은 <인권하루소식>을 만들기 위해 진력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보다 신속하고 용기있는 고발을 통해 인권의 침해가 사라지는 날을 앞당기도록 분투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일동-

301호부터 400호까지 묶고 국가보안법 주요 판례를 자료로 첨부한 <인권하루소식> 합본4호가 5월30일 발행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통신 ID>

rights(하이텔, 천리안) / 인권사랑(나우컴)

● 국제인권소식 ●

태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행사 열려

태국의 '92년 5월 민주화 운동희생자가족위원회'(The Relatives of Heroes in May 1992 Democratic Movement)는 라지담네르 피의 5월학살(Bloody May Massacre on Rajdamnern, 1992)의 희생자를 기념하기 위해 14일-20일까지 국제적인 추모집회와 워크샵을 갖는다.

희생자가족위원회는 동티모르, 필리핀, 미얀마, 타이완, 아르헨티나 등에서 인권운동가를 초청하여 각국의 민주화 운동 사례와 경험을 서로 나누고 전시회, 영화상영, 추모식, 워크샵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라지담네르 피의 5월학살은 92년 태국군부 정권 압제에 항거해 민주주의와 정의를 요구하며 투쟁하다 1백여명의 국민들이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스리랑카 협상촉구 국제인권단체

최근 스리랑카 북부지역에서 정부와 타밀반란군(타밀엘람해방호랑이, LTTE) 사이에 일어난 전투로 민간인과 군인등 77명이 죽은 사건과 관련해 인권단체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성, 법, 개발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포럼」(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은 4월 28일 전세계 인권단체에게 스리랑카 대통령과 타밀반란군 지도자가 종전협상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편지를 보낼 것을 촉구했

다. 스리랑카 정부는 독립을 요구하는 2백50만명의 타밀 소수족과 지난 83년부터 내전을 계속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군인, 민간인등 3만4천여명 이상이 죽었고 산업 시설이 파괴되는 등 물적 피해를 입었다.
<편지보낼 곳>
Her Excellency
President Coandrika
Kumenararanga
Presidential Secretariat
Colombo 1
Sri Lanka

V. Prabhakaran
LTTE
c/o ICRC
Colombo 5
Sri Lanka

김무용씨 재조사 촉구 프랑스, ARTICLE 19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국제적인 인권단체 「아티클 나인틴」(ARTICLE 19)은 4월24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어 김무용(34,방통대 역사학 강사)씨 연행에 항의하고 재조사를 촉구했다. (ARTICLE 19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CCPR)' 19조에 규정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계된 문제를 다루는 유엔경제사회 이사회의 협의자격을 갖춘 국제민간단체이다)

아티클나인틴은 "자유로운 사회는 학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이는 논쟁거리가 되는 학문적인 연구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는 한국이 91년 비준한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CCPR) 19조(표현의 자유)와 서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시민·정치적 권

리를 90년에 비준한 한국정부의 책무와 국가보안법이 서로 양립할 수 있는지를 광범위하게 조사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용씨는 3월 23일 '한국현대사와 빨치산의 활동'이란 제목의 글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구속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또한 김씨는 10일 재판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2년을 구형 받았다. 선고공판은 5월 30일 10시다.

외국인노동자에게 인도적인 대우 요청 일본, 외국인 119네트워크

일본의 「외국인 119네트워크」, 「가나가와시티유니온」등 19개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은 10일 외국인노동자문제에 대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요청서를 보냈다.

이들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노동자들은 인도적·도덕적으로 인간다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한국정부는 지난 1월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 △농성을 해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외국인연수생 제도개선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 △지난 3월20일 강제추방된 네팔인 연수생 이반버가사이씨에 대하여 공개사과할 것 △연수생에 대한 노동기준법 적용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연수생에 대한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때까지 한국정부에 항의방문, 항의서한 전달등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 수배자 검거령 비난 민주노총 준비위

지난 8일 대검 공안부가 권영길씨등 노동계 9명에 내린 특별검거령에 대해 「전국민주노총준비위원회」(

공동대표 권영길등 3명, 민주노총(준)은 9일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준)은 "검찰이 구체적 증거 제시없이 민주노총 준비위가 올해 임투를 지자제선거와 연계시킬 움직임에 보인다면 기존 수배자에 대한 특별검거령을 내린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즉각적인 수배 해제와 제3자개입금지조항을 비롯한 노동악법 개정을 요구했다.

특별검거령이 내린 9명은 이미 제3자 개입 및 불법노조 결성등의 혐의로 사전영장이 발부돼 검찰의 수배를 받아왔다.

수배자 명단: △권영길(민주노총 준비위 공동대표) △양규현(·) △단병호(전 노협 전위원장) △이상현(·쟁의국장) △이수원(현 총련 전사무차장) △임성규(전지협 정책기획실장) △구장희(현대중공업노조 기획실장) △박철모(·편집실장) △김석문(·대의원)

피터슨 목사 증언 예정 전국연합 집회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10일 광주항쟁 15주년을 맞아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사법부가 광주항쟁에 대한 공소시효를 8월16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학살 책임자에 대해서는 시효와 관계없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불행한 역사의 악순환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연합의 주최로 13일 열릴 「5.18 민주항쟁 15주년 기념 및 학살책임자 기소촉구 국민대회」에서 80년 당시 군 헬기가 광주시민들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했다는 일지와 사진등의 자료를 공개한 피터슨목사가 현장증언을 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끌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합본 IV 색인

(제301호 - 제400호)